

2005년부터  
각종 제도와 법규,  
이렇게 달라집니다

2005. 1.

대한민국정부

이번 『2005년부터 각종제도와 법규, 이렇게 달라집니다』에는  
2004년 12월 현재 관계법 제·개정 등 아직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항(★로 표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目 次 >

### I. 변경되는 주요이슈

#### 1. 경 제 일 반

-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 12
- (2) 기금 자산운용체제 개편(★) / 12
- (3) 민간투자제도 개선(★) / 13
- (4) 수요기관 등록업무의 원스톱 처리 / 14
- (5) 비축원자재 원클릭 서비스 실시 / 14
- (6) 비축사업 지급보증 제도 개선 시행 / 15
- (7)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시행 / 15

#### 2. 세 제

- (8)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쿠폰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 16
- (9)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인상 및 적용기준 변경 / 16
- (10) 기업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율 조정 및 대상거래 확대 / 17
- (11) 화물운송망 이용 운송용역비 세액공제 / 17
- (12) 물류산업종사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 17
- (13) 장기저당담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 18

- (14) 투기지역내 공공수용 토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 과세 / 18
- (15) 종합부동산세 도입(★) / 19
- (16) 조세피난처 결정기준 변경 / 19
- (17) 기업의 관세부담을 1조 1천억원 경감 / 20
- (18) 관세 월별납부 시기 조정 / 21
- (19) 국제우편물관련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간소화 / 21
- (20) 현금영수증 제도 실시 / 21

#### 3. 공 정 거 래

- (21) 카르텔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 상향조정 / 22
- (22)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선 / 23
- (23) 국외에서 이루어진 외국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도 우리 공정거래법 적용 / 23
- (24) 대기업집단소속 비상장·비등록 기업의 공시의무 강화 / 24
- (25) 지주회사제도 보완 / 24
- (26)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 25
- (27) 계열금융사의 의결권 행사한도 단계적 축소 / 26
- (28)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재도입 / 27
- (29)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제도 개선 / 27
- (30) 법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 / 28

#### 4. 과학기술 · 산업 · 에너지

- (3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 29
- (32) 국가연구개발사업 주기적 평가제도 도입 및 시범 실시 / 30
- (33) 신 ·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 30
- (34) 대 · 중소 협력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 31
- (35) 전자문서 이용확대 / 31
- (36) 어린이 보호포장 신설 / 32
- (37) 24시간 365일 전자출원서비스 지원 / 33
- (38) PCT 온라인 시스템 개통 / 33
- (39) 재택근무 도입 / 34
- (40)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특별통관절차 마련 · 시행 / 34
- (41) 중소기업 보호제도 개편 및 대 · 중소기업 협력 지원 / 35
- (42) 재래시장의 종합적 · 체계적 육성 / 35
- (43)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확대 / 36
- (44) 중소기업 기술혁신 분위기 확산 / 36

#### 5. 농림 · 어업

- (45) 국가재보험제도 도입(★) / 37
- (46) 농업협동조합 관련 제도 개선 / 37
- (47)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 개선 / 38
- (48) 농지소유제도 개선 / 39
- (49) 농지이용제도 개선 / 39

- (50) 농지전용 및 농지조성비제도 개선(★) / 40
- (51) 친환경농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 40
- (52) 농기계 안전검정제 도입(★) / 41
- (53) 농산물자조금제도의 자율권 확대 및 사업구조기능 강화 / 41
- (54)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신청 On-line 전산화 / 42
- (55)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지원내용 개선 / 42
- (56) 인삼검사 신청기한 조정 / 43
- (57) 소 부루세라병 방역 강화를 위한 검사증명서 휴대대상 확대 및 위반자 규제 강화 / 43
- (58)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율 확대 / 44
- (59)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절차 간소화 / 44
- (60)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추진 / 45
- (61)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 및 조합경영의 투명성 제고 / 45
- (62) 숲가꾸기 현장토론회 및 공공산림정비 숲가꾸기 추진 / 46
- (63) 품질인증 절차 일원화 및 임산물 안전성 강화 / 46
- (64)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및 지역주민 소득사업 지원 / 47
- (65) 테마별 산림피해 중점단속 강화 / 47
- (66) 대형산불 방지를 위한 진화능력 향상 / 48
- (67) 사방지 식재수종 변경 및 해안 방풍림 조성 / 48
- (68)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강화 / 49
- (69)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권익보호 강화 / 49
- (70) 육상양식(종묘생산) 어업 허가제로 전환 / 50

## 6. 정보·통신

- (71)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제도 시행 / 50
- (72) 전화·모사전송을 통한 광고 발송시 수신자의 사전 동의 의무화 / 51
- (73)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확대 시행 / 51
- (74) 인터넷전화서비스 시장 출시 / 51

## 7. 의료·복지

- (75) 사회안전망 강화 / 52
- (76) 고령화사회에 대비 / 53
- (77) 생명윤리 및 안전 보장 / 54

## 8. 환 경

- (78)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실시 / 55
- (79) 저공해자동차 보급 및 구매 의무화 / 56
- (80)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및 보호지역내 행위제한 / 56
- (81)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금강, 영산강수계까지 확대 시행 / 57
- (82) 밀렵된 야생동물을 먹는 자도 처벌 / 57
- (83) 대규모 국책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실시 / 58

## 9. 건설·교통

- (84) 분양가상한제 및 택지채권입찰제 도입 / 58

- (85) 기업도시 개발 제도의 시행 / 59

- (86) 철도청, 2005년부터 한국철도공사로 전환 / 59

## 10. 교육·문화·여성

- (8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 60
- (88) 주5일수업제 월1회 실시 / 60
- (89) EBS 수능강의 질 개선 대책 지속 추진 / 61
- (90) 도서정가제 허용범위 축소 / 61
- (91)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 62
- (92) 보육시설 설치기준 강화 / 63

## 11. 행정·법무

- (93)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전면시행 / 63
- (94) 국민의 정보공개청구 편의를 위하여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의무화 / 64
- (95) 시·군·구청에서도 인감증명 발급가능 / 64
- (96) 인감증명발급사실확인시스템 운영 / 64
- (97)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추진 / 65
- (98)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시행 / 65
- (99)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시행 / 66
- (100) 국민의 배우자에 대한 재입국 허가 제도 개선 / 66

## 12. 국방·병무

- (101) 박사과정 이수자 소위임용 최고연령 상향조정 / 67
- (102) 장병 RH(-) 혈액형 보유자 특별관리제도 실시 / 67
- (103) 군 위성 TV 방송 실시 / 67
- (104) 국립묘지 안장대상 확대 및 안장 승인절차 간소화 / 67
- (105) 고등학교 중퇴, 중졸 학력자 현역병 입영 / 68
- (106)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 선택제 확대시행 / 68
- (107) 국가보훈기본법 제정 / 69
- (108) 독립유공자 발굴·포상확대 / 69
- (109) 보훈중앙병원 건립 / 70
- (110) 국가유공자 대부지원 확대 / 71

## 13. 기 타

- (11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제도개선 / 72
- (112) 「개성공업지구방문및협력사업승인절차」 간소화 / 73

## Ⅱ. 부처별 신·구제도와 법규 대비표

1. 재정경제부 / 76

■ 국세청 / 92

■ 관세청 / 93

■ 조달청 / 94

2. 기획예산처 / 97

3. 공정거래위원회 / 99

4. 금융감독위원회 / 104

5. 교육인적자원부 / 105

6. 법무부 / 109

7. 행정자치부 / 111

8. 과학기술부 / 114

9. 농림부 / 116

■ 농촌진흥청 / 126

■ 산림청 / 127

10. 산업자원부 / 133

■ 중소기업청 / 140

■ 특허청 / 147

11. 정보통신부 / 150

12. 보건복지부 / 152

13. 환경부 / 159

14. 노동부 / 168

15. 건설교통부 / 171

16. 국방부 / 174

■ 병무청 / 176

17. 통일부 / 178

18. 해양수산부 / 179

19. 문화관광부 / 184

20. 여성부 / 186

21. 국가보훈처 / 189

변경되는 주요이슈



## 1. 경 제 일 반

###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기획예산처 균형발전재정총괄과 (02-3480-7011)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였습니다.

- 그 동안 소관 부처별로 다수의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를 통해 분산 추진하고 있던 균형발전 관련 사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
- 예산을 일괄하여 패키지로 지원하고, 지역이 자체 우선 순위에 따라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중복투자를 줄이고 투자효율을 제고

▶▶ 균특회계는 지역개발계정과 지역혁신계정으로 구성됩니다.

- 지역개발계정은 낙후지역 개발사업과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SOC 건설 및 재해예방 사업 지원
- 지역혁신계정은 지방주도의 혁신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지역 전략산업과 지역 인적자원개발 사업(지방대학육성 등) 지원

▶▶ 균특회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등 낙후지역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전략산업과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 지역의 혁신역량을 배양하여 '자립형 지방화'의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 (2) 기금 자산운용체제 개편(★)

기획예산처 금융기금과 (02-3480-7967)

▶▶ 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가 허용됩니다.

- 기금관리기본법상의 주식·부동산 투자 원칙 금지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전체 57개 기금 중 개별 기금법 상 투자가 금지되어 있는 14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

▶▶ 기금 자산운용의 독립성·투명성·전문성·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여유자금 규모가 1조원을 초과하는 주요 기금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자산운용위원회 설치 의무화
- 주요기금에 대해 자산운용 및 위험관리 등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의무화
- 자산운용지침, 자산운용성과, 의결권 행사 결과 등에 대한 공시 강화
- 자산운용담당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고 부당하게 개입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처벌

### (3) 민간투자제도 개선(★)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제도과 (02-3480-5141)

▶▶ 교육·복지·문화시설 분야에도 민간투자의 문호가 열립니다.

- 현행 민간투자 대상시설은 도로·항만·지하철 등 산업기반시설 위주였으나, 교육·복지·문화시설 등 생활기반시설까지 확대(35→44개)

\* 학교시설·아동보육시설·자연휴양림·문화시설·군주거시설·공공임대주택·노인요양시설·보건의료시설·수목원 추가

- 민간투자 대상범위의 확대로 민자사업 활성화 기대

\* 교육·복지 등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투자확충이 이루어져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 기대  
\* 민간의 창의와 경영기법이 도입되어 아직 국민 기대수준에 미흡한 교육·복지 분야의 서비스의 질 제고 기대

▶▶ 개별사업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시행방식이 인정됩니다.

- 민간사업자는 주로 자금투자·건설을 담당하고 주무관청이 시설 운영을 담당하는 'BTL(Build-Transfer-Lease) : 건설-이전-임대' 방식 명문화

\* 민간사업자가 직접 시설을 운영하기 곤란하거나 운영수입으로 투자비 회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사업분야에 적합  
\* 민간투자비는 20~30년간에 걸쳐 정부의 시설임대료, 부대사업수익 등으로 회수

\* 사업제한 남발 우려, 재정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정부고시사업에 한정

- 학교시설·복지시설·기간철도 등 자발적인 민간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분야에도 민간투자 유치 기대

\* 운영위험이 경감되고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BTL방식은 보험사·은행·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에게 장기 투자처 역할 기대

▶▶ 민자사업에 간접투자할 수 있는 채널이 크게 확충됩니다.

- 민자사업에 투·융자하는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이하 '인프라펀드')'의 특성에 맞게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대한 특례조항을 민간투자법에 규정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규정                    | 민간투자법 개정안 규정                        |
|----------------------------------|-------------------------------------|
| • 동일종목의 10%, 동일종목에 펀드자산 10% 투자한도 | • 동일종목의 100%, 동일종목에 펀드자산의 100% 투자가능 |
| • 환매금지형 / 허용형                    | • 환매금지형                             |
| • 의결권 제한                         | • 의결권 부여                            |
| • 차입금 제한                         | • 자본금의 30%까지 허용                     |
| • 신주발행 제한                        | • 신주발행 허용                           |
| • 자산운용사 최소자본금 100억원              | • 자산운용사 최소자본금 30억원                  |
| • 금감위의 등록 설립                     | • 등록 전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                  |

\* 공모방식의 인프라펀드의 주식상장을 의무화하여 펀드 출자금의 환금성 확보

- 기업이 인프라펀드에 투자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지분규제 적용 배제
  -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의무 이행사항 중 자회사에 대한 최소지분율 보유규정(상장사 30%, 비상장사 50%) 적용 배제
- ▶ 인프라펀드를 통해 시중의 풍부한 여유자금이 장기 생산적 자금으로 투자됨으로써 투자자는 장기적으로 안정된 투자처를 찾고 사회기반 시설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 재무적 투자자의 민자참여 확대로 사업제안 경쟁촉진 등 민자사업의 효율제고 기대

#### (4) 수요기관 등록업무의 원스톱 처리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 수요기관 등록 및 공인인증서 승인 신청 업무를 2005년 1월부터는 정부조달콜센터에서 전담합니다.
  - 각 지방조달청에서 지역별로 담당하던 수요기관 등록 및 공인인증서 신청 업무를 정부조달콜센터에서 전담하여 원스톱으로 처리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서비스 제공 가능
  - 정부조달콜센터의 고객관계관리시스템(CRM)을 활용한 일괄적인 업무처리, 수요기관 데이터의 효과적인 관리로 고객 의견의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해지는 고품격 서비스 제공 가능
  - 수요기관 등록 또는 공인인증서 승인 신청을 원하는 고객은 나라장터(G2B)의 이용자등록 작업화면에서 '승인지청'란에 「본청」을 선택한 후 전송하면 됨

#### (5) 비축원자재 원클릭 서비스 실시

조달청 원자재비축계획담당관실 (042-481-7194)

- ▶ 비축원자재 구입신청에서 대금납부, 물자인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조달청을 방문하지 않고 손가락만 움직이면 해결되는 원클릭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조달청 및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고 신속하게 비축원자재 구매신청 가능
    - \* 이용업체는 공인인증기관에서 인증서를 발급 받아 이용자 등록 후 사용
    - \* 신청 후 대금납부 또는 보증서 제출 완료시 비축원자재 배정통지서를 전자적으로 송부
    - \* 외상판매시 요구되는 지급보증을 전자접수 및 반환
  - 물자구입대금 납부는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 가능
    - \* 업체들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을 활용, 거래 은행과 인터넷뱅킹을 활용하여 납부
  - 고객 희망시 고객의 창고까지 문전배달 서비스 제공
  - 원클릭 서비스 전용 전자인증서비스 제공 및 원클릭 서비스 이용시 0.5% 염가 판매
- ▶ 원클릭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고객의 편익을 제고하고, 연간 약 50억원 상당의 고객부담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

## (6) 비축사업 지급보증 제도 개선 시행

조달청 원자재비축계획담당관실 (042-481-7194)

▶ 보증기간과 보증한도를 사전에 설정하고, 그 기간과 한도 내에서 수시 외상으로 비축원자재를 구입하고 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한도가 부활되도록 하는 포괄적(한도) 지급보증제도를 신규로 도입하여 시행합니다.

### • 업무처리 절차

- ① 한도 지급보증으로 비축물자거래를 원하는 업체는 비축물자 외상한도거래 신청(업체 → 조달청)
- ② 조달청(본청 및 해당지방조달청)은 '비축물자 외상한도거래 약정' 체결
- ③ 업체는 동 약정서를 보증기관에 제출하고 한도 지급보증을 발급받아 비축물자배정신청서와 함께 조달청에 제출
- ④ 조달청은 비축물자배정통지서 발급 및 물품인도
- ⑤ 업체는 납기 내에 외상대금 납부
- ⑥ 조달청은 보증잔액 한도 내에서 업체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비축 물자 배정통지서 발급 및 물품인도

• 비축원자재 이용업체가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던 종이 지급 보증서를 보증기관과 전자적으로 처리함

▶ 한도 지급보증제도를 도입·시행함으로써 비축물자 이용업체의 방문횟수가 단축되므로 편익이 제고되고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보증기관 및 조달청 방문으로 인한 인력 및 비용절감

- 비축물자를 필요한 시기에 수시로 인수함으로써 이자부담과 원자재 보관을 위한 창고보관료 절감

## (7)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시행

조달청 구매제도과 (042-481-7212)

▶ 종전 국가계약법에 의하면 '저가위주의 단일업체'가 선정되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이용자가 선호하는 물품을 선택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새로이 시행되는 '다수공급자계약제도'는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의 물품선택권을 보장하고, 조달물자의 다양화 및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 납품실적, 재무상태를 평가하여 적격성을 통과한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 체결
- 수요기관은 조달청에서 계약 체결한 성능 등이 유사한 물품 중에서 원하는 제품 선택 가능
- 다량납품요구액 이상을 납품요구시 할인을 적용
- 성능이 향상된 제품으로 대체공급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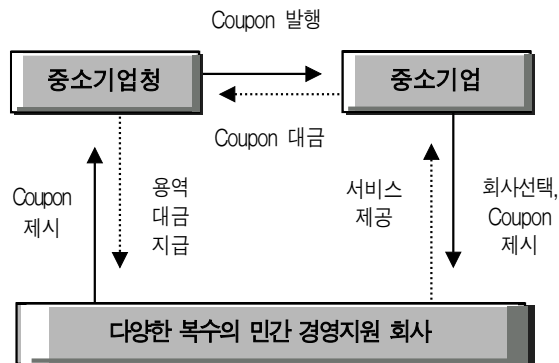
## 2. 세 제

### (8)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쿠폰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02-2110-2152)

- ▶ 중소기업청이 발행한 경영컨설팅쿠폰(Coupon)을 중소기업이 구매하는 경우 당해 구매금액의 7%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 '경영컨설팅쿠폰제도'란 중소기업청이 경영컨설팅쿠폰(Coupon)을 중소기업에게 저가에 판매(정부예산지원)하고 이 쿠폰을 구매한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경쟁력있는 컨설팅회사,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민간 경영컨설팅회사를 선택하여 회계·법률·재무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 < 경영지원 쿠폰 운영방안 >



### (9)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인상 및 적용기준 변경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02-2110-2152)

- ▶ 소기업(소상공인)이 내수침체 및 경기회복의 지연으로 인해 경영 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을 2배(5~15% → 10~30%)로 인상합니다.
- 현행 소기업의 감면율을 다음과 같이 인상
  - \* 지방 소기업 : 15% → 30%
  - \* 수도권 소기업 : 10% → 20%
  - \* 도·소매업, 의료업 등 : 5% → 10%
- ▶ 또한, 감면율 적용기준을 현행 본점소재지 기준에서 본점과 사업장 소재지를 동시에 고려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10) 기업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율 조정 및 대상거래 확대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02-2110-2152)

- ▶ 2003년 이후 현금성결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현재 현금성결제 수단의 결제기간이 31~60일인 경우가 40% 이상인 현실을 감안하여 현금성결제기간을 60일로 연장하고 공제율을 차등화\*하였습니다.

\* 30일내 결제액 : 0.3%, 31일 ~ 60일 결제액 : 0.15%

- 결제기간을 60일로 연장한 것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상 현금성결제 범위를 결제기간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하도급대금의 평균 현금성결제 기간이 31~60일인 경우의 비율이 가장 높은 점을 감안한 것임
- 공제율을 이원화한 것은 30일내 결제금액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기존의 30일내 결제를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30일 초과결제분의 결제기간을 앞당기기 위한 것임

- ▶ 기업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거래에 구매론 및 네트워크론을 추가 하였습니다.

- 금융기관이 납품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이 만기일에 대출금을 미상환하더라도 납품기업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없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연쇄부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 제기능이 현재 세액공제가 가능한 기업구매전용카드 등과 동일

## (11) 화물운송망 이용 운송용역비 세액공제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02-2110-2152)

- ▶ 화물운송 거래단계 축소를 통한 물류비 절감 및 투명한 화물운송거래 촉진을 위해 화주가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용역을 구매시 운송용역비의 0.3%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토록 하였습니다.

\* 화물정보망 : 건교부장관으로부터 화물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운용하는 화물운송전산망을 말함

- ▶ ‘화물운송가맹사업’이란 다단계 화물운송거래단계를 축소하여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물류업체의 대형화·효율화를 통해 화물운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구축한 공동전산망을 이용하여 물량 배정 여부·공차위치의 확인 및 운임지급 등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 (12) 물류산업종사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02-503-9215)

- ▶ 봉급생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해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연간 240만원을 한도(일용근로자 및 광산근로자는 전액)로 비과세 하여 왔습니다.

- ① 공장·광산의 생산 및 관련 종사자
- ②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
- ③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 2005년부터는 물품배달원, 수하물 운반원 등 물류관련 현장근로자에게도 상근근로자와 같이 연장시간근로 수당 등에 대하여 비과세 하도록 하였습니다.

### (13) 장기저당담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02-2110-2178)

▶ 현재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는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처분한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며, 서울·과천·5대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 대하여는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대하여만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자녀와 합가함에 따라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합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양도를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연로자(60세 이상)로서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장기저당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 장기저당담보 요건 : 10년 이상 장기수령, 연금식(매월, 분기별) 수령, 만기시 담보주택 처분 상황

- 서울·과천·5대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 적용시 2년 이상 거주요건 제외
- 장기저당담보로 제공된 주택은 자녀주택과 분리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여 합가 후 2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여도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

▶ 이는 고령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노년기의 생활안정을 세제면에서 뒷받침하고 노부모 합가에 따른 1세대 2주택 주택수 계산의 특례를 인정하여 노부모 봉양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 (14) 투기지역내 공공수용 토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 과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02-2110-2178)

▶ 현재는 투기지역 내 부동산 양도시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공공수용의 경우에도 보상가액 등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나

- 앞으로 투기지역 내 공공수용시(협의매수 포함) 당해 개발사업의 예정지구 지정일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실거래가 대신에 기준시가로 과세되도록 조치

▶ 다만, 예정지구 지정일이 사업인정 고시일 2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인정 2년 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투기지역 지정 후



예정지구 지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투기지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대하여만 적용합니다.

- ▶ 공공수용시 실거래가 과세는 원활한 공공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0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 ▶ 2005년 1월 1일 이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2004년에 공공수용된 토지에 대하여도 2005년 5월 1일~5월 31일의 기간 중에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15) 종합부동산세 도입(★)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 (02-2110-2187)

- ▶ 내년부터 부동산 보유세제가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됩니다.
- 1차적으로 시·군·구에서는 관내 부동산에 대하여 낮은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적으로 국가에서는 인별 소유부동산가액이 일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높은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
- 종합부동산세(국세) 과세대상 기준금액은 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 나대지는 공시지가 6억원, 사업용토지는 공시지가 40억원임

▶ 재산세는 7월과 9월 사이에 시·군·구에서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고,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지방에서 납부한 재산세액은 공제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전액을 지방에 돌려주어 지방재원으로 사용하게 됨
- ▶ 특히 이번 개편에서는 그 동안의 보유세부담의 불공평을 완전히 바로잡기 위하여 주택은 시가기준으로 과세하게 됨으로써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냅니다.

### (16) 조세피난처 결정기준 변경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 (02-2110-2205~6)

- ▶ 국외 특수관계법인이 부담하는 조세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조세피난처세제에 의하여 과세되지 않도록 조세피난처 결정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 현행 기준 : 1과세연도 조세부담비율
- 변경 기준 : 3년간의 평균 조세부담비율
- ▶ 조세피난처 세제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세금부담이 없는 조세피난처(Tax Haven)에 법인을 설립하여 동 법인에 이익을 유보하는 비정상적 해외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당해1과세연도의 조세부담비율로 조세피난처를 결정할 경우 정상적 해외투자의 경우에도 대규모 손금산입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과세연도에는 조세피난처가 될 수 있음

- ▶ 변경된 조세피난처 결정기준은 조세피난처 해당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 하도록 함으로써 정상적인 해외투자에 대한 불필요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17) 기업의 관세부담을 1조 1천억원 경감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 (02-2110-2223)

- ▶ 2005년 1월 1일부터 기업의 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등을 위해 2004년에 이어 할당관세를 통해 관세부담을 대폭 경감하였습니다.
- 2004년 : 1조 1,270억원(100개 품목) → 2005년 : 1조 1,100억원 (96개 품목)
- ▶ 국내생산이 되지 않거나 국내생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철광석 등 비경쟁 기초원자재에 대하여 관세 무세화(할당0%)를 지속적으로 적용합니다.
- 철광석, 나프타 등 : 기본세율 1~2% → 할당세율 0%
- 다만, 일반원유는 유가안정대책에 따라 2005년 4월 30일까지 할당관세 1%를 적용하되 그 이후에는 할당세율 3%(나프타 제조용 0%) 적용

- ▶ 국제유가 상승, 원료 구득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농축 수산업 그리고 세율불균형으로 인한 국내기업의 역차별 시정이 필요한 물품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세지원을 합니다.

### < 할당관세 조정내용 >

- 신규적용품목(7개)  
주석괴(3%→2%), 사료용야자박(5→2), 티타늄괴(5→3), 무늬목 (5→3), 메틸에틸케톤(5.5→3), 6-헥산락탐(6.5→3), 유기EL모듈 (8→4)
- 할당관세 제외품목(11개)  
호밀, 산화지르코늄, 막성장장치, 금속전극용페이스트, 천연가스액, 유연처리원피, 페로니켈, 니켈분말, 티타늄광, 오산화바나듐, 전기동
- 할당관세율 인상품목(6개)  
건식식각기(할당0%→할당2.5%), 증착기(0→2.5), 도포·현상기 (0→2.5), PDP용드라이필름(0→4), PDP전용유리(0→4), PDP모듈(0 →4)
- 할당관세 인하품목(6개)  
이오프로마이드, 이오파미돌, 이오메프롤, 에틸렌글리콜(할당3% →할당0%), 유장(5→4), 맥아(15→10)

## (18) 관세 월별납부 시기 조정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 (02-2110-2213)

- ▶ 관세의 월별납부제도에 의한 '관세의 일괄 납부시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 종전에는 '개별 납기가 속한 달의 다음달 1일'까지 각각의 납기에 따른 관세를 일괄하여 납부하였으나, 앞으로는 '개별 납기가 속한 달의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납기를 조정

## (19) 국제우편물관련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간소화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 (02-2110-2213)

- ▶ 국제우편물(미화 600불 미만)에 대한 세관의 과세처분 관련 이의신청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종전에는 납세자(국제 우편물 수령)가 세관에 직접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앞으로는 우편물을 배달한 우체국에 대한 이의신청서의 제출도 세관에 대한 이의신청서의 제출로 갈음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

## (20) 현금영수증 제도 실시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02-397-1702~5)

- ▶ 2005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제도를 실시합니다.
-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카드·신용카드), 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면 사업자는 신용카드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현금결제 내역은 국세청으로 통보되는 제도
  - \*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 건당 5,000원 이상 현금결제
- ▶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소비자와 가맹점, 현금영수증 사업자에게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 소비자
  - \*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연간 500만원 한도)
  - \* 현금영수증 수취자 추첨을 통한 보상금 지급(연간 36억원)
- 가맹점
  - \*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법인제외, 연간 500만원 한도)
  - \* 현금결제에 따른 수수료 면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무상설치
  - \* 전년대비 매출액 130% 초과시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감면
- 현금영수증사업자
  - \* 부가가치세 신고시 다음 금액을 세액공제
    -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 17,500원」(2005년 1월 1일 이후부터)
    - 5,000원 이상 현금결제 건수 × (22원±30%)

### 3. 공 정 거 래

- ▶▶ 공정거래법이 개정되어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공정거래법은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규칙(rule)으로서 시장경쟁 과정에서 소비자·소액주주·경쟁사업자 등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반칙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금번 법개정은 이러한 반칙의 기준을 개선·보완한 것이며, 반칙을 감시하는 체계를 정부직접규제에서 시장자율방식으로 바꾸어가는 시장개혁의 정신을 담았습니다.
  - 이에 따라 참여정부의 경제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착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 ▶▶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유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가 조속히 정착되어야 합니다.
  -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의 규칙이 잘 지켜져야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신뢰도 제고를 통해 성장잠재력이 확충되고 Korea Discount도 해소됩니다.
  - 개정 공정거래법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뿌리내리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엄정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21) 카르텔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 상향조정

공정거래위원회 공동행위과 (02-504-4163)

- ▶▶ 카르텔은 시장경쟁을 무너뜨리는 시장경제 제1의 敵입니다.
  - 시장경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가격경쟁을 원천적으로 무너뜨림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가격시스템을 파괴
  - 기술혁신과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기업가 정신을 훼손
  - 공공부문에서의 입찰담합은 국민의 세금을 착복하는 결과
    - \* 선진국의 경쟁당국은 카르텔 시정에 역점을 두고 강력하게 대처
- ▶▶ 우리나라의 과징금 부과한도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고, 카르텔을 통해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유인을 억제하기에 크게 미흡합니다.
  - EU는 회사 전체매출액의 10%, 미국은 부당이득의 2배(관련매출액의 20%)인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 매출액의 5%에 불과
    - \* OECD는 한국경제보고서(2004년 6월)를 통해 선진국 수준에 맞추어 제재 수준을 높일 것을 권고
- ▶▶ 개정법은 카르텔 억지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 최고한도를 현행 관련 매출액의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 ⇒ 사업자들의 담합 유인이 줄어들고, 사업자간 경쟁의 촉진을 통한 소비자 이익이 크게 증대

## (22)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02-507-1934)

- ▶ 독과점 폐해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한 실체적 심사는 강화하되, 기업의 절차적 부담은 완화합니다.
- 대규모회사(자산 또는 매출액 2조원 이상)의 주식취득에 의한 기업결합을 주식대금납입 이후 신고에서 대금납입 이전 신고로 전환
  - \* 구체적인 사전 신고시점(예: 주식양도계약 체결일)은 시행령에서 확정
  - \* 이는 대금납입 이후에 신고하는 현행법 하에서는 당해 기업결합을 금지하는 경우 원상복구가 곤란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실제 시정조치를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
- 경쟁제한성이 있고 복잡한 기업결합의 경우 충실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연장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확대
  - \* 연간 600여건의 기업결합심사 중 대부분(약 98%)이 30일 이내에 처리되고 있어, 심사연장기간 확대가 기업에 부담을 초래하지는 않음
- 기업결합 당사회사 중 일방이 소규모기업(자산 및 매출액 30억원 미만)인 경우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
  - ⇒ 독과점 폐해 우려가 있는 경쟁제한성이 큰 기업결합에 심사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결합 신고에 따른 절차적 부담이 감소

## (23) 국외에서 이루어진 외국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도 우리 공정거래법 적용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과 (02-504-5145)

- ▶ 경제활동의 글로벌화로 국제카르텔 등 국외에서 이루어진 외국사업자의 불공정행위가 국내시장 및 소비자에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까지 미국·EU 경쟁당국으로부터 국제 카르텔 혐의 등으로 약 1,000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음
  - 한국 공정위도 2002년부터 역외적용을 실시
    - \* 2002년 흑연전극봉 국제카르텔, 2003년 비타민 국제카르텔 시정조치
- ▶ 개정법은 역외적용 근거를 명문화하고, 역외적용에 필요한 외국사업자에 대한 문서송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우리 공정거래법을 적용
  - 외국사업자가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이를 통해 문서를 송달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공고하도록 함
    - ⇒ 국외에서 이루어진 외국사업자의 카르텔 등 불공정행위로부터 국내 소비자와 시장을 보호
    - ⇒ 사건조사와 시정조치 및 과징금부과 등에 필요한 문서송달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외국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
    - ⇒ 정부의 법 집행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함으로써 외국사업자들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

## (24) 대기업집단소속 비상장·비등록 기업의 공시의무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 (02-503-9124)

- ▶ 대기업집단소속 비상장사는 집단내 상장사와 복잡한 출자관계로 얽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지배구조나 경영상황이 시장에 노출되지 않아, 기업집단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의 투명성을 저해합니다.

\* 2004년 4월 기준 자산 2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51개) 소속 884개 회사 중 비공개법인(금융·보험사 제외)이 639개사(72.3%)

- ▶ 개정법은 자산 2조원이상 대기업집단 소속 비상장·비등록 회사(금융·보험사 제외)에 대해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및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 비상장사에 대한 시장의 감시가 강화되어 대기업집단의 불합리한 경영행태 및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

⇒ 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투명성을 제고

## (25) 지주회사제도 보완

공정거래위원회 독점정책과 (02-503-9122)

-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체제는 소유구조가 '지주회사 → 자회사'간 수직적관계로 단순투명하게 되어 계열사간 순환출자로 가공자본을 만드는 현행 기업집단체제보다는 한 단계 진화된 형태입니다.

\* 전세계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지배구조 모범그룹인 GE社의 경우 지주회사체제로서 지주회사(GE Company)가 100% 출자를 통해 자회사를 영위하고 있으며 출자구조 및 지배구조가 단순·투명

- ▶ 개정법은 지주회사로의 설립·전환은 좀 더 쉬워지도록 하면서, 지주회사체제의 투명성은 높아지도록 보완

<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쉽게 한 사항 >

- 지주회사 전환시 부채비율(100%)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 연장(1년 → 2년)
- 지주회사로의 전환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는 유예기간을 모든 유형에 대해 인정
- 손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처분유예기간을 새로이 인정
- 비상장 합작자회사에 대한 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50 → 30%)

< 지주회사체제의 투명성을 제고한 사항 >

- 자회사간 출자 금지를 명문화
-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요건 신설(비상장 50%, 상장 30%)
- 지주회사의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소유 금지
  - ⇒ 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 선진국형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통한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의 개선을 적극 유도

(26)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 (02-503-9124)

▶▶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재벌이 계열사간 순환출자로 가공자본을 만들어 과도한 지배력을 형성하는 폐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 \*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순자산의 25%를 넘어 계열사 등 다른 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타회사 주식보유한도제'

< 출자총액제한제도 왜 필요한가? >

- ① 계열사간 상호보조·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한 독과점 시장구조 및 진입장벽 구축 등 공정한 시장경쟁질서의 왜곡을 방지
  - ② 집단내 계열사의 부당지원을 받는 기업과 독립 중소·중견 기업과의 불공정한 경쟁을 차단
  - ③ 한 계열사의 부실이 다른 계열사로 연쇄 파급되는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화 및 채권·금융시장까지도 마비시킬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 예방
  - ④ 소수주주권 보호를 위하여 지배주주의 실제출자지분 이상의 과도한 지배권 남용 및 사익추구 방지
- (한국의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기업이 사업에 실패하면 국가 경제시스템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험을 불러올 수 있는 대기업 출자에 대한 일정한 수준의 정부규제가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J.E.Stiglitz 교수, 2004.5.19일 매일경제 신문과의 대담 중에서)

- 출자총액제한은 상법이나 증권거래법, 증권집단소송 등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순환출자를 억제하는 장치로서 불과 5%에도 못 미치는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불합리한 구조에 대한 효과적 억제수단이다

(경북대 법대 이봉의 교수, 한국일보 2004.12.8일자 '한국시론' 중에서)

- 지배주주의 소유권과 지배권의 괴리가 가능하게 하는 체제하에서 사적이익의 추구, 부당내부거래 등 남용의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기업그룹 형태가 일반화된 국가에서는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소수주주들은 지배주주에 의한 남용행위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효과적인 교정수단을 가져야 한다.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2004.5월 개정)

▶▶ 개정법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4가지 졸업기준을 새로 도입하여 자율감시장치를 갖춘 기업(집단)부터 출자총액제한에서 졸업

- \* ① 내부건제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모범기업 / ② 지주회사 및 그 소속 자회사·손자회사 / ③ 지배주주의 소유와 지배권 괴리가 작은 기업집단 / ④ 계열회사수가 적고 3단계 이상의 계열사간 출자가 없는 기업집단

▶▶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한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용제외·예외인정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

- 민간이 소유권을 갖는 방식의 SOC법인 출자에 대한 적용제외 신설
- 기업구조조정관련 출자(현물출자·물적분할·분사 등) 예외인정 부활
- 기업구조조정·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신산업 등 출자의 경우 예외인정시한(최장 8년)을 폐지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 예외인정요건을 강화(모든 외국인투자기업 → 단일 외국인이 10% 이상 보유)하되, 외국인투자자가

경영권 획득과 관련하여 악용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단일외국인개념에 특수관계인을 추가

- \* 구체적 졸업기준, 신산업출자 예외인정요건의 완화, 10대 성장동력산업 출자에 대한 예외인정 신설 등은 시행령 개정시 반영 예정

⇒ 개편된 대기업집단시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시스템 구축의 인센티브로 활용

⇒ 개정법이 시행되면 자율감시장치를 갖춘 상당수의 기업(집단)이 출자총액제한에서 졸업하여 자연스럽게 기업별 자율규제방식으로 전환 예상

## (27) 계열금융사의 의결권 행사한도 단계적 축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 (02-503-9124)

▶▶ 자산규모 2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에 대해 임원선임·해임, 정관변경, 합병·영업양도 등에 대한 주총의결시 30%까지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 \* 1986년 제도 도입시에는 의결권 행사가 전면 금지되었으나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 위협이 제기되어 2002년 관련 의결권을 30%까지 예외 허용

▶▶ 그러나, 의결권제한 완화 이후 당초의 개정취지와는 달리 금융보험사의 고객자산이 대주주의 지배권 강화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 2003년 9월 의결권행사 실태점검 결과, 적대적 M&A 방어를 위해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는 나타나지 않은 반면, 계열확장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는 다수 발견

▶ 개정법은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범위를 현행 30%에서 2008년까지 15%로 축소하였습니다.

- 다만, 기업이 제도 변화에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감안하여 2006년 4월 1일부터 3년 동안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축소

⇒ 금융계열사의 고객자산이 지배주주의 의결권으로 활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지배주주와 고객간 이해상충문제(conflict of interests) 등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 계열 금융보험사의 지원을 받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독립 중소·중견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

## (28)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재도입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기획과 (02-507-0161)

▶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이 2004년 2월 4일로 시한이 만료됩니다.

- 그러나, 부당내부거래 관행이 상당히 남아있고 대부분(80% 이상)의 부당내부거래가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서는 동 요구권이 꼭 필요

- \* 부당내부거래는 독립·중소기업과의 불공정경쟁을 초래하고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등 공정한 시장경쟁 조건을 왜곡

▶ 개정법은 3년 시한으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제도입하되, 남용우려를 감안하여 발동요건과 통제장치를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 금융거래정보 요구대상을 금융기관의 특정점포로 한정

- 요구권 발동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을 의무화

- 발동요건 등을 위반하여 정보를 요구한 자에 대한 형사벌 신설

⇒ 고속도로 무인감시카메라가 실제 작동여부와 상관없이 과속 예방효과가 있는 것처럼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보유를 통해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

⇒ 실효성 있는 조사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내부거래 근절

## (29)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제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1담당관실 (02-504-5142)

▶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제도는 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및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의 불공정행위 감시 기능을 통해 법 위반을 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그러나, 손해배상청구제도의 운용실적이 극히 미흡하여 시장자율 감시기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움



▶ 개정법은 소비자 등 법 위반 피해자들이 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 법 위반행위 피해자가 공정위 시정조치와 상관없이 바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재판상 주장제한 규정을 삭제

- 공정거래사건의 경우 손해액 입증이 힘들어 피해구제를 받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 법원에 의한 ‘손해액 인정제’를 새로 도입

\* 손해의 발생은 확실하나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의 전체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감안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

⇒ 손해배상청구 등 사적 소송의 활성화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는 물론,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장자율감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위법행위의 사전 억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손해배상청구제도의 활성화와 함께 ‘개인이 직접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금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私인의 금지청구제도)’의 도입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

### (30) 법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

공정거래위원회 공동행위과 (02-504-4163), 가맹사업거래과 (02-504-9466), 유통거래과 (02-503-9078), 조사기획과 (02-507-0161)

▶ 소비자 등 시장참여자의 적극적인 법 위반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 갈수록 은밀화, 지능화되어 그 적발 및 시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부당지원행위

- 광범위하고 뿌리 깊게 만연되어 있어 기존 법집행 방식으로는 거래질서의 정상화를 기대하기 곤란한 과도한 경품 및 무가지 제공 등 신문판매키오 위반행위

- 대형유통업체 등과의 거래관계 단절 우려로 피해자의 신고 또는 조사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 위반행위 등

\*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대상 위반행위 유형, 포상금 규모, 지급요건 및 절차 등은 시행령 및 고시에 규정

⇒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질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

## 4. 과학기술·산업·에너지

### (3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연구조정총괄담당관실 (02-2110-3737)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비목 및 계상기준 일부가 오는 2005년 6월 이후부터 연구원 사기진작 및 연구환경 개선 등을 위해 변경됩니다.
- 연구개발결과를 통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연구기관장은 기술료 중 기존 약 35%에서 50% 이상까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보상으로 지급 가능
- 연구활동 참여에 대한 보상금 성격의 연구활동장려금도 현 인건비의 7%에서 연구책임자 25%, 연구참여자 15%까지 지급 가능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휴직, 연구연가 등에 따른 인건비 보전을 위한 연구개발준비금은 기존 인건비의 15%에서 30%로 확대
- 당해과제 연구홍보에만 한정되었던 연구홍보비를 폐지하고 과학문화활동비를 신설하여 각종 과학문화활동비로의 사용이 가능토록 조치
- 연구실 안전사고 관련 체계적 보상 및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건비 2% 범위의 연구실 안전관리비 신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 관리 → 평가 및 성과활용 구조의 선진화와 효율화를 위해 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 관련 제도도 일부 개정됩니다.

- 연구비 부정사용, 연구개발 결과의 극도 불량, 정당한 사유없는 연구포기 등에 대해서는 연구사업 참여기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조치를 의무적으로 적용
-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등을 확보하고, 각 부처의 평가위원 Pool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연구개발사업평가위원 Pool을 운영할 예정
- 기존의 부처별 상이한 서식, 연구비 사용기준 등에 의해 발생한 연구주체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계획서, 최종보고서 등 서식과 연구관리 기준 중 가능한 부분을 통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의관한규정』 시행규칙을 운영

## (32) 국가연구개발사업 주기적 평가제도 도입 및 시범 실시

과학기술부 조사평가과 (031-436-8625)

- ▶▶ 매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방식이 주기적 평가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 그 동안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매년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평가하다 보니, 피평가자의 행정부담이 크고 심도있는 평가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
- 이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각 부처가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평가하는 식으로 제도 개선
- ▶▶ 주기적 평가제도는 2005년도 하반기 중 시범 실시되고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 주기적 평가제도의 도입에 따라 평가에 따른 관련기관의 행정 부담은 완화되고, 각 부처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책임감과 사업관리능력은 제고될 것으로 기대
- 또한 평가대상사업의 축소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도있는 평가가 가능하게 되어 평가의 전문성 및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 (33)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산업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02-2110-5404)

- ▶▶ 기술력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시공업체를 육성합니다.
  - 일정수준 이상의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을 갖춘 설비시공업체를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등록제 실시
- ▶▶ 신·재생에너지 분야 부품 공용화 및 표준화를 시행합니다.
  - 주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 부품 호환성 및 A/S 기능 제고
  -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정을 위한 조사·연구 및 표준개발 비용 지원
- ▶▶ 국내 개발된 우수한 설비의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 우수 설비의 초기시장 조성을 위해 시제품제작, 설비투자자금 융자지원, 제품홍보 등 지원
- ▶▶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겠습니다.
  - 신·재생에너지분야 특성화대학, 산·학·연 공동의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정·육성 등

### (34) 대·중소 협력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산업자원부 산업구조과 (02-2110-5163)

▶ 대·중소기업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장려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63.9%는 모기업(대기업)에 납품하는 수급 기업으로, 대·중소기업간 협력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
- 이에 따라 기술개발, 설비투자, 인력양성, 품질향상, 마케팅 등 대·중소기업 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대기업으로부터 소요자금의 50%를 지원받는 중소기업은 나머지 50% 예산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음(업체당 50억 한도)

▶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조건은 이렇습니다.

- 지원규모 및 금리
  - \* 약 1,100억원 수준(산업기반자금의 30% 범위내), 연 4.9%~6%
- 지원대상 및 업종
  - \* 대·중소기업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기업으로부터 협력사업 소요자금을 지원받는 중소기업
  - \*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 지원내용 : 기술개발, 설비투자, 인력양성, 품질향상, 마케팅 등 대·중소기업 협력사업 전 부문

\* 사업장확보 및 생산시설의 구입·설치비용

\* 필수 인건비, 재료비, 경비, 교육연수비 및 시험용기기·기자재구입 비용, 공동마케팅 비용 등

### (35) 전자문서 이용확대

산업자원부 전자상거래과 (02-2110-5156)

▶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한 전자문서의 이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많은 법률에서는 입법 목적의 실현을 위해 각종 문서의 작성·보고·비치·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당해 문서에 전자문서의 포함여부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이 있음
- 28개 법률 56개 조항에 따른 문서행위를 전자문서로 하여도 그 효력이 종이문서와 동등하게끔 하여 정보화 시스템에 의한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함

▶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가 신설됩니다.

- 전자문서의 보관 등의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능력이 있는 기관을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지정하고, 보관 중인 전자문서의 불변경성, 보관소 증명서의 진정성을 법적으로 인정

- 전자문서 이용의 최대 애로사항이었던 전자문서 보관과정의 위·변조 방지 등 전자문서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
- ▶ 전자문서 이용확대를 위한 이상의 제도는 전자거래기본법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에 있으며, 개정법률 공포 후 6개월 이후가 되는 2005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36) 어린이 보호포장 신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생활복지표준과 (02-509-7247)

- ▶ 어린이 보호포장이 의무화됩니다.
- ‘어린이 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용기 포함)을 말함
- \* ‘어린이 보호포장’ 의무 대상자는 소지자가 음용하거나 흡입할 경우 중독 등의 위해 우려가 있는 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 어린이 보호포장대상 공산품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에서 지정하고, 안전기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동 규정은 2005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제조업자가 출하하거나 수입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는 제품부터 적용됨
- ▶ 어린이보호포장 대상공산품은 위해성 및 선진국의 규제대상 품목을 참고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 < 선진국의 어린이 보호포장 규제 품목 >

| 주요 제품            | 유 해 성 분                               | 독 성                                               |
|------------------|---------------------------------------|---------------------------------------------------|
| 방 향 제            | 탄화수소 화합물, 탄소 3~13의 일차 알콜              | 소화기관 내출혈, 과호흡증후군, 피부화상, 피부자극성, 중추신경계 이상           |
| 세 정 제            | sodium hydroxide                      | 소화기관 화상, 천공, 폐렴 등                                 |
| 접 착 제            | 탄소 3~13의 케톤, polymethylmethacrylate 등 | 신장·간 손상, 중추신경계 이상, 소화기관 및 호흡기관 과민증상               |
| 얼룩제거제            | 탄화수소 화합물, 석유정제물, 산 등                  | 소화기관 내출혈·화상, 과호흡증후군, 피부화상, 구토, 설사, 폐렴, 중추신경계 이상 등 |
| 가구광택제<br>자동차광택제  | 탄화수소 화합물, 석유정제물                       |                                                   |
| 부 동 액            | ethylene glycol                       | 중추신경계 이상 등                                        |
| 자동차용앞면<br>창유리세정액 | 메틸 알콜                                 | 호흡곤란, 혈관이나 신장 기능 손상                               |

### (37) 24시간 365일 전자출원서비스 지원

특허청 정보기획국 정보개발과 특허넷Ⅱ TFT (042-481-5116)

- ▶▶ 2005년 2월 초부터 현행 전자출원서비스 시간의 제한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 현행 온라인 전자출원시스템은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20시까지 전자출원서비스 시간이 제약되어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
- 2005년 2월 초부터는 3단계에 걸쳐서 전자출원서비스 시간을 연장할 계획임
  - \* 2005년 2~6월까지의 오전 8~24시까지, 2005년 7~10월까지의 오전 6시~24시까지, 2005년 11월부터는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제공
- ▶▶ 24시간 지원될 서비스에는 특허청에서 제공되는 대부분의 전자민원 서비스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 국내출원 및 국제출원의 접수 및 통지, 등록원부 등 각종 증명서 신청·발급, 심사진행정보 열람 등
- ▶▶ 또한 출원번호 및 제출서류 처리과정 등을 실시간으로 통지받을 수 있으며, 특허수수료 및 제출하고자 하는 서류의 오류를 서류제출 이전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8) PCT 온라인 시스템 개통

특허청 정보기획국 특허넷Ⅱ TFT (042-481-5094)

- ▶▶ PCT 국제출원서 등의 온라인 출원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 PCT 국제출원서를 포함한 관련서식 64종을 2005년 2월 11일부터는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
  - \* 통합 KEAPS, PCT K-EDITOR 등 관련 SW 배포
  - \* 국제출원서를 전자출원시 28만 5,000원의 수수료 감면
- 제출된 서류의 행정 처리결과를 온라인에서 실시간 조회 가능
- PCT 국제출원과 관련된 수수료를 인터넷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 가능
- ▶▶ 전 PCT 국제출원 서류를 전자문서로 관리하게 됩니다.
- PCT 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 업무를 전자문서로 수행
- 민원인에게 발송하는 통지서를 온라인으로 송부
- ▶▶ WIPO와의 온라인 문서 교환을 확대 시행합니다.
- WIPO에 온라인 송부 대상 서류를 우선권증명서류 1종에서 국제출원서, 번역문 등 5종으로 확대
  - \* 우선권증명서류를 송부요청하는 경우 송달료 면제(2005년 2월부터)

- WIPO로부터 온라인 문서 수령 개시
  - \* 공개пат렛, 우선권증명서류, PCT 예비심사보고서 등 지정관청 관련 서류의 신속한 확보 가능

### (39) 재택근무 도입

특허청 정보기획국 정보개발과 특허넷II TFT (042-481-5108)

- ▶▶ 2005년 3월부터 정부부처 최초로 재택근무제도를 도입하고, 재택근무자에게 출근시 동일한 자리를 공유하게 하는 사무공간 공유제도도 도입합니다.
- 본격적인 제도의 도입은 2006년부터이나, 제도도입에 따른 문제점 발굴 및 보완을 위해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
- 재택근무에 참여하는 심사관은 근무유형에 따라 1주일에 1~4일을 재택근무지(자택 등)에서 근무하게 되고, 사무실에 출근하는 날에는 2~3명이 짝을 지어 한 자리를 공유
  - \* 사무공간 공유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잉여 사무공간을 확보하여, 심사관 증원에 따라 심화된 사무공간 부족문제를 상당히 해소할 것으로 기대
- ▶▶ 특허청은 재택근무에 따른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암호화된 가상사설망(VPN)을 통하여 특허넷과 재택근무자 PC를 연결하고, 접속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서명 인증서(GPKI)와 지문인식시스템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 (40)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특별통관절차 마련·시행

관세청 특수통관과 (042-481-7835)

- ▶▶ 최근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구매·수입되는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특별통관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 ▶▶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 전자상거래물품의 거래형태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입화주를 구분 지정
    - \* 수입쇼핑몰형(수입화주 : 전자상거래업체), 수입대행형(국내구매자), 배송대행형/개인직접구매형(국내구매자)
  - 특별통관절차를 적용받을 업체와 물품을 지정하여 목록통관, 간이신고 등 간편한 통관절차를 적용하고 원칙적으로 전산선별건만 검사하거나 통관심사를 완화
    - \* 대상업체 : 수입쇼핑몰형 및 수입대행형 전자상거래업체
    - \* 대상물품 : 특송물품은 2,000불, 우편물은 600불 이하의 물품
- ▶▶ 이는 일부 전자상거래업체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거래형태이면서 개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소액면세규정을 적용받거나 수입요건 확인절차를 회피하는 등 변칙통관 사례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고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건전한 통관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41) 중소기업 보호제도 개편 및 대·중소기업 협력 지원

중소기업청 기업환경개선과 (02-503-7930)

▶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개정법률』이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글로벌 아웃소싱 확산, 외국인투자 확대 등 경제환경의 변화로 실효성을 상실한 지정계열화 업종, 장기위탁계약의 체결, 중소기업계열화촉진심의회 등 지정계열화 관련규정과 중소기업고유업종 지정 및 대기업 등의 참여제한 등 고유업종관련 규정 폐지

\* 다만, 고유업종제도 폐지는 2007년 1월 1일 시행

- 수·위탁거래의 범위를 종전 제조·가공·수리 외에 공사, 용역을 포함하여 협력 및 수·위탁거래 공정화관련 조항의 적용범위 확대
- 공동연구개발, 협력성과의 공유, 공동판로 확대, 거래조건의 개선 등 기업간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해 금융·세제 지원 등 정부 시책 지원 근거 마련
- 위·수탁기업간 협력현황의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포상 또는 그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
- 대·중소기업 협력사업의 알선·지원, 수·위탁거래 공정화 지원 등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을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설치 (2004년 12월)

- 기업간 이루어지는 물품대금 결제조건의 주기적 조사·공표·개선 요구가 가능토록 하고 결제조건이 양호한 기업에 대해 포상 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

## (42) 재래시장의 종합적·체계적 육성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기업과 (02-503-7925)

▶ 재래시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특별법』을 2005년 3월부터 시행합니다.

- 재래시장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 중기청장은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시장 육성계획을 수립·시행

\* 시장경영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재래시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 시설현대화 사업시 국·공유지 부지 사용 및 도로점용료를 면제하고, 전주 이설 및 지중화 비용을 전기사업자와 100분의 50의 비율로 부담할 수 있도록 조치

\* 재래시장의 상거래 현대화, 공동사업 활성화, 판로 및 홍보 확대 등 재래시장의 경영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 마련

- 시장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등



시장정비 절차를 간소화하고,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

- 시장정비사업시 용적율, 건폐율, 건축물 높이 제한에 대한 특례 부여
- 재래시장 상인을 회원으로 시장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등을 수행하는 시장상인회 및 시장상인연합회를 설립 근거 마련

### (43)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확대

중소기업청 금융지원과 (042-481-4378)

▶▶ 2005년 1월 1일부터 기업간거래에 따른 금융안전망(Financial Safety Net) 역할을 하는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업종이 대폭 확대됩니다.

\* (기존) 제조업 ⇒ (변경) 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제조관련 도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위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

-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은 어음 이외에 외상매출채권까지 보험가입 대상에 포함, 종전의 어음보험제도를 개편하여 2004년 3월에 새롭게 시행한 신용보험의 일종
-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업종을 어음보험의 가입대상 업종과 동일하도록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보험수혜 기회를 넓히고 업종별 불균형해소

▶▶ 이에 따라 2005년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매출액 150억원 이하 업체로서 업력 2년 이상인 업체)이 현 4만 7,000개에서 9만 4,000개로 102% 확대될 전망입니다.

### (44) 중소기업 기술혁신 분위기 확산

- 소그룹 결성지원 및 교육 -

중소기업청 기술정책과 (042-481-4449)

▶▶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학습과 연구활동을 통한 기술혁신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활동을 지원합니다.

- 시행 첫해인 2005년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을 중심으로 총 20억원을 투입하여 업체 당 1,000만원 한도로 기술혁신 소그룹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주요지원내용 : 혁신 교육훈련 비용, 포상비용, 회의비, 출장비, 소그룹 활동 발표비, 연구 용품 구입비 등 제반 활동비용

- 매년 사업 참여 소그룹을 대상으로 우수 소그룹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혁신분위기 및 성과 확산

▶▶ 기술 및 경영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체계적인 R&D 기획 및 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자 등을 대상으로 기술혁신교육을 실시합니다.

- 2005년에는 중소기업 CEO/CTO, 연구개발 부서장 등을 대상으로 연간 1,000여명에 대해 교육 실시

\* 교육내용 : 연구개발 관리/기획, R&D 프로세스 관리 및 성과평가, 창의적 연구개발 문제해결 방법, 정부의 R&D 지원정책 및 R&D 지원사업 참여시 신청서 및 제안서 작성요령, 프리젠테이션 기법 등

- 동 교육을 이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혁신개발 사업 지원선정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

## 5. 농림·어업

### (45) 국가재보험제도 도입(★)

농림부 구조정책과 (02-500-1665)

- ▶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2005년부터 자연재해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켜주기 위해 2001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을 도입·시행 중

- 보험대상 품목은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감귤 과수 6개 품목

\* 2013년까지 30개 품목 이상으로 확대

- 대상면적 중 가입비율 18.2%(1만 7,600ha), 가입농가는 2만 5,000여명
-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순보험료 50%, 운영비 90% 국고지원

- 2002년 태풍 '루사'로 큰 손실을 입은 민간보험사가 이탈하면서 현재는 농협이 단독으로 운영하고 사후에 정부가 손실 일부를 보전해주는 불안정한 형태로 운영 중

- ▶ 국가재보험을 통해 민간시장에서 인수하기 어려운 거대한 자연재해 피해를 정부가 인수함으로써, 민간보험사들이 안정적으로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경영안정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 ▶ 국가재보험 도입을 계기로 민간보험사가 참여함으로써 손해를 200% 이하인 통상적 재해는 농협·민간이 시장원리에 따라 공동으로 책임지는 체제로 개편하였습니다.

### (46) 농업협동조합 관련 제도 개선

농림부 협동조합과 (02-500-1694)

- ▶ 2005년 6월 말~7월경부터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관련 제도가 대폭 변화됩니다.

- 우선 현재 상임직으로 교육지원사업을 직접경영하고 있는 회장이 비상임으로 전환되고, 전무이사를 새로 신설하여 교육지원사업을 전담처리

\* 사업경영은 대표이사가 전담하고 회장은 사업경영 부담에서 벗어나 대외 농정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

- 중앙회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사하기 위하여 현재의 감사제도를 폐지하고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과 조합장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음

- 대표이사 책임경영체제가 강화됨에 따라 대표이사 소관 사업별로 이사회 내에 소이사회를 두도록 하였음

- ▶▶ 현재의 1조합 1표 방식의 중앙회 총회 의결권은 조합별로 조합원 수에 큰 편차가 있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조합별로 의결권을 3표까지 차등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 회장선거를 제외한 총회와 대의원을 선출할 때 조합별 의결권은 대통령이 정하는 조합원 수 기준에 따라 1~3표까지로 각각 부여
- ▶▶ 조합경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 도입을 확대하고 조합장 연임도 제한합니다.
-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조합은 상임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였으며, 상임조합장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
- ▶▶ 조합경영의 불투명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외부회계감사제도가 도입되고, 조합경영을 왜곡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조합장 선거를 공정하게 실시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 일정규모 이상 조합은 조합장 임기 중 1회 외부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수감토록 하고, 기타 조합은 대의원 3분의 1이상 청구시 조합장 임기 중 1회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조치
- 조합장 선거관리는 현재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나, 공명선거 정착을 위하여 지역조합의 조합원 직접선거는 해당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

- ▶▶ 그밖에 조합의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하여 조합간 사업연합을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제도화하고, 배당에 있어서도 출자배당보다 조합의 경제사업 이용실적 등 이용고에 비례한 배당을 우선토록 하였습니다.

## (47)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 개선

농림부 농지과 (02-500-1670~1)

- ▶▶ 2005년부터 농업인 등 민원인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농지전용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시·군의 농지전용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합니다.
-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1만㎡까지 농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얻도록 하였으나, 3만㎡까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개선
- 중소기업이 창업을 위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최초로 신설하는 공장에 대해 농지전용시 납부하는 농지조성비 면제
- 시·군에 농지전용허가나 농지전용신고,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할 경우 제출하는 서류를 대폭 간소화
- \* 시·군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한 지적도등본이나 임야도등본, 지형도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농지전용 후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구비서류를 줄여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하도록 조치
- 또한, 시·군청에서 농지전용허가를 처리하는 기간을 2일 단축하여 10일 이내 처리가능

## (48) 농지소유제도 개선

농림부 농지과 (02-500-1670~1)

- ▶▶ 2005년 7월부터 비농업인의 상속받은 농지, 8년 이상 영농한 후 이농하여 계속 소유하는 농지 등에 대해 현행 1ha 미만 소유상한은 계속 유지하되, 상한을 초과한 상속농지 등을 농업기반공사 등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유상한의 예외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을 폐지하여 농업·농촌기본법 상 농업회사 법인이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의해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설립하고 비농업인은 총출자액의 4분의 3이내에서 출자가 가능
- ▶▶ 지역발전특구(농업특구)안에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닌 특화사업자의 농지소유가 허용됩니다.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특구 안에서 특화사업자가 특구토지 이용계획에 포함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소유제한 완화

## (49) 농지이용제도 개선

농림부 농지과 (02-500-1670~1)

- ▶▶ 2005년 7월부터 농업기반공사 등에게 위탁하여 전업농 등에게 장기(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라도 임대가 허용됩니다.
  - 현행 농지법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질병·징집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임대를 허용하고 있음(농지법 제22조)
- ▶▶ 또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하여 지나치게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는 처분명령제도가 완화됩니다.
  - 소유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의 소유자가 그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농업기반공사 등에 매도를 위탁한 경우에는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농지소유자가 처분명령의 유예기간 동안 성실하게 경작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당해 농지에 대한 농지처분의무가 소멸 되도록 조치

## (50) 농지전용 및 농지조성비제도 개선(★)

농림부 농지과 (02-500-1670~1)

- ▶▶ 2005년 7월부터 농업보호구역의 행위제한을 허용행위열거방식으로 전환하고 농촌소득 증대 및 농촌생활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허용됩니다.
- 2003년 시행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관리지역(중전의 준농림지역)의 토지이용행위 제한이 허용행위열거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리지역의 행위제한 수준과 조화되도록 농업보호구역의 행위제한방식의 조정 필요
- ▶▶ 또한, 농촌 투자를 활성화하고 농지의 개발이익이 농촌활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지조성비 제도를 개선하여 2005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개편하여 농지조성 외에 영농규모화사업 및 농지은행의 농지매입 재원 등으로 활용
- 부과기준도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에 불리한 현행 대체농지 조성원가(㎡당 10,300원~21,900원)에서 공시지가로 변경하여 농촌지역투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농지 전용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농촌투자재원으로 활용

## (51) 친환경농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 (02-500-1810)

- ▶▶ 2005년 1월부터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사용되는 농자재 중 천적·키토산·목초액 등 3종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어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자재구입비 부담이 경감됩니다.
- 이미 비료나 농약으로 등록된 자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일반 친환경농자재는 비료나 농약대신 농자재로 사용되면서도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여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자재위주로 영세율을 적용 받도록 관련세법을 개정
- 천적·키토산·목초액 등 3종의 자재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사용이 허용된 자재 중에 많은 농가들이 사용하고 있어 친환경농업 확산 및 세제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 ▶▶ 주요 친환경농자재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농가의 생산비 부담 경감을 통해 농가소득이 증대되고 화학비료·농약사용량을 줄이는 등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52) 농기계 안전검정제 도입(★)

농림부 농업기술지원과 (02-500-1788)

- ▶▶ 2005년 1월부터 농업인 보호를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기계는 농업공학연구소의 안전검정을 거쳐 구입자금을 지원하며, 안전검정 대상 농기계도 31개 기종에서 61개 기종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 농기계 안전검정제도는 2002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었으나 구입자금 융자제도와 연계되지 않아 안전검정을 받는 경우가 드물어 실효성 미흡
- ▶▶ 이에 따라 농기계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을 크게 줄일 수 있어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앞으로도 안전검정 대상 농기계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53) 농산물자조금제도의 자율권 확대 및 사업구조기능 강화

농림부 유통정책과 (02-500-1829)

- ▶▶ 2005년부터 자조금단체의 사업구조 기준(자족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자조금 단체의 개방성 확대와 자율적 사업역량 제고를 유도하고, 특히 지역조합 등 농협계 생산자단체와 영농조합법인 등 비농협계 생산자단체 등 다양한 형태의 생산자단체간 상호진입을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 현재 생산자단체가 자발적으로 농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품목별 조직의 규모화를 촉진하고 시장교섭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조금제도 시행 중
- ▶▶ 자조금조성 단체에 대하여 실질적인 자족기능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인건비 등 자체 경비 한도액을 종전의 자체적립액의 5% 또는 2,000만원에서 자체적립액의 30% 이내로 대폭 상향조정
- ▶▶ 과실류 등 일부 품목의 계절적요인 등 특성을 감안하여 익년 3월말까지 정산하도록 연장함으로써(종전 1월말),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54)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신청 On-line 전산화

농림부 유통정책과 (02-500-1824)

- ▶▶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2005년부터 시·군청을 방문하여 제출 하던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사업계획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물류표준화사업 대상자인 생산자단체(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 도매시장(도매법인, 산지유통인, 공판장, 하역회사),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등은 시·군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물류표준화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 작목반은 해당 지도농협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물류표준화 사업계획서의 심사과정 등 처리 흐름을 인터넷으로 확인
- 사업대상 물류기기에 대한 재원 및 가격 등 자료 제공
- ▶▶ 시·군 담당자는 인터넷으로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사업비 범위 안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인터넷으로 시·도에 보고하게 됩니다.
  - 농정심의회 자료, 사후관리 대장, 정산보고서 등을 자동화
  - 사업계획변경 신청 등을 On-line으로 처리
- ▶▶ 시·도는 업무자동화로 집계 및 자료 취합시간이 대폭 절감됩니다.
  - 시·군별 사업대상자별, 물류기기 종류별, 사업단가 등 분석 용이
  - 정산보고서 등 업무 자동화로 시간 절약

## (55)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지원내용 개선

농림부 소비안전과 (02-500-1833)

- ▶▶ 포장화 우대품목(무·배추·마늘·양배추) 중 농가소득 제고 및 품질향상을 위해 마늘을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고, 공동선별비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 그 동안 무, 배추, 마늘, 양배추 등 4개 품목을 포장화우대품목으로 지정하여 포장재비 및 수확상차비를 지원하여 왔음
- ▶▶ 포장재비 및 공동선별비 지원대상에 기존의 산지유통전문조직, 친환경인증/품질인증 조직 및 농가, 기타 생산자조직\* 외에 농림부로부터 지정받은 공동마케팅 조직을 추가하였습니다.
  - \* 농협·작목반·영농조합법인
- ▶▶ 표준규격포장 출하율 향상을 위해 포장재비 지원비율을 차등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표준규격포장 출하율이 30% 이하인 품목 : 지원비율을 40%로 상향 조정
  - 표준규격포장 출하율이 80% 이상인 품목 : 현행대로 지원비율을 20%로 하되, 2005년도 신규적용 품목에 대해서는 25%로 축소 하고, 2006년도부터 20% 지원



## (56) 인삼검사 신청기한 조정

농림부 채소특작과 (02-500-1868)

▶▶ 인삼산업법령 개정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인삼검사에 있어 잔류농약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반영하여 인삼검사 신청기한이 연장 조정되었습니다.

- 현행 :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3일 전까지 관능검사 신청단, 잔류농약검사는 10일 전까지
- 변경 : 관능검사, 잔류농약검사 등 모든 검사에 대하여 10일 전까지 신청

### < 관련법령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

- 제(18조) (검사의 신청) 법 제1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삼류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10일 전까지 별지 13호서식의 인삼류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검사시료를 첨부하여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삼연근확인서(5년근 이상의 경우에 한한다)
  2.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사본(수출의 경우에 한한다)
  3. 수입면장사본(수입의 경우에 한한다)

## (57) 소 부루세라병 방역 강화를 위한 검사증명서 휴대대상 확대 및 위반자 규제 강화

농림부 가축방역과 (02-500-1938)

▶▶ 소 부루세라병 방역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검사증명서 휴대대상을 확대하고, 검사증명서가 없는 한육우는 가축시장 거래 및 도축이 제한되며, 검사증명서가 없는 소를 구입하여 부루세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살처분 보상금을 60%만 지급합니다.

### • 소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 휴대제도 확대 시행

- \*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1세 이상의 모든 한육우 암소(도축용 추가)와 농가에서 문전 거래되는 도축용 한육우 암소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검사증명서 휴대의무 대상 소를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하고자 할 경우 최소 2주전에 해당 시·군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검사신청

### • 검사증명서 미휴대 소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

- \* 검사증명서가 없는 소는 가축시장 거래 및 도축제한이 제한되며, 해당 가축의 소유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

※ 시행시기 : 2005년 1월부터(1~2월 계도기간, 3월부터 의무시행)

- \*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가 없는 소를 구입하여 부루세라병이 발생한 경우 살처분보상금을 평가액의 60%만 지급함

※ 시행시기 : 2005년 1/4분기 중(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개정 중)

- 부루세라병 발생농장의 감염의심소 등 도태권고 가축에 대한 도태장려금을 시가 지급



- \* 도태가축의 산지가격과 축산물도매시장 판매금액의 차액을 지급하여 도태장려금을 현실화 함

## (58)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율 확대

농림부 농촌사회과 (02-500-2081)

▶▶ 농림부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율을 2005년 1월부터는 종전의 30%에서 40%로 확대합니다.

- \* 2006년부터 경감율을 50%까지 확대할 계획

- 농업인 요건과 거주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농업인 요건 :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 \*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거주지 요건 :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 \* 읍면 거주자
- \* 시의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 거주자
- \* 특별시·광역시의 농업진흥지역·개발제한구역 거주자

## (59)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절차 간소화

농림부 농촌사회과 (02-500-2087)

▶▶ 농어민 대학생 자녀들에게 무이자로 융자해주는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를 대폭 감축하였습니다.

- 현행(6종) : 융자신청서, 대차약정서,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변경(1종) : 융자신청서

- \* 감축되는 서류는 융자금 집행 위탁기관인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G4C 등 정부전산망 등을 통해 확인

▶▶ 아울러, 2005년도에는 600억원의 융자재원으로 입학금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신청한 학자금 전액을 2월과 8월 학기 초에 조기 지원 되도록 하였습니다.

## (60)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추진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자원과 (031-299-2681)

- ▶ 농가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 현상으로 부양부담 가중, 지역사회 유지 곤란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농촌자원과 노인의 전통 보유 기술을 활용하여 농촌노인의 문제해결과 동시에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2005~2008년까지 4년간 400개소를 연차적으로 추진, 첫 해인 2005년에는 80여개소 육성 계획
-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한 소득활동 기반조성, 문화전승 및 사회활동 지원, 건강·장수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 등 농촌 노인의 생산적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지원
- 뜻을 같이하는 2~3개 마을단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마을을 확정·추진
- ▶ 앞으로는 노인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 전략으로 '지역공동체 중심의 자조적인 노인보호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기본계획에도 반영하여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 (61)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 및 조합경영의 투명성 제고

산림청 산림정책과 (042-481-4135)

- ▶ 조합장의 임기에 연임횟수를 제한하고 출마요건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 상임인 조합장 및 중앙회장의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
  - 조합장 및 중앙회장의 출마요건을 대폭 완화
    - \* (종전) 납입출자 보유기간 : 5년
    - \* (개선) 납입출자 보유기간 : 2년
  -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관리를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 ▶ 외부회계감사제도 도입 및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방법을 개선 하였습니다.
  - 중앙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에 대하여 외부회계감사제도 도입
  -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방법 개선
    - \* (종전) 위원 전원(4인)을 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임명
    - \* (개선) 회장 임명(2인), 산림청장 및 금감위원장 위촉(각1인)

## (62) 숲가꾸기 현장토론회 및 공공산림정비 숲가꾸기 추진

산림청 산림자원과 (042-481-4186)

▶ 숲가꾸기 현장토론회를 민유림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 숲가꾸기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점을 해결하고 사업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한 현장토론회를 민유림으로 확대 운영

\* 숲가꾸기 지원팀 : 산림청 T/F팀으로 편성

\* 숲가꾸기 자문팀 : 임학계, 국립산림과학원, 민간단체로 구성

\* 지자체별로 숲가꾸기 지원, 자문팀 구성·운영

※ 현장토론회를 실시하고 지원, 자문팀의 현장 처방전 제시

▶ 저소득 계층 및 청년실업자를 숲가꾸기 사업에 고용하는 공공산림정비사업을 실시합니다.

- 도시 농·산촌 지역 저소득 계층 및 청년실업자를 대상

\* 기술교육 이수자를 중심으로 자활영립단을 구성, 시범운영

\* 산림관련 대졸자 등을 선발하여 현장지도요원으로 활용

- 도로변, 댐·호수 등 공공(公共)산림을 중심으로 사업장을 권역화

\* 경부고속도로(서울-대전)구간 가시권구역 산림에 대한 숲가꾸기 우선 추진

\* 관리소홀 등으로 적기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공공(公共)산림을 대상으로 숲가꾸기 추진

## (63) 품질인증 절차 일원화 및 임산물 안전성 강화

산림청 임산물이용과 (042-481-4206~7)

▶ 임산물 품질인증 절차를 일원화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 현재 임산물 품질인증은 산림청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국립산림과학원의 시험·검사를 거쳐 산림청에서 인증을 결정

- 2005년 중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 임산물 품질인증 업무를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하여 신청서 접수, 시험·검사, 인증절차를 일원화

▶ 임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추진하고, 수요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산림소득 및 목재관련 융자금의 운영체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친환경 임산물 생산자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여 임산물의 안전성 확보

- 사업별로 구분되어 운영되던 목재관련 융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산림소득종합자금 융자대상에 분재 운영자금 및 수액 생산자금 지원 추가

## (64)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및 지역주민 소득사업 지원

산림청 산림보호과 (042-481-4291)

- ▶▶ 백두대간보호지역이 지정되어 효율적으로 보호·관리됩니다.
  - 백두대간 중 생태계·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
    - \* 핵심구역 : 백두대간 능선을 중심으로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 \* 완충구역 :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 핵심구역의 보호상 필요한 지역
    - ※ 보호지역 안에서는 공용·공공용 시설 및 주민생활과 관계되는 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각종 개발행위 제한
- ▶▶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 제한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보호지역 지정 및 지역주민 소득사업을 지원합니다.
  -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원칙과 기준에 따라 지자체·지역주민·NGO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보호지역 지정
    - \* 지역주민 설명회·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의견 수렴
  - 보호지역 지정으로 인하여 사유재산권 제한·개발기회 감소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소득증대를 위한 특화사업 추진
    - \* 지원규모 : 32개 시·군, 72억원(국비 70%, 지방비 30%)

## (65) 테마별 산림피해 중점단속 강화

산림청 산림보호과 (042-481-4242)

- ▶▶ 테마별 단속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형’ 감시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 테마별 세부 유형에 따라 시기와 방법을 달리하여 기획 단속을 강화
    - \* 월별 테마단속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민·관 합동으로 추진
  - 시민단체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공개 모집하여 암행감시원으로 활용
    - \* 홈페이지([www.foa.go.kr](http://www.foa.go.kr))에 ‘산림피해 등 불법행위 신고’ 코너를 개설하여 불법행위 신고 등 국민 참여를 활성화
- ▶▶ 중앙과 지방에 ‘산림사범 기동반’을 조직하여 운영합니다.
  - 중앙과 지방(시·도, 지방청)별 기동반을 조직하여 운영
    - \* 산림청(5명), 16개 시·도(80명), 5개 지방청(25명)에 설치
  - 신고·고발 및 진정사건에 대해 신속한 조사·처리로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 기동반의 지휘체계를 확립하여 시·도와 지방청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상호협력관계로 운영

## (66) 대형산불 방지를 위한 진화능력 향상

산림청 산불방지과 (042-481-4253)

▶▶ 산불진화 통합지휘체계를 구축하여 일사분란한 지휘시스템이 도입됩니다.

- 산황단계별로 매뉴얼화, 휴대용수첩 제작 배부
- 표준상황판 및 소속식별 조끼의 보급
- 공중과 지상간 통신유지
- 중앙 현장지원단 운영

▶▶ 산불전문 인력의 확충으로 예방 및 진화능력 향상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확충(3,008명 → 3,940명)
  - ※ 시·군, 관리소별 인원 : (2004년) 16명 → (2005년) 20명
- 진화대 운영 내실화
  - \* 산불진화대원 진화지침(SOP) 발간
  - \* 전국 산불경진대회 개최(연1회)

## (67) 사방지 식재수종 변경 및 해안 방풍림 조성

산림청 치산과 (042-481-4271)

▶▶ 사방사업지에 산주가 원하는 수종을 식재하겠습니다.

- 기존의 사방지 식재 수종인 아까시, 오리나무, 리기다 에서 산주의 희망수종을 식재토록 추진
  - \* 과거 황폐지 복구시와는 토질여건 등이 달라졌음
  - \* 경제성을 감안 심근성 수종인 참나무류와 소나무 등 우선 식재
  - \* 산주의 희망과 토질여건을 감안하여 특용수종의 식재를 확대추진

▶▶ 해안침식지에 방풍림이 조성됩니다.

- 국토보전 및 해안경관 증진을 위하여 해안침식지복구사업 시행지에 방풍림 조성을 의무화
  - \* 대묘를 3열 이상 식재하도록 추진

## (68)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강화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02-3148-6621)

▶▶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강화됩니다.

- 현재 내항화물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대상 선박에 대하여 선박의 크기, 선령 등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없음
  - \* 1척 이상이면 등록가능, 단, 석유·화학류를 운송하는 사업인 경우에만 총톤수합계를 100톤 이상으로 제한함
- 2005년 상반기부터는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선박 1척 이상. 다만, 100톤 이상의 선박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톤수합계가 500톤 이상’으로 강화
  - \*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선박으로 사업하는 사업자 중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선사에 대하여는 3년간의 경과규정을 두었고, 장기 운송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 또한, 선령 15년(폐기물운반선은 17년) 이상의 선박은 내항화물운송사업의 신규등록이 제한됩니다.

▶▶ 이러한 조치는 연안화물선 업체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선대 규모화 및 노후 중고선의 시장진입을 다소 제한함으로써 연안화물선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69)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권익보호 강화

해양수산부 선원노정과 (02-3148-6631)

▶▶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사합의(2004.8.26)한 제도개선 사항을 2005년에 시행합니다.

- 선원의 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고 유급휴가를 2일 확대
- 유급휴가제 적용이 배제된 1년 이상 장기 승무 어선원에게도 유급휴가제 도입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의 항행 중에도 선원의 쟁위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선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
- 어선의 선원법 적용범위를 현행 25톤 이상에서 20톤 이상으로 확대하여 양질의 선원노동 정책 혜택을 받도록 함
- 또한, 선원의 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보험, 공제 또는 기금에의 가입을 의무화

▶▶ 9.11 테러 이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추진한 선원 생체(지문)인식정보 수록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선원신분증명서제도’를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이에 따라, 외국항만을 출입하는 우리나라 선원은 국제협약에서 규정한 선원신분증명서를 소지하게 되어 외국항만에서 상륙 및 승선, 통과여행 등에서 편의를 제공받게 됨

## (70) 육상양식(종묘생산) 어업 허가제로 전환

해양수산부 양식개발과 (02-3148-6963)

- ▶ 육상양식(종묘생산) 어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됩니다.
  - 바닷물을 이용하여 육상에서 수산동식물을 기르거나 어린 종묘를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에 신고만으로 어업이 가능하였고 구체적인 시설기준이 없었음
  - 그러나, 육상양식 어업의 무분별한 신규진입으로 인하여 어업재해나 연안 환경오염발생 우려 제기
  - 이에 따라, 육상양식(종묘생산)어업에 대해서는 육상양식 및 종묘생산에 필요한 일정규모의 시설이나 장비를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허가제로 전환
  - \* 구체적인 시설규모 및 시설기준은 관련법에서 위임한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해양수산부령)』에 규정할 예정
- ▶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육상양식어업은 적조(赤潮)방제 및 해양오염방지 시설을 갖추게 되어 어업재해나 연안 환경오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최근 중국이나 일본 등에서의 수산물 수입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업계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 6. 정보·통신

### (71)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제도 시행

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 (02-750-1263)

- ▶ 일일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보호 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합니다.
  -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각종 청소년 유해정보가 유통되고 있어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 형성에 악영향
  - 이에 따라 정부는 정보통신망상의 각종 불법·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보호를 강화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자율규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제도’를 신설
- ▶ 이 제도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로 하여금 청소년보호업무를 담당할 책임자를 지정·운영토록 함으로써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 \*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2005년 4월 시행 예정)

## (72) 전화·모사전송을 통한 광고 발송시 수신자의 사전 동의 의무화

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 (02-750-1263)

- ▶ 전화, 모사전송기기에 무분별하게 전송되는 광고메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신자의 사전동의 없는 광고발송을 금지하는 등 스팸메일 규제가 강화됩니다.
- 스팸 전화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전에 광고 수신을 허용한 사람 이외에는 광고발송을 할 수 없도록 금지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간시간대(21~08시)의 광고성 메일 발송을 제한함으로써 국민들의 사생활 평온 보호
- \*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2005년 4월 시행 예정)

## (73)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확대 시행

정보통신부 통신안전과 (02-750-1373)

- ▶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은 가입자가 번호를 변경하지 않고도 서비스의 요금, 품질 등을 비교하여 원하는 통신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공정경쟁 환경조성 및 장기적으로 소비자 편익 등을 위해 사업자 별로 시차를 두어 시행

- \* 2004년 1월 1일부터 SKT가입자가 KTF나 LGT로 번호이동 가능
- \* 2004년 7월 1일부터 KTF가입자가 SKT나 LGT로 번호이동 가능

- ▶ 2005년 1월 1일부터는 LGT 가입자에 대한 번호이동이 확대 시행됨으로써 이동전화에 있어서의 번호이동이 전면 시행됩니다.

- 번호이동 신청은 단말기와 신분증을 가지고 원하는 통신회사의 인근 대리점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 \* 번호이동 수수료 : 1,000원

## (74) 인터넷전화서비스 시장 출시

정보통신부 통신안전과 (02-750-1371)

- ▶ 인터넷전화는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시내외 요금 구분 없이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정부는 2004년 9월 인터넷전화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 및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전화를 기간통신역무로 지정하고, 착신번호용 서비스 식별번호로 070을 부여하기로 하는 등 각종 제도 정립하기로 하였음
- 2004년 12월말부터 품질평가를 통과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전화용 가입자 번호 부여
- ▶ 2005년 1월부터는 착신이 가능하고 요금도 저렴하며 일정 수준이상의 품질도 보장된 인터넷전화서비스가 일부 별정통신사업자들을 통해 제공될 예정입니다.



- 요금은 기존 전화보다는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며, 서비스 내용도 영상전화 등 기존 전화보다 다양할 것으로 기대(사업자 자율 책정 사항)

▶▶ 2005년 상반기에 인터넷전화 기간통신사업자가 허가되면 보다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7. 의료·복지

### (75) 사회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 (02-503-7565)

▶▶ 기초생활보장 급여액이 늘어납니다.

- 수급자 선정과 급여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가 평균 8.9% 인상
  -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전원 합의된 인상률이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가장 높은 수치
-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2004년 월 105만 5,000원에서 113만 6,000원으로 인상되며, 소득이 없는 4인 가구의 경우 2004년 매달 최대 92만 9,000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2005에는 최대 97만 2,000원을 생계비 및 주거비로 지급 받을 수 있음

- 근로능력가구에 대한 장제급여비 인상

\* 2004년 30만원 → 2005년 40만원

#### <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

(단위 : 원)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최저생계비  | 401,466 | 668,504 | 907,929 | 1,136,332 | 1,302,918 | 1,477,800 |
| 현금급여기준 | 343,498 | 571,978 | 776,833 | 972,256   | 1,114,789 | 1,264,419 |

※ 현금급여기준 : 소득이 없는 수급자가구가 매월 받을 수 있는 최대급여액

\* 개별가구의 급여액은 현금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

▶▶ 수급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보호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가 축소됩니다.

-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축소되어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 확대

\* 2005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의 범위 축소, 현재 생계를 달리하는 할아버지, 손자녀 가정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보호 실시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76) 고령화사회에 대비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정책과 (02-503-6235)

- ▶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령사회 대비체계의 마련과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 고령사회 대비 고용과 소득, 건강과 의료, 주거와 안전, 교육과 문화, 산업과 금융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적인 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 서민·중산층 노인을 위해 실버(고령 친화적)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나갑니다.
  - 실버산업육성위원회 운영을 통해 주거·용품·의료·금융 등 분야별 산업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
  - 금융·세제지원, 규제완화, R&D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 「고령친화적신산업의육성지원에관한법률」 제정 추진
- ▶ 노인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노인 소득보장 및 여가선용,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 노인을 위한 일자리 10만개를 창출·지원
  - 전국 16개 시·도별로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여 노인 취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 ▶ 경로당 운영지원 수준을 확대하여 노인들이 보다 풍부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 개소 당 6만원의 운영비와 함께 난방비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
- ▶ 치매 등 만성질환 노인을 위한 의료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많은 노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간병·수발 등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전문요양시설 25개소, 요양시설 6개소, 중산·서민층 노인을 위한 실비노인요양시설 등 53개소와 치매요양병원 7개소 등 총 91개소 신축
    - \* 요양시설·요양병원 : 2004년 447개소 → 2005년 538개소
- ▶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치매·중풍 등 만성질환노인들을 지역사회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56개소 신규 확충
- ▶ 농어촌복합노인복지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도시은퇴 인구의 농어촌 회귀 희망육구 충족 및 농어촌 지원대책을 마련합니다.
  - 농어촌에 주거·의료·여가·재가 등 복지기능과 소득창출을 위한 생산기능을 갖춘 복합노인복지타운을 3개 지역에 조성

- ▶▶ 2007년 도입·시행될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 7월부터 전국 5~6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요양보호필요 저소득 노인 1,500여명을 대상으로 평가판정체계, 요양보호수가, 케어매니저먼트 등 요양보장제도의 주요내용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

## (77) 생명윤리 및 안전 보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02-503-7548)

- ▶▶ 대통령소속 하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신설됩니다.
- 생명윤리 관련 쟁점사안에 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 하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두고, 윤리적·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와 기술의 허용여부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 배아연구기관·유전자은행·유전자치료기관 등 해당기관 내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신설됩니다.
- 배아연구기관·유전자은행 및 유전자치료기관 등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당해 기관의 연구계획서에 대한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인유전정보 보호대책 등을 자율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조치

- ▶▶ 배아생성 의료기관의 지정제도가 신설됩니다.
- 배아생성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후 운영할 수 있음
- ▶▶ 배아연구기관의 등록 및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제도가 신설됩니다.
- 배아연구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후 운영할 수 있으며, 배아연구를 행하는 때에는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배아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조치
- ▶▶ 체세포복제 배아연구기관의 등록 및 체세포복제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제도가 신설됩니다.
- 체세포복제 배아연구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후 운영할 수 있으며, 체세포복제 배아연구를 행하는 때에는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체세포복제 배아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조치
- ▶▶ 유전자검사기관 등의 신고제도가 신설됩니다.
- 유전자검사기관 등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후 운영할 수 있으며,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하여 피검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유전자검사는 금지되고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검사는 유전질환의 진단 목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음

▶ 유전자은행의 허가제도가 신설됩니다.

- 유전자은행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인력 및 장비기준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운영할 수 있으며, 유전정보를 이유로 교육·고용·승진·보험 등 사회 활동에 있어서 타인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유전정보보호를 강화

\* 관련법규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 시 행 일 : 2005년 1월 1일

## 8. 환 경

### (78)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실시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02-2110-6927)

- ▶ 2005년 1월 1일부터 도시 지역에서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은 바로 매립할 수 없으며, 소각·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만 매립하여야 합니다.
  - 음식물류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경우 악취, 해충, 침출수 등 2차 환경오염과 매립지 사용연한 단축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최대한 감량하고 자원화하는 정책에 따라 1997년 도시지역 음식물류폐기물의 직매립 금지(1997.7.19일 『폐기물시행규칙』 개정)
- ▶ 환경부는 동 제도의 시행에 대비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과 적정처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 가정 및 음식점에서의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및 철저한 분리 배출에 대한 교육·홍보사업을 지속 실시하여 2003년 현재 발생량은 11,398톤/일로 1997년 발생량(13,063톤/일)에 비해 13% 감소하였으며, 분리수거율은 1997년 10%에서 87%로 향상
  - 또한 1996년부터 지자체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국고를 지원, 2004년 말 현재 총 11,335톤/일의 처리시설을 확보하여 도시 지역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 가능(도시 지역 발생량 : 10,772톤/일)

- ▶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는 환경보전 및 매립장 사용연한 연장을 통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등을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또한 자원의 절약과 재이용 등을 통해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현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 (79) 저공해자동차 보급 및 구매 의무화

환경부 대기총량제도와 (02-2110-7927)

- ▶ 2005년 1월부터 수도권 지역에서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및 구매가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
  - 최근 3년간 대기관리권역에서 자동차를 연평균 3천대 이상(승합 및 화물차 300대 이상) 판매한 사업자는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 승인을 얻어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하도록 조치
  - 또한 대기관리권역에 있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10대 이상 차량 보유)에서는 자동차를 새로이 구매할 경우에는 20% 이상 저공해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하였음
  - ※ 저공해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 자동차를 구매하는 자에게 저공해자동차 구매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100% 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임

## (80)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및 보호지역내 행위제한

환경부 자연정책과 (02-2110-6739)

- ▶ 2005년 1월 1일부터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백두대간\*의 남측 구간인 향로봉에서 지리산까지 684Km에 대한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마루금을 기준으로 양측으로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 되는 백두대간보호지역이 지정·고시되며, 동 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제한이 실시됩니다.
  - \*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설악산·태백산·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
  - ‘핵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 국방·군사시설, 도로·철도·하천 등 공용·공공용시설, 생태통로 등 자연환경보전시설, 산림보호·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과 임업시험연구시설,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복원·보수 등, 대체에너지 이용·보급시설, 일정 조건 하의 광산개발,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계되는 일정 조건하의 시설 등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완충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 핵심구역에서의 허용행위, 수목원·자연휴양림 등 산림공익시설, 임도 등 산림경영 관련시설, 교육·연구 및 기술개발 관련시설, 일정규모 이하의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종교시설 증·개축, 전력·석유 또는 가스공급시설 등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81)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금강, 영산강수계까지 확대 시행

환경부 유역제도과 (02-2110-6837)

- ▶▶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2005년에는 금강, 영산강수계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 \* 2004년 8월 부산·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2008년 8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 중
- 2005년도에는 낙동강 수계의 市지역, 금강 및 영산강수계의 광역시·시 지역 중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8월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 ※ ‘수질오염총량관리제’란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허용부하량을 산정하여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오염물질 배출량을 허용부하량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임
- ▶▶ 오염총량관리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총량제 시행지역에 대한 지원 및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2004년부터 시행된 부산·대구광역시의 오염물질 삭감대책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에 대한 기술 지원을 강화할 계획
  - 2005년 시행대상 지자체의 8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오염총량제 시행경험 공유를 위한 혁신 워크숍 개최, T/F 구성 운영 등 유관기관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

## (82) 밀렵된 야생동물을 먹는 자도 처벌

환경부 자연자원과 (02-2110-6746~7)

- ▶▶ 밀렵된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도 2005년 2월 10일부터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포획되거나 사육된 동물을 먹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 \* 밀렵되거나 밀수된 수달, 반달가슴곰, 사향노루, 산양, 삵, 담비, 물개, 물범류, 흑기러기, 큰기러기, 가창오리, 뜰부기, 구렁이, 멧토끼, 오소리, 너구리, 고라니, 노루, 멧돼지, 쇠기러기,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고방오리, 쇠오리, 아무르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 자라, 살모사, 까치살모사, 능구렁이, 유혈목이 등 32종을 그 사실을 알면서 먹는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새, 짐승, 뱀, 개구리 등)은 허가 없이 포획할 수 없고, 불법포획된 동물의 취득도 금지되어 있으나 보신문화로 인해 밀렵수요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먹는 자까지 처벌 확대
  - ※ (현행) : 불법포획·반입한 야생조수 취득·양여·운반·보관 금지  
(변경) : 불법포획·반입한 야생동물 취득·양도·양수·운반·보관 금지  
(취득에 먹는 행위 포함)
- ▶▶ 불법포획한 야생동물 먹는자 처벌 규정은 야생동물 밀렵의 수요를 차단하여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원인 야생동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 (83) 대규모 국책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실시

환경부 국토환경보전과 (02-2110-6696)

- ▶▶ 2005년 1월 1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500억원 이상의 대형 국책사업에 대하여 환경부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 현행 : 산업단지, 하천정비계획 등 일부사업에 대해서 사전환경성검토
  - 변경 : 댐, 철도, 댐, 운하, 항만 등 500억원 이상의 모든 국책사업을 포함
- ▶▶ 아울러, 도로건설공사의 경우 고속도로는 타당성조사단계에서 일반국도 등 도로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도로노선 선정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합니다.
- ▶▶ 환경부는 국책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환경관련 전문가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주요한 환경문제가 조기에 이슈화되어 결려질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갈등요인을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 일반국도 등은 도로노선 선정단계에서 노선의 적정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방안 등을 검토함으로써 도로개설로 인한 산림 훼손, 생태축 단절 등 환경문제에 대해 근원적으로 대응할 계획

## 9. 건설·교통

### (84) 분양가상한제 및 택지채권입찰제 도입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02-504-9133)

- ▶▶ 내년 2월말 이후 공공택지 안에서 건설되는 85제곱미터(25.7평)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 토지수용 등을 통하여 공익목적으로 개발·조성한 택지에서 건설되는 소형주택은 무주택자 등에게 저렴한 가격에 우선공급되도록 조치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공공기관 건설 주택에 대하여는 분양가의 주요항목을 공개토록하여 주택분양절차를 투명화하고 입주자의 알권리를 보장
- ▶▶ 공공택지를 분양받을 때 현재는 감정가액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85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입찰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주택건설사업자의 개발이익의 상당부분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새롭게 신설되는 제3종 국민주택채권의 채원은 향후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게 되어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



## (85) 기업도시 개발 제도의 시행

건설교통부 기업도시과 (02-2110-8452)

- ▶ 기업의 투자촉진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기업이 필요한 곳에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이용하여 주도적으로 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개발이 집중되지 않은 지역에 산업은 물론 주택·교육·의료·문화 시설 등 복합적 자족기능의 도시를 기업이 직접 개발 가능
  - \* 특별법은 기업활동에 필요한 지역에 직접 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41개 법률, 88개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원스톱 처리가 가능
  - \* 기업도시는 4개 유형으로 개발 :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 혁신거점형
- ▶ 기업도시는 도시개발과 직접적인 산업투자가 함께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도시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개발제도의 일대 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낙후된 지역의 경기활성화와 수도권외의 과밀화 억제,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86) 철도청, 2005년부터 한국철도공사로 전환

건설교통부 철도정책과 (02-504-9029)

- ▶ 국가기간수송수단으로 '서민의 발'인 철도가 2005년을 맞이하면서 정부기관인 철도청이 운영하던 체제에서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체제로 새롭게 바뀝니다.
- 철도청은 1963년 9월 1일 교통부 외청으로 발족되면서 지난 41년여 동안 철도건설과 영업을 담당하여 왔으나, 영업력의 저하로 철도수송의 지속적 약화와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영업적자 발생 등 문제 노출
- 철도시스템의 효율화와 철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3년 「철도산업발전기본법·한국철도시설공단법·한국철도공사법」 등 법률 제정
  - \* 철도건설은 2004년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담당하고, 열차운행 등 철도운영은 2005년 1월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에서 담당하도록 조치
- ▶ 한국철도공사는 고속철도 시대에 부합하는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철도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경영을 목표로 2005년 1월 5일 창립행사를 갖고 힘차게 닳을 올릴 예정입니다.
- ※ 열차운행지역 및 시간표, 철도운임은 변화가 없으므로 철도이용에 대한 혼란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10. 교육·문화·여성

### (8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재정지원과 (02-2100-6365)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봉급·경상·증액교부금을 단일 교부금으로 통합하고, 교부금의 법정교부율을 현행 내국세의 13%에서 19.4%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 국세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양여금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교부금의 재원으로 가산
- 의무교육기관 봉급교부금이 폐지됨에 따라 교원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인건비 소요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교부율 보정
- ▶▶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봉급전입금을 폐지하되, 해당금액 만큼을 시도세에 반영하여 시도세 전입금 비율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 서울 : 봉급전입금 + 시세 총액 3.6% → 시세 총액 10%
- 광역시, 경기도 : 봉급전입금 + 시도세 총액 3.6% → 시도세 총액의 5%
- 기타 도 : 도세 총액 3.6% → 현행과 같음

### (88) 주5일수업제 월1회 실시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과 (02-2100-6245)

- ▶▶ 2005년 3월부터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주5일수업제가 월1회 실시 됩니다.
- 정부는 학교의 주5일수업제를 사회적·교육적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할 방침
  - \* 2004년도 전국의 1,023개교(10%)에서 주5일수업제를 월1회 우선 시행한 바 있음
- 주5일수업제 월1회 실시에 따라 학교의 연간 수업일수는 감축 운영할 수 있지만, 학교별로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시간배당 기준을 준수해야 하므로 학교의 수업량에는 변화 없음
  - \* 즉, 토요일업일의 수업을 주중에 당겨서 실시하거나, 행사 시간수의 감축 및 방학일수 감축 등으로 수업시간수 확보
- ▶▶ 주5일수업제가 확대 실시될 경우에 대비하여 교육과정의 수정·보완을 검토하고 있으며, 2006년 이후 계획은 2005년 중에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단계적 확대 실시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89) EBS 수능강의 질 개선 대책 지속 추진

교육부 교육정보화기획과 (02-2100-6545)

- ▶▶ 교육부는 2004년 4월 1일부터 개통된 'EBS 수능강의' 서비스의 화질을 300K에서 600K로 대폭 개선하여 사교육비 경감 및 학교교육 내실화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 'EBS 수능강의'에 대한 학생·학부모 등 정책고객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체제를 기본적인 VOD 및 LMS 서비스에서 동영상 학습자료 Meta DB화, 개인학습 Blog System, 문제은행식 자기진단학습시스템 구축 및 동영상재생기 인덱스 기능으로 대폭 개선
  - 콘텐츠 제작면에서도 수능 프로그램의 수준별·제재별·요구별 특화, 내신 프로그램 강화, 인성 및 비교과프로그램을 개발
- ▶▶ 이 외에도,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일부 교재를 통합·축소하여 교재구입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현장공개강의'를 확대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 (90) 도서정가제 허용범위 축소

문화관광부 출판산업과 (02-3704-9639)

- ▶▶ 2005년 1월 1일부터 실용도서는 도서정가제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실용도서 : '실무에 관련된 실용적인 내용의 도서',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어떤 목적을 가진 수험서적'을 말함 (국립중앙도서관이 규정한 한국문헌번호 편람)
  - 출판및인쇄진흥법 제2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일 1년 이내의 모든 도서는 정가판매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2년 12월 31일에 고시된 바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허용되는저작물의범위'에 따라 실용도서는 제외
  - 실용도서는 2005년부터, 초등학생용 학습참고서는 2007년부터 연차적으로 도서정가제 적용 해제를 고시한 바 있음
  - 고시 제정 당시 도서정가제 규정이 실효되는 2008년 2월 26일 이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허용범위를 재지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 실용도서는 유통과정에서 책표지에 부착되어 있는 국제표준자료번호(ISBN)의 다섯자리 부가기호로 구분되며,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10자리에 5자리의 부가기호를 덧붙여 한국문헌번호를 구성
  - 5자리 부가기호 중 제1행을 독자대상번호라고 하며 실용도서는 '1'로 표기

# < ISBN 부가기호 체계 및 실용도서의 범위 >

## • 실용도서의 범위

\* ISBN의 5자리 부가기호 중 제 1항 독자대상기호가 1번인 도서

(예) 8 9(국가번호)-9 5 4 3 2 1(발행자번호)-0(서명식별번호)-1(체크기호)

—— 1(독자대상기호) 3(발행형태기호) 8 1 0(내용분류기호)  
(5자리 부가기호)

## < 독자대상기호 >

| 기호 | 내 용              | 설 명                                                                             |
|----|------------------|---------------------------------------------------------------------------------|
| 0  | 교 양              | • 일반독자층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주로 전문적인 내용을 비전공 일반독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풀어쓴 교양 도서              |
| 1  | 실 용              | • 주로 실무에 관계된 실용적 내용의 도서<br>•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서<br>•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어떤 목적을 가진 수험서적 |
| 2  | 여 성              | • 여성을 대상으로 한 도서                                                                 |
| 3  | (예 비)            |                                                                                 |
| 4  | 청 소 년            | • ‘학·참 1’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도서                                        |
| 5  | 학·참 1<br>(중·고교용) | •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습참고서                                                       |
| 6  | 학·참 2<br>(초등학생용) |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습 참고서                                                           |
| 7  | 아 동              | • ‘학·참 2’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도서                                   |
| 8  | (예 비)            |                                                                                 |
| 9  | 전 문              | • 주로 학술·전문적인 내용의 도서                                                             |

# (91)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여성부 보육지원과 (02-3703-2723)

▶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 보육시설 이용아동(92만명) 중 45%(41만명)가 보육료 지원 혜택 수혜

\* 저소득층 0~4세 아동에 대한 차등보육료 단계를 기존 3층에서 4층으로 늘려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60% 수준까지 확대(신규지원 9만명, 지원액 확대 14만명)

\* 지원비율도 기존 100, 60, 40%에서 100, 80, 60, 30%로 확대

• 만5세児 무상보육료 지원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0% 이하 대상자까지 확대

\* 2004년 : 8만 7,000명 → 2005년 : 9만 5,000명으로 확대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장애아동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

\*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장애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2004년 4,000명 → 2005년 9,000명)

• 두 자녀 이상 보육시설 이용시 둘째児 이상에 대해 보육료 추가로 지원

\* 3만명 대상, 아동당 3~6만원

▶ 보육료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보육비용 부담을 대폭 경감함으로써 모든 아이들에게 균등한 보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 (92) 보육시설 설치기준 강화

여성부 보육기획과 (02-3703-2715)

▶▶ 보육시설 설치 인가제로 변경됩니다.

- 현재는 보육시설 설치시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5년 1월 30일부터 인가제로 변경

\* 설치기준 적합 여부, 해당지역의 보육수요와 보육시설의 입지조건 등을 현지 확인 후 인가 결정

▶▶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이 강화됩니다.

- 보육정원을 최대 300인까지로 하고,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내에 보육시설 설치를 제한
- 보육시설 면적을 영유아 1인당 3.63㎡에서 4.29㎡로, 보육실 면적을 영유아 1인당 모두 2.64㎡로 강화
- 보육실은 1층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건물전체가 보육시설인 경우(영아반은 반드시 1층에 설치)와 사업장내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층과 3층에 보육실 설치 가능
- \* 기존에 2층과 3층에 설치된 보육시설은 1년 이내에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면 계속 운영 가능

## 11. 행정·법무

### (93)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전면시행

행정자치부 복무과 (02-3703-4553), 분권지원과 (02-3703-4850)

▶▶ 7월부터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 일반 행정기관의 경우 주5일 근무로 모든 토요일 휴무

※ OECD 30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주 40시간 근무 실시

▶▶ 주 40시간 근무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 지난해부터 공무원의 동절기(11~2월) 퇴근시간 17시를 하절기와 동일하게 18시로 연장
- 2006년부터는 현행 공무원 연가일수(최대 23일)를 재직기간 3년 이상은 2일, 재직기간 3년 미만은 1일 축소

▶▶ 휴무토요일에도 필수적인 행정서비스는 유지됩니다.

- 일반 행정기관은 휴무토요일에 기관별로 '토요일민원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국민편의 제공
- 의료원·각급기관의 민원실 등 대민 서비스기관, 박물관·도서관 등 국민생활이용기관이나 경찰서지구대·소방서 등 상시 근무체제 유지기관은 휴무토요일에도 지속적으로 행정서비스 제공

변경되는 주요이슈 63

## (94) 국민의 정보공개청구 편의를 위하여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의무화

행정자치부 제도혁신과 (02-3703-4663)

- ▶▶ 7월 30일부터 국민의 정보공개청구 편의를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목록으로 작성·비치합니다.
- 목록 자체에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목록으로 작성·비치
- 정보목록은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하여 누구나 열람 가능

## (95) 시·군·구청에서도 인감증명 발급가능

행정자치부 주민과 (02-3703-4878)

- ▶▶ 2005년 1월 17일부터는 전국 읍·면·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시·군·구청에서도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의 모든 읍·면·동과 시·군·구에 온라인 시스템 구축으로 인감업무의 전산화가 완료되어 전국적 인감증명 발급이 가능해짐
- 이에 따라 현행 읍·면·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시·군·구청에서도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음

- ▶▶ 민원인들이 특정 발급기관을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함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게 되었습니다.

- 시·군·구청에 인·허가 민원을 접수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때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다시 시·군·구를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
- 그러나, 인·허가 민원서류 접수시 즉시 발급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민원편익이 증대됨

## (96) 인감증명발급사실확인시스템 운영

행정자치부 주민과 (02-3703-4878)

- ▶▶ 2005년 1월 17일부터는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은 수요기관에서 인감증명발급사실확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감증명 발급사실에 대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산권 행사시 중요한 기초서류로 사용되는 인감증명서는 위·변조 등으로 인해 금융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바, 보다 근본적인 인감사고 예방을 위해 인감증명발급사실 여부를 수요기관에서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음

▶▶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은 은행·등기소 등 수요기관에서 대한민국 전자정부 홈페이지에 구축된 인감증명발급사실확인 서비스 창을 이용하여 발급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 인감사고 예방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확인절차의 간소화로 수요기관 요구를 충족하게 되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97)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추진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 (02-3703-5458)

▶▶ 재정력이 취약하고 낙후된 지역 70개 시군을 지원하여 전국이 개성있고 고르게 잘사는 균형발전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신활력지역에 매년 20~30억원씩 3년간 100억원 지원
- 지역대학, 기업, 연구소, NGO 등이 결집된 지역혁신체제를 구축, 내생적 발전 가능

### (98)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시행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503-7035)

▶▶ 그 동안 종이어음만이 발행·유통되던 것이 2005년 1월 1일부터 개인용 컴퓨터로 전자어음거래 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어음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전자어음관리기관이 관리하는 전자어음거래시스템에 등록하면 전자어음의 발행·배서·지급 및 소구에 이르는 모든 거래가 실시간 가능
-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발행인의 결제능력 정보 등을 제공하여 발행인의 결제능력을 사전에 알고 전자어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어음부도 등 부작용 최소화

※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자어음거래가 구현되도록 전자어음관리기관을 정기(수시)검사를 통해 철저히 감독할 방침

▶▶ 전자어음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종이어음 교환을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모든 전자어음 이용자와 거래내역이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보존되어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게 될 것입니다.

## (99)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시행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503-7035)

▶▶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는 유가증권의 거래과정에서 허위공시(분식회계 포함), 내부자거래, 주가조작, 부실감사로 다수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중 일부가 대표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고,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제도입니다.

\*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코스닥등록 회사 : 2005년 1월 1일부터 허위공시(분식회계 포함), 내부자거래, 주가조작, 부실감사 4가지 모두 시행 예정

\* 자산 2조원 미만인 상장·코스닥등록 회사 : 내부자거래, 주가조작은 2005년 1월 1일부터, 4가지 모두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소송제외 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들에게 기관력을 인정하며, 소송허가제, 원·피고 변호사강제주의, 소송대리인의 수임횟수 제한(최근 3년간 3건 이하) 등이 특징

▶▶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의 취지는 소액의 집단적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하는 한편,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100) 국민의 배우자에 대한 재입국 허가 제도 개선

법무부 체류심사과 (02-503-7101)

▶▶ 우리나라 국민에게 복수재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에게는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복수재입국 허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나, 국민의 배우자 외국인에게는 우대 정책의 일환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복수재입국을 전면 허용키로 하였습니다.

- 우리나라 국민의 배우자 외국인은 체류기간 내에 모국을 방문하거나 국외 여행을 하려는 경우 유효기간 1년 범위의 복수재입국 허가를 받으면 출국시마다 매번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이 해소
- 유효 여권을 소지하고 복수재입국 허가신청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치)를 작성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수수료 5만원 상당의 정부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복수재입국 허가 신청가능

▶▶ 다만,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복수재입국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종전과 같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수 재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2. 국방·병무

### (101) 박사과정 이수자 소위임용 최고연령 상향조정

국방부 인력관리과 (02-748-5130)

- ▶ 병역의무자의 학위취득 편의제공과 군내 우수인력 획득을 위해 박사과정 이수자의 소위임용 최고연령을 27세에서 29세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 현재 대학원 재학생은 28세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하나 장교(소위)의 임용연령은 27세로 제한되어 박사과정 이수자가 장교로 입대하지 못하고 병으로 입영하거나 전문 연구요원으로 복무하는 문제점 해소

### (102) 장병 RH(-) 혈액형 보유자 특별관리제도 실시

국방부 보건과 (02-748-6640)

- ▶ 군인 또는 일반국민이 희귀혈액을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이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2005년 1월 1일부터 장병 RH(-) 혈액형 보유자 특별관리 제도를 실시합니다.
- 평시 RH(-) 혈액형 보유장병 현황을 국방부와 각군 본부 및 지역 의무대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관리한 후 군에서 필요시 즉시 지원

- 일반국민은 대한적십자사 지역 혈액원을 통하여 지역의무대에 요청시 혈액 지원

※ 2004년 12월 현재 장병RH(-) 혈액형 보유자 : 860여명

### (103) 군 위성 TV 방송 실시

국방홍보원 영상기획편성실 (02-2079-3581)

- ▶ 디지털시대의 효과적인 장병 정신교육과 국방정책의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05년 10월부터 군 위성 TV방송을 실시합니다.
- 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TV를 이용, 별도의 TV채널을 확보하여 독자적인 국방TV 방송 실시

※ 2005년 8월 시험방송 후 10월 1일부터 본 방송 실시 예정

### (104) 국립묘지 안장대상 확대 및 안장 승인절차 간소화

국방부 인사근무과 (02-748-5160)

- ▶ 다양한 분야의 국가사회유공자 안장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의사상자, 순직소방관, 자발적으로 참여한 재외동포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됩니다(2005년 7월 시행예정).



▶ 국립묘지 안장신청 및 승인절차가 수기문서 처리에서 인터넷으로 전산처리 되고 처리기간도 대폭 단축됩니다(2005년 7월 시행 예정).

- 현재까지는 유가족이 보훈지청에 수기문서로 안장신청을 하였음
- 앞으로는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국방부에 신청하면 국방부와 현충원에서 동시처리, 그 결과를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알려주게 됨
- 처리기간도 종전 15~20일에서 1~3일로 단축

### (105) 고등학교 중퇴, 중졸 학력자 현역병 입영

병무청 징집과 (042-481-2733)

- ▶ 고등학교 중퇴와 중학교 졸업의 학력자도 현역병으로 입영합니다.
- 병역의무대상인 대한민국의 남자는 19세에 징병검사를 받아 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19세 또는 20세부터 현역병,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군 복무
  - 2004년도 징병검사에서는 종전과 달리 중학교 졸업과 고등학교 중퇴의 학력자도 신체등급 1급~3급이면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아 2005년부터 현역병으로 입영
- ※ 육군 기술특기병 모집의 경우에도 일부특기에 대하여 학력요건을 완화, 중졸 이상 신체등위 1~3급자도 모집요건을 갖출 경우 지원가능
- \* 해당특기 : 도자, 구레이다, 페이로다, 굴삭기운전

▶ 위와 같이 고등학교 중퇴와 중학교 졸업의 학력자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됨으로써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에 대비하고, 국민 개병주의에 입각한 군 복무의 형평성을 더욱 제고하게 되었습니다.

### (106)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 선택제 확대시행

병무청 소집과 (042-481-2785)

- ▶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 선택제도가 200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 종전에는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을 지방병무청에서 전산에 의거, 자동선발하여 소집통지 및 복무
  - 2004년 9월 1일부터 서울지방병무청을 대상으로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선택제도를 시범 운영하면서 문제점들을 보완, 200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
- \* 본인선택은 계획인원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지원서 접수시 안내사항 참조
- \*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은 병무청 홈페이지 (<http://www.mma.go.kr>)접속 ⇒ 전자민원창구 ⇒ 소집일자/복무기관 신청 클릭
- ▶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의 본인선택 확대시행으로 소집대상자의 편익제고 및 행정의 투명성 증진이 기대됩니다.

## (107) 국가보훈기본법 제정

국가보훈처 심사정책과 (02-2020-5161)

- ▶▶ 보훈의 목적과 이념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보훈 정책을 일관성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신규 보훈대상 범위결정 등 합리적인 보훈원칙 설정과 결정 심의 기구 및 절차 규정
- 보훈문화 확산정책의 활성화를 통해 나라사랑정신 확산사업의 효과적 추진 도모
- ▶▶ 국가보훈기본법의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 국가보훈의 기본이념과 국가·지자체·국민의 책무 규정
- 국가보훈업무 추진체계의 확립
  - \* 국가보훈발전계획의 수립·시행(5개년 계획)
  - \* 국가보훈위원회 구성·운영(국무총리소속)
  - \* 조사·연구기관의 설립근거 마련
- 보훈보상의 원칙 및 공훈선양정책
  - \*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보상의 기본원칙 명시
  - \* 기념·추모사업 실시, 보훈관련시설 설치·관리, 국제교류활동 강화 등

## (108) 독립유공자 발굴·포상확대

국가보훈처 공훈심사과 (02-2020-5233)

- ▶▶ 학계의 연구성과와 국외 사료발굴을 통해 독립운동으로 새롭게 평가되는 활동의 심사기준을 재정립하여 재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 국내·외 사료발굴·분석을 통해 기존의 포상 보류자와 신규발굴자 재심사 및 역사기록 보존차원의 정리 긴요
- ▶▶ 적극적인 포상을 위해 계기포상을 연 3회로 확대하고, 포상보류자재심사 및 공적자료 정리, 사료수집 활동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 ▶▶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이렇습니다.
- 『전문사료발굴·분석단』 운영(2005년 1월 1일)
  - \* 독립유공자 포상과 관련된 역사적 지식과 자료해독능력을 지닌 전문가 15명으로 편성
- 광복 60주년 계기 포상 확대
  - \* 기존 8·15계기 독립유공자 포상 확대
  - \* 3·1절, 8·15, 순국선열의 날 계기 등 연 3회 실시
- 포상보류자 공적 정리
  - \* 2004년 재정립된 심사기준 적용자 및 추가자료 발굴자 등 포상보류자 재심사

- \* 미포상자 공적자료 연구·정리 및 역사기록 보존차원의 공적사항 자료집 발간 보존

### ● 사료수집 활동 강화

- \* 사료수집위원 지역별 거주자 중심으로 개편, 인센티브 부여
- \* 지역별 사료수집 용역 : 2개 권역 선정 집중발굴 실시

## (109) 보훈중앙병원 건립

국가보훈처 의료지원과 (02-2020-5282)

▶▶ 서울보훈병원을 3차 진료를 수행하는 첨단 보훈중앙병원으로 건립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양질의 의료지원과 신뢰받는 보훈의료 전달체계 실현하겠습니다.

▶▶ 3차 진료기능 수행능력 확보기반을 구축하고, 건축공사에 대비한 안정적 진료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인허가, 설계 등 건립공사의 차질 없는 수행하겠습니다.

▶▶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법적·제도적 여건 조기조성

-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반영(건설교통부)
- \* 교통·환경영향평가, 각종 인허가 등 조기 확정

### ● 안정감 있고 유기적 진료기능을 갖춘 병원 건립안 확정

- \* 편리하고 간결한 동선 확보 및 각종 시설 배치
  - 서울대 분당병원, 연세대 의료원 등 최근 신축건물 사례 벤치마킹
- \* 국제수준의 설계 공모를 통한 우수설계안 마련
- \* 가능한 연내에 실시설계까지 완료추진

### ● 보훈중앙병원 건립 전담부서 운영

- \* 보훈공단 내 '보훈중앙병원 건립준비단' 설치·운영
- \* 대형병원 건립·운영분야 및 보훈의료분야 전문가의 노하우(Know-How) 습득

### ● 우수의료진 확충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 국내대학 연계, 성과급 확대 등 전문의 확충기반조성
- \* 기존 의료진의 국내외 연수 강화 등 자질향상 노력
  - 보훈의학회를 통한 전문연구 활성화, 해외학술대회 참석 등 최신기법 습득 및 진료연계 추진
- \* 뇌·척수·고엽제 전문센터 육성에 대비한 국내유수병원의 전문진료센터 운영사례 등 심층 분석

### ● 공사착공에 대비한 진료대책 준비

- \* 공사진행에 따른 소음 등 진료 불편 사항 사전파악
- \* 진료차질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보완책 마련

## (110) 국가유공자 대부지원 확대

국가보훈처 복지지원과 (02-2020-5295)

▶▶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주거안정을 위해 무주택자에게 주택의 우선공급은 물론 이에 수반되는 대부금이 적어 대부금 기여율이 낮으므로 대부재원 범위내에서 대부한도액을 최대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 긴급 가계자금에 필요한 경우, 대부금 수요가 급증하므로 생활안정대부 지원인원을 확대하여 긴급한 지원사유 발생시 대처
- 대부지원인원 확대 및 대부한도액 인상으로 대부수혜 비율·대부금 기여율 제고
- 국민임대주택 등 주택 우선공급물량 다수 확보로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에 기여
- 대부수혜자에 비용지원을 통해 민원인 비용부담 경감
  - \* 등기처리는 법무사에 위탁, 민원인 편의 제공
- 대부신청 경쟁률이 평균 3:1에 해당되므로 대부지원 후 3년 미경과자는 당해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이렇습니다.

- 대부지원 규모 : 13,940가구 1,200억원 , 대부이율 : 연 3%
- 상환기간 : 3~20년(대부종류별로 구분)

- 대부한도액 인상으로 기여율 상향조정

- \* 아파트분양대부금 : 1,200~1,500만원 ⇨ 2,000만원
- \* 주택임차대부금 : 1,300만원 ⇨ 1,500만원
- \* 주택개량대부금 : 500만원 ⇨ 600만원

- 긴급가계자금 지원인원 확대

- \* 생활안정대부 : 7,200가구 ⇨ 8,500가구(증 1,300가구)

- 대부재산 및 담보재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말소)시 등기비용 지원

- \* 지원규모 : 3,140건(설정등기:900건, 말소등기:2,240건)
- \* 지원금액 : 1건당 5~12만원
- \* 예산액 : 2억 2,000만원(1건당 5~12만원)
- \* 처리방법 : 관내 지정법무사에 위탁

## 13. 기 타

### (11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제도개선

통일부 정착지원과 (02-3703-2376)

▶ 정착금 지급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전체 지급수준은 유지하면서 기본금은 월최저임금액의 160배에서 100배로 축소하고 가산금은 40배에서 50배로 상향조정
-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 의지 및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직업훈련 수료, 취업기간 등을 고려한 장려금 제도를 신설하여 월최저임금액의 최고 50배 지급

※ 1인 세대 기준 실지금액

| 구 분    |    | 현행(2004) | 개선(2005) |
|--------|----|----------|----------|
| 총 정착금  |    | 2,800만원  | 1,000만원  |
| 초기 정착금 |    | 560만원    | 300만원    |
| 분기 분할금 | 기간 | 5년       | 2년       |
|        | 금액 | 120만원    | 100만원    |

\* 주거지원금은 기존 760만원에서 실비 지급으로 개선

▶ 주거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기존의 영구임대주택에 국민임대주택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주거지원 확대

▶ 교육지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교육지원기간을 설정하여 거주지보호기간 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후 5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여야 교육지원
- 전문기술 및 지식습득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전문대학의 지원연령을 기존 35세 제한에서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한편, 평생교육시설, 직업전문학교에 대한 연령무제한 지원도 명시

▶ 고용지원금 신청 및 지급 주기를 조정하였습니다.

-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고용주가 신청하는 고용지원금의 신청과 정부의 지급을 기존 매월에서 매분기로 조정하여 민원 편의 및 행정간소화 도모

## (112) 「개성공업지구방문및협력사업승인절차」 간소화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운영지원과 (02-3703-7431)

▶▶ 개성공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력사업 승인 및 남북왕래절차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 개성에서 추진하는 협력사업의 경우, 승인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
-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 처리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  
단수방문증명서 신청자인 경우 필요시 신원진술서 제출 생략
-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개성공단을 방문할 때마다 해야했던 방북신고를 폐지하고, 통일부장관에게 출입계획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방문이 가능하도록 함

# 부처별 신·구제도와 법규 대비표

## 재 정 경 제 부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  | 자료상에 대한 처벌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자료상에 대해</li> <li>- 2년 이하의 징역</li> <li>&lt;신 설&gt;</li> <li>&lt;신 설&gt;</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 이하의 징역</li> <li>○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처벌</li> <li>○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계산서 자료상에 대해서도 처벌</li> </ul>                           | 조세범처벌법§11의2<br>(2005.1.1)     | 조세정책과<br>☎02)<br>2110-2146    |
| 2  |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쿠폰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 <신 설>                                                                                                                                            | ○ 중소기업이 경영컨설팅쿠폰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금액의 7%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br>§5의3<br>(2005.1.1) | 조세지출예산과<br>☎02)<br>2110-2153) |
| 3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확대            | ○ 창업중소기업세액 감면 대상 업종 : 20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업종에 기술계학원을 추가</li> <li>○ 창업요건을 완화하여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자산(토지·건물포함)을 30% 이하 인수·매입 후 동종사업 영위시 창업으로 인정</li> </ul>                                | 조세특례제한법<br>§6<br>(2005.1.1)   | 조세지출예산과<br>☎02)<br>2110-2153) |
| 4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인상 및 적용기준 변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 : 5~15%</li> <li>○ 본사의 소재지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액감면율 인상 : 10~30%</li> <li>○ 본점 및 사업장소재지가 모두 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경우에만 수도권외 지역 감면비율을 적용</li> </ul>                                              | 조세특례제한법<br>§7<br>(2005.1.1)   | 조세지출예산과<br>☎02)<br>2110-2153) |
| 5  | 기업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확대 및 감면율 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대상 : 구매전용카드 등</li> <li>○ 30일 이내 결제분에 한하여 0.3 % 세액공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대상 확대</li> <li>- 구매론 및 네트워크론 추가</li> <li>○ 60일 이내 결제분에 대하여 세액공제</li> <li>- 30일 이내 결제분 : 0.3%</li> <li>- 60일 이내 결제분 : 0.15%</li> </ul> | 조세특례제한법<br>§7의2<br>(2005.1.1) | 조세지출예산과<br>☎02)<br>2110-2153)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6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br>대상 확대 | ○ERP, EC, SCM, CRM 등에 투자시<br>7%(대기업 3%) 세액공제(임차<br>방식은 공제 불가)                    | ○중소기업이 생산성향상을 위해 전사적기업자원관리<br>(ERP) 설비를 임차방식(ASP)으로 이용하는 경우<br>이용비용의 7%를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br>§24<br>(2005.1.1)   | 조세지출예산과<br>☎02)<br>2110-2153) |
| 7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율<br>인상   | ○투자금액의 7% 세액공제                                                                   | ○세액공제율 10%로 인상                                                                | 조세특례제한법<br>§25의2<br>(2005.1.1) | 조세지출예산과<br>☎02)<br>2110-2153) |
| 8  | 환경·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br>대상확대  | ○환경보전시설 등 투자시 3%<br>세액공제                                                         | ○기술유출방지설비 및 해외자원개발설비 추가                                                       | 조세특례제한법<br>§25<br>(2005.1.1)   | 조세지출예산과<br>☎02)<br>2110-2153) |
| 10 | 화물운송망 이용 운송용역비<br>세액공제 | <신 설>                                                                            | ○화물운송공동전산망을 통하여 화물운송을 위탁하는<br>경우 위탁운송비의 0.3%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br>공제              | 조세특례제한법<br>§104<br>(2005.1.1)  | 조세지출예산과<br>☎02)<br>2110-2153) |
| 11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투자<br>확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투자시<br>원칙적으로 투자세액공제 배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정보통신장비, 기술유출<br>방설비 투자시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투자세액<br>공제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br>§130<br>(2005.1.1)  | 조세지출예산과<br>☎02)<br>2110-2153) |
| 12 | 연구및인력개발비세제지원<br>확대     | ○대학, 연구기관 등에 위탁 및<br>공동기술개발하는 연구개발비에<br>대하여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br>공제 및 연구인력개발준비금<br>손금산입 | ○영리연구법인, 산학협력단,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br>영위하는 기업에게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하는 비용에<br>대해서도 세제지원   | 조세특례제한법<br>시행령§8<br>(2005.1.1) | 조세지출예산과<br>☎02)<br>2110-2153) |
| 13 | 근로자의 표준공제 확대           | ○근로자는 증빙을 통한 특별공<br>제와 별도의 지출증빙이 필요<br>없는 표준공제 중 선택<br>- 표준공제 : 연 60만원           | - 표준공제 확대 : 연 100만원<br>*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는 종전대로 연 60만원임                         | 소득세법§52<br>(2005.1.1)          | 소득세제과<br>☎02)<br>2110-2163)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4 |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br>비과세적용대상자 확대             | ○월정액 급여가 100만원 이하인<br>공장·광산·어업·운수관련<br>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에<br>대해 비과세 |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대상 근로자에<br>배달 및 수하물운반종사자를 포함                                      | 소득세법시행령<br>§17<br>(2005.1.1)    | 소득세제과<br>☎02)<br>2110-2163) |
| 15 | 교육비공제대상 범위 확대                           |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등의<br>정규교육과정 수업료 등 교육비<br>공제                     | ○본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 포함<br>*고용보험법령에 의해 지원되는 근로자수당지원금은 공제<br>대상에서 제외                         | 소득세법§52<br>(2005.1.1)           | 소득세제과<br>☎02)<br>2110-2163  |
| 16 | 기부금모집단체의 기부금<br>영수증발급대장 작성·보관<br>의무 부여  | <신 설>                                                           | ○종교단체, 학술단체 등 기부금모집단체는 연100만원<br>이상 기부한 자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기부<br>자의 인적사항 등을 5년간 작성·보관 | 소득세법§160의3<br>(2005.1.1)        | 소득세제과<br>☎02)<br>2110-2163  |
| 17 | 금융기관의 근로자 연말정산<br>자료 보관·제출의무 부여         | <신 설>                                                           | ○금융기관은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발행한 연말정산<br>소득공제자료를 5년간 작성·보관                                       | 소득세법§160의4<br>(2005.1.1)        | 소득세제과<br>☎02)<br>2110-2163  |
| 18 | 소득세율 인하                                 | ○종합소득세율 : 9~36%<br>○이자·배당소득세율 : 15%                             | ○종합소득세율 : 8~35%<br>○이자·배당소득세율 : 14%                                                   | 소득세법§55<br>(2005.1.1)           | 소득세제과<br>☎02)<br>2110-2163  |
| 19 | 현금영수증제도 실시                              | <신 설>                                                           |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현금거래도 과세관청에 통보<br>○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용카드거래<br>금액과 합하여 소득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br>§126의2<br>(2005.1.1) | 소득세제과<br>☎02)<br>2110-2163  |
| 20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br>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br>상향조정 | ○소득공제적용을 위한 신용카드<br>등 최저사용금액<br>: 총급여액의 10%                     |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신용카드 등 최저 사용금액 상<br>향조정 : 총급여액의 15%                                       | 조세특례제한법<br>§126의2<br>(2005.1.1) | 소득세제과<br>☎02)<br>2110-2163  |
| 21 |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br>제도 개선                   | ○의료비에 대해서는 의료비소득<br>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br>소득공제의 이중공제가능             | ○근로소득 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의료비 소득공제액에<br>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불인정                              | 조세특례제한법<br>§121의2<br>(2005.1.1) | 소득세제과<br>☎02)<br>2110-2163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22 | 의제배당에 포함되는 자본<br>준비금의 범위 조정 | <신 설>                                                                                              | ○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br>인 채무면제이익을 포함                                                                                                          | 법인세법§16<br>(2005.1.1)     | 법인세제과<br>☎02)<br>2110-2170 |
| 23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br>개선         | ○ 차입금보유시 수입배당금 익금<br>불산입에서 차감하는 금액<br>- 자회사 등에의 출자와 관련된<br>차입금의 이자중 익금불산입<br>비율을 감안하여 계산한 금액       | ○ 타법인주식 관련 차입금 이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br>- 차입금 이자 중 익금불산입비율 및 자회사(다른 내<br>국법인)에의 출자금액이 지주회사(당해 내국법인)<br>의 자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감안하여 계<br>산한 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상당하는 금액 | 법인세법§18의2,3<br>(2005.1.1) | 법인세제과<br>☎02)<br>2110-2170 |
| 24 | 일반법인간 배당에 대한<br>익금불산입율 조정   | ○ 지분비율(비상장법인: 50%,<br>상장법인 등: 30%) 초과시<br>익금불산입률은 50%                                              | ○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인 경우 자회사의<br>배당에 대해 익금불산입률을 100%로 상향조정                                                                                            | 법인세법§18의3<br>(2005.1.1)   | 법인세제과<br>☎02)<br>2110-2170 |
| 25 | 기준초과차입금 지급이자<br>손금불산입제도 폐지  | ○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차<br>입금을 보유하는 상장·등록<br>법인에 대해<br>- 기준초과차입금 부분에 대한<br>지급이자를 손금으로 불인정               | <폐 지>                                                                                                                                                 | 법인세법§28<br>(2005.1.1)     | 법인세제과<br>☎02)<br>2110-2170 |
| 26 | 명목회사에 대한 소득공제<br>대상 범위 확대   | ○ 유동화전문회사 및 투자회사<br>등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br>배당시 소득공제                                                  |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br>투자목적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위탁관리<br>부동산투자회사 추가                                                                                 | 법인세법§51의2<br>(2005.1.1)   | 법인세제과<br>☎02)<br>2110-2170 |
| 27 | 재해손실세액공제 제도 개선              | ○ 자산총액의 30%이상 상실된 경<br>우 세액공제금액(산출세액 ×<br>재해상실비율)은 한도없음                                            | ○ 세액공제 한도금액을 재해손실금액으로 규정                                                                                                                              | 법인세법§58<br>(2005.1.1)     | 법인세제과<br>☎02)<br>2110-2170 |
| 28 | 현금영수증 제도                    | ○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br>서 미가입자는 세무서장이 과<br>세표준 경정가능<br>○ 신용카드가맹점은 국세청장이<br>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할 수<br>있는 대상가맹점 |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 추가<br><br>○ 현금영수증가맹점 추가                                                                                                              | 법인세법§66<br>(2005.1.1)     | 법인세제과<br>☎02)<br>2110-2170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29 | 채권이자소득에 대한<br>원천징수제도 개선 | ○채권을 중도매도하는 경우<br>- 채권매도자는 보유기간 동안<br>발생한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br>채권가격에 전가(의제원천징수)<br>- 채권의 최종보유자는 채권의<br>전기간 보유분에 대하여<br>소득세를 원천징수 | ○채권의 중도매도자·최종보유자 모두 자신이 채권을<br>보유한 기간 중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br>실제로 원천징수                              | 법인세법§73<br>(2005.7.1)    | 법인세제과<br>☎02)<br>2110-2170 |
| 30 | 원천징수세율 인하               | ○법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금액<br>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br>원천징수세율 15%                                                                         | ○ 14%로 인하                                                                                          | 법인세법§73<br>(2005.1.1)    | 법인세제과<br>☎02)<br>2110-2170 |
| 31 |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br>인하     | ○미납부금액의 10%                                                                                                                | ○다음 중 큰 금액<br>① 미납기간 1일 1만분의 3(미납부금액의 10%를<br>한도로 함)<br>② 미납부금액의 5%                                | 법인세법§76<br>(2005.1.1)    | 법인세제과<br>☎02)<br>2110-2170 |
| 32 | 법인설립 변경신고기한             |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 ○15일 이내                                                                                            | 법인세법§109<br>(2005.1.1)   | 법인세제과<br>☎02)<br>2110-2170 |
| 33 |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            | <신 설>                                                                                                                      | ○대한적십자사가 수행하는 혈액사업                                                                                 | 법인세법시행령§2<br>(2005.1.1)  | 법인세제과<br>☎02)<br>2110-2170 |
| 34 | 소액미술품에 대한 즉시상각<br>의제    | <신 설>                                                                                                                      | ○취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장식·환경미화 등을<br>위해 사무실·복도 등 여러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br>상시비치하는 미술품에 대하여는 취득시점에 비용으로<br>처리 | 법인세법시행령§31<br>(2005.1.1) | 법인세제과<br>☎02)<br>2110-2170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35 | 업무관련 서화·골동품 범위            | ○ 업무관련 자산에 해당되는<br>서화·골동품의 범위<br>- 장식·환경미화 등에 사용되는<br>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업무와<br>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 - 장식·환경미화 등에 사용하기 위해 사무실·복도 등<br>여러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49<br>(2005.1.1) | 법인세제과<br>☎02)<br>2110-2170 |
| 36 |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 <신 설>                                                                                        | ○ 배드뱅크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인정<br>- 시·도지사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적립<br>기준에 따라 적립하는 금액 | 법인세법시행령§61<br>(2005.1.1) | 법인세제과<br>☎02)<br>2110-2170 |
| 37 |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br>손금산입대상 확대   | <신 설>                                                                                        | ○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추가                                                           | 법인세법시행령§63<br>(2005.1.1) | 법인세제과<br>☎02)<br>2110-2170 |
| 38 |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대상<br>확대     | ○ 법인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br>한법률 등에 의하여 국가 등으로<br>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용<br>자산을 취득한 경우 자산가액을<br>손금산입       | ○ 한국철도공사가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국가 등으<br>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은 취득한 경우<br>추가          | 법인세법시행령§64<br>(2005.1.1) | 법인세제과<br>☎02)<br>2110-2170 |
| 39 | 감정가액에 의한 시가산정방법<br>개선     | ○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시가가 불<br>분명한 경우<br>-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br>시가로 함                                      | - 감정가액이 2이상인 경우 그 평균액                                                      | 법인세법시행령§89<br>(2005.1.1) | 법인세제과<br>☎02)<br>2110-2170 |
| 40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대여금<br>범위 명확화 | ○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br>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해<br>당여부 판정시 적용이자율<br>-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여<br>한 경우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 자회사의 범위에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를 포함                                                | 법인세법시행령§89<br>(2005.1.1) | 법인세제과<br>☎02)<br>2110-2170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41 | 부당사의유출에 대한 소득처분<br>방법 보완                 | ○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br>유출한 금액의 소득처분<br>－ 수정신고여부 관계없이 그 실<br>질에 따라 소득처분                                                                                                           | － 세무조사통지 수령 전에 수정신고하고 회사에 납입시<br>사내유보로 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106<br>(2005.1.1)       | 법인세제과<br>☎02)<br>2110-2170 |
| 42 | 금융기관의 채권 등<br>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 ○ 금융기관의 채권 등 이자소득에<br>대하여 원천징수                                                                                                                                                | ○ 금융기관의 채권 등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면제                                                                                                                                                | 법인세법시행령§111<br>(2005.7.1)       | 법인세제과<br>☎02)<br>2110-2170 |
| 43 |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br>적용시 이자율                | <신 설>                                                                                                                                                                         | ○ 미납기간 1일당 1만분의 3                                                                                                                                                             | 법인세법시행령§119<br>(2005.1.1)       | 법인세제과<br>☎02)<br>2110-2170 |
| 44 |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br>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신 설>                                                                                                                                                                         | ○ 법무법인이 변호사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청산<br>소득 과세이연                                                                                                                                       | 법인세법시행령<br>§120의2<br>(2005.1.1) | 법인세제과<br>☎02)<br>2110-2170 |
| 45 | 계산서 미교부가산세 특례<br>적용                      | ○ 중도매인의 계산서 교부비율이<br>매출액대비 일정기준 초과시<br>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대상에서<br>제외                                                                                                                 | ○ 시장도매인에 대해서도 계산서 미교부가산세 특례<br>인정                                                                                                                                             | 법인세법시행령<br>부칙§19<br>(2005.1.1)  | 법인세제과<br>☎02)<br>2110-2170 |
| 46 | 장기저당담보 주택에 대한<br>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br>비과세 특례 | ○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br>유한 주택 양도시 비과세<br>－ 서울·과천·5대신도시(분당·<br>일산·평촌·산본·중동) :<br>2년 이상 거주요건 추가<br>○ 분양 등을 위해 합가하여<br>2주택이 된 경우<br>－ 합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br>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세<br>비과세 | ○ 연로자(60세 이상)로서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을<br>장기저당담보로 제공한 경우<br>－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거주요건(2년)<br>제외<br><br>－ 자녀와 합가함에 따라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br>그 장기저당담보로 제공된 주택은 자녀주택과 분리<br>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인정 | 소득세법시행령§154<br>(2005.1.1)       | 재산세제과<br>☎02)<br>2110-2178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47 | 물류기업간 전략적채휴를<br>위해 주식교환 등을 하는 경우<br>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 채휴기업의 주주가 보유주식<br>을 벤처기업 주식과 교환하거나<br>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br>양도소득세 과세이연<br>※ 적용기한 : 2006.12.31일까지                                                           | ○ 물류기업간 전략적 채휴(채휴법인과 중소기업간)에<br>대해서도 같이 취급<br><br>※ 적용기한 : 2006.12.31일까지                                                | 조세특례제한법<br>§46의3 신설<br>(2005.1.1)                   | 재산세제과<br>☎02)<br>2110-2182 |
| 48 |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br>상속·증여시 할증과세 적용<br>제외          | ○ 경영권이 포함된 최대주주<br>주식을 상속·증여시 당해 주식의<br>평가액을 15%(지분율 50% 이하<br>10%) 할증하여 과세                                                                               |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06년까지 할증과세 대상에서<br>제외                                                                                    | 조세특례제한법<br>§100의4 신설<br>(2005.1.1)                  | 재산세제과<br>☎02)<br>2110-2182 |
| 49 | 투기지역내 토지수용시<br>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과세                   | ○ 투기지역내 부동산 양도시<br>실거래가로 양도세 과세                                                                                                                           | ○ 투기지역내에서 공익사업용지로 수용(협의매수 포함)<br>되는 경우 수용되는 토지를 당해 개발사업의 예정지구<br>지정일 전에 취득하고 2006.12.31일까지 사업시행자<br>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85<br>(2005.1.1)                           | 재산세제과<br>☎02)<br>2110-2178 |
| 50 | 중형 장기임대주택에 대한<br>양도세 중과 배제                     | ○ 1세대 3주택 이상자 및 법인이<br>보유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세<br>60%(법인세 30% 추가)로<br>중과하되<br>- 5호 이상 장기간(5·10년 이상)<br>임대한 257평 규모 및 양도당시<br>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장기임<br>대주택에 대하여는 중과 제외 | ○ 장기임대주택의 규모를 중형 규모(45평 이하)로<br>가액을 기준시가 6억원 이하로 확대                                                                     | 소득세법시행령<br>§167의3<br>법인세법시행령<br>§92의2<br>(2005.1.1) | 재산세제과<br>☎02)<br>2110-2178 |
| 51 |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br>보완                           | ○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br>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br>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br>- 다만, 사업자의 사망, 청산절차<br>진행 중인 경우 순자산가치로<br>평가 가능                                            | ○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의 범위를 규정<br>- 사업개시 전 법인<br>- 사업개시 3년 미만인 법인<br>- 휴·폐업 중인 법인<br>- 최근 3년간 계속 결손인 법인                   | 상속증여세법<br>시행령§54④<br>(2005.1.1)                     | 재산세제과<br>☎02)<br>2110-2178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52 | 공익법인의 광고·홍보 허용<br>범위 개선 | ○ 계열회사로부터 재산을 출연<br>받은 공익법인이<br>- 정당한 대가없이 팜플렛, 입장권<br>등에 내국법인의 명칭을 사용<br>하거나, 출연기업의 상품을<br>기념품으로 증정하는 경우<br>가산세 부과 | ○ 내국법인의 명칭만 사용하는 홍보나 출연기업의<br>상품을 기념품으로 증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br>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상속증여세법<br>시행령§38④<br>(2005.1.1)         | 재산세제과<br>☎02)<br>2110-2178        |
| 53 | 보험금지급자료 범위 축소           | ○ 보험금 지급자는 모든 보험금<br>지급자료를 분기익월말까지<br>세무서장에게 제출                                                                     | ○ 불입자와 수취인이 동일한 보험의 경우 보험금 1,000<br>만원 이상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자료를 제출                                                                                        | 상속증여세법<br>시행령§84①<br>(2005.1.1)         | 재산세제과<br>☎02)<br>2110-2178        |
| 54 | (★)종합부동산세 과세            | ○ 지방세로 보유세 과세<br>- 건물 : 재산세(7월)<br>- 토지 : 종토세(10월)                                                                  | ○ 부동산 보유세제를 이원화하여<br>- (1차) 시·군·구에서는 관할구역내 부동산에 대해<br>재산세 과세<br>- (2차) 전국의 부동산을 인별합산하여 일정액초과분에<br>대하여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과세<br>* 주택은 토지·건물 통합하여 시가기준으로 과세 | 종합부동산세법<br>(2005.1.1 예정)<br>* 법안 국회계류 중 | 부동산실무기<br>획단<br>☎02)<br>2110-2187 |
| 55 | 현금영수증 및 기명식선불카드<br>복권제  | ○ 신용카드 복권제<br><br><신 설>                                                                                             | ○ 현금영수증 및 기명식 선불카드 사용에 대하여 복권제<br>실시<br>○ 현금영수증 가맹 거부자에 대한 세무조사                                                                                    | 부가가치세법<br>시행령§62,§68<br>(2005.1.1)      | 소비세제과<br>☎02)<br>2100-2193        |
| 56 | 영세율 적용 범위 확대            | <신 설><br><br>○ 외국군주둔지내 관광특구에 대한<br>영세율적용시한 2004.12.31일까지<br>적용                                                      | ○ 외항선에 제공되는 컨테이너 수리용역에 대하여<br>VAT 영세율 적용<br>○ 2005.12.31일까지 연장                                                                                     | 부가가치세법<br>시행령§26<br>(2005.1.1)          | 소비세제과<br>☎02)<br>2100-2193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57 | 면세 적용범위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권추심업에 대한 면세적용 기한 : 2004.12.31일까지</li> <li>&lt;신 설&gt;</li> <li>&lt;신 설&gt;</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5.12.31일까지 면세적용기한 1년 연장</li> <li>○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일임업에 대하여 VAT면세 적용</li> <li>○ 장애인 재활을 위해 수입되는 이식용 각막에 대하여 VAT면세</li> </ul>                                                            | 부가가치세법<br>시행령\$33,\$46<br>(2005.1.1)                          | 소비세제과<br>☎02)<br>2100-2193 |
| 58 |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자 : 의제매입공제신고서와 계산서합계표 등 관련증빙</li> <li>○ 음식업자 : 계산서합계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자 : 의제매입신고서와 계산서합계표 등 제출</li> <li>○ 음식업자 : 의제매입공제신고서와 계산서합계표 제출</li> </ul>                                                                                                          | 부가가치세법<br>시행령\$62,\$74의2<br>(2005.1.1)                        | 소비세제과<br>☎02)<br>2100-2193 |
| 59 |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 | <신 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정사업본부가 제공하는 택배사업 추가</li> </ul>                                                                                                                                                        | 부가가치세법<br>시행령\$79의2<br>(2005.1.1)                             | 소비세제과<br>☎02)<br>2100-2193 |
| 60 |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개 이상의 사업장이 2개 이상의 관할지방국세청에 걸치는 경우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으로 주사업장 변경</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대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으로 주사업장 변경 가능</li> </ul>                                                                                                                                 | 부가가치세법<br>시행령\$5,\$5의2,\$6<br>(2005.1.1)                      | 소비세제과<br>☎02)<br>2100-2193 |
| 61 | 사업무관 매입세액    | <신 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비용 중 당해 사업자의 부담비율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업무관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li> </ul>                                                                                                                 | 부가가치세법<br>시행령\$60<br>(2005.1.1)                               | 소비세제과<br>☎02)<br>2100-2193 |
| 62 | 과세유형 전환      | <신 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과세사업장을 보유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간이과세 적용배제</li> <li>○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 사업장을 가진 경우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시점을 일반적인 과세유형전환 시점과 동일하게 적용.</li> <li>- 다만, 신규로 일반과세사업장을 개시하거나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 다음 과세기간부터 유형 전환</li> </ul> | 부가가치세법\$25<br>(2005.1.1)<br>부가가치세법<br>시행령\$74의2<br>(2005.1.1) | 소비세제과<br>☎02)<br>2100-2193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63 | 사업자별 신고·납부                                       | <신 설>                                                  | ○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을 갖춘 사업자는 전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4<br>(2005.1.1)         | 소비세제과<br>☎02)<br>2100-2193 |
| 64 | 우체국 택배사업 부가가치세 과세                                | <신 설>                                                  | ○ 우정사업본부가 제공하는 택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br>시행령§38<br>(2005.1.1) | 소비세제과<br>☎02)<br>2100-2193 |
| 65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확대                                    | ○ 금융업 중 투자자문업, 인적용역 중 결혼상담회사·신용조사업·애견훈련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                                                    | 부가가치세법<br>시행령§35<br>(2005.1.1) | 소비세제과<br>☎02)<br>503-9225  |
| 66 | 국민주택 규모(25.7평형)초과 공동주택 일반관리 및 경비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시한 연장 | ○ 2004년 12월말까지 부가가치세 면제                                | ○ 부가가치세 면제시한을 2005년말까지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br>§106<br>(2005.1.1)  | 소비세제과<br>☎02)<br>503-9225  |
| 67 | 민자로 건설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 국가, 지자체, 도시철도공사가 건설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               | ○ 영세율 적용대상 기관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추가                                       | 조세특례제한법<br>§105<br>(2005.1.1)  | 소비세제과<br>☎02)<br>503-9225  |
| 68 | 일반과세자가 보유하는 간이과세사업장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 배제 규정 보완         | ○ 일반과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간이과세 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 적용 배제(부가법 §25①)    | ○ 개인택시, 용달차 운송업, 이·미용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계속 간이과세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br>§106<br>(2005.1.1)  | 소비세제과<br>☎02)<br>503-9225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69 | 외국인기업전용단지<br>조세감면 신설         | <신 설>                               | ○ 외국인투자지역에 신규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br>법인세 등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br>- 감면요건 : 제조업(미화 1,000만불 이상), 물류업(미화<br>5백만불 이상) | 조세특례제한법<br>§121의2 및 동법<br>시행령§116의2<br>(2005.1.1) | 국제조세과<br>☎02)<br>2110-2204 |
| 70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br>사후관리 강화    | <신 설>                               | ○ 외국인투자신고 후 3년 이내에 외국인투자금액이<br>조세감면 해당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감면받았던<br>법인세 등을 추징                                            | 조세특례제한법<br>§121의5<br>(2005.1.1)                   | 국제조세과<br>☎02)<br>2110-2204 |
| 71 | 조세피난처 결정기준 변경                | ○ 1과세연도 조세부담비율로 결정                  | ○ 당해 과세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평균 조세<br>부담비율을 기준으로 결정                                                                   | 국제조세조정예관한<br>법률시행령§30<br>(2005.1.1)               | 국제조세과<br>☎02)<br>2110-2205 |
| 72 | 관세 월별납부의 납기 개정               | ○ 개별 납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br>초일까지 일괄하여 납부 | ○ 개별납기가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일괄하여 납부                                                                                     | 관세법§9<br>(2004.10.5)                              | 관세제도과<br>☎02)<br>2110-2213 |
| 73 | 세관의 국제우편물 과세에<br>대한 불복절차 간소화 | ○ 세관에 이의신청서 제출                      | ○ 납세고지서를 전달한 우체국에 이의신청서 제출로<br>가능                                                                               | 관세법§132<br>(2004.10.5)                            | 관세제도과<br>☎02)<br>2110-2213 |
| 74 | 환경오염방지 물품 관세감면               | ○ 대상품목 : 94개                        | ○ 대상품목 : 99개                                                                                                    | 관세법§95<br>(2004.7.1)                              | 관세제도과<br>☎02)<br>2110-2213 |
| 75 |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 ○ 대상품목 : 514개                       | ○ 대상품목 : 513개                                                                                                   | 관세법§95<br>(2005.1.1)                              | 관세제도과<br>☎02)<br>2110-2213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76 |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br>관세감면                                           | ○ 대상품목 : 289개<br>○ 감면기한 : 2004.6.30일까지            | ○ 대상품목 : 283개<br>○ 감면기한 : 2005.6.30일까지                                                                                                                                  | 관세법§9<br>(2004.7.1)                                   | 관세제도과<br>☎02)<br>2110-2213 |
| 77 | 기업의 경쟁력 강화, 물가안정<br>등을 위한 할당관세 적용                              | ○ 지원금액 : 1조 1,270억원<br>대상품목 : 100개 품목             | ○ 지원금액 : 1조 1,100억원<br>대상품목 : 96개 품목                                                                                                                                    | 관세법제71조의규정에<br>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br>관한규정(대통령령)<br>(2005.1.1) | 산업관세과<br>☎02)<br>2110-2223 |
| 78 | 중국 등과의 통상마찰요인<br>제거와 소비자 후생증대 등을<br>위한 조정관세 대상품목의<br>축소 및 세율인하 | ○ 대상품목 : 냉동낙지 등 20개<br>품목                         | ○ 대상품목 : 냉동홍어 등 19개 품목<br>- 조정관세 제외(1개) : 냉동낙지<br>- 세율인하(9개)<br>* 활농어, 활동, 당면, 표고버섯(50% → 45%)<br>냉동새우, 냉동오징어(30 → 27)<br>활민어(40 → 36), 메주(22 → 20)<br>전자부품장착기(18 → 16) | 관세법제69조의규정에<br>의한조정관세의적용에<br>관한규정(대통령령)<br>(2005.1.1) | 산업관세과<br>☎02)<br>2110-2223 |
| 79 | 증권회사에 신탁업 겸영 허용                                                | < 신 설 >                                           | ○ 신탁업법상 인가기준을 충족하는 증권사에 대해<br>신탁업 겸영을 허용<br>- 증권사의 업무영역 확대로 수익기반 확충 및 자산<br>관리업의 육성                                                                                     | 증권거래법시행령<br>(2005년 상반기 중)                             | 증권제도과<br>☎02)<br>2110-2440 |
| 80 | 유가증권 범위확대                                                      | < 신 설 >                                           | ○ 상법상 유한회사, 합자회사, 익명조합의 출자지분과<br>파생결합증권을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으로 추가<br>- 투자자 보호 강화 및 증권사의 투자은행으로의<br>성장기반 마련                                                                      | 증권거래법시행령<br>(2005년 상반기 중)                             | 증권제도과<br>☎02)<br>2110-2440 |
| 81 | 증권회사의 장외파생금융상품<br>업무범위 확대                                      | ○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 인가기준<br>: 자기자본 3,000억원 이상<br>< 신 설 > | ○ 자기자본 기준 삭제<br>○ 신용파생금융상품거래 허용                                                                                                                                         | 증권거래법시행령<br>(2005년 상반기 중)                             | 증권제도과<br>☎02)<br>2110-2440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82 | 증권사의 투자일임업 및 투자자문업의 수수료체계 개선                                              | ○고객의 예탁재산 총액 기준 수수료만 허용                                                                                  | ○전업사와 자산운용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수수료 제한을 삭제<br>- 증권사의 투자일임업과 자문업의 경쟁력 제고                                                                                            | 증권거래법시행령<br>(2005년 상반기 중)                                      | 증권제도와<br>☎02)<br>2110-2440 |
| 83 | 사모투자전문회사 (PEF*)제도 도입<br><br>* Private Equity Fund: Limited Partnership 인정 | < 신 설 >                                                                                                  | ○경영권 참여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모투자펀드 (PEF) 설립·운영 가능<br><br>- 자산운용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내자본을 육성할 수 있는 제반여건 조성 등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br>(2004.12월)                                       | 증권제도와<br>☎02)<br>2110-2438 |
| 84 | (★)국채이자의 소멸시효 변경                                                          | ○국채이자의 소멸시효를 2년으로 규정(원금 5년)                                                                              | ○국채이자의 소멸시효를 원칙적으로 5년으로 연장하되,<br>- 단, 1년 이내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는 3년으로 규정(원금 5년)                                                                               | 국채법 제17조<br>* 공포일로부터 3월 경과 후 시행<br><br>(2004.12.23일<br>법사위 제출) | 국고과<br>☎02)<br>2110-2359   |
| 85 | 국고금 통합관리                                                                  | ○회계별로 자금을 구분관리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경우<br>- 자금이 부족한 회계는 여유자금을 갖는 회계로부터 전용하거나<br>- 외부 일시차입(한국은행차입, 재정증권 발행) | ○일반회계와 자금운용이 독립성이 필요한 6개 특별회계를 제외한 16개 특별회계의 자금을 한국은행에 설치되는 통합계정을 통해 통합관리하고<br>- 통합계정에서 제외되는 특별회계와 공자기금의 자금도 상호예탁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br>- 정부내 자금을 최대한 활용 | 국고금관리법 개정<br>(2005.7.1)<br><br>(2004.12.23일<br>법사위 제출)         | 국고과<br>☎02)<br>2110-2357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86 | 국고채 종목 표기방법 변경                       | ○국고채의 종목표기가 발행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거래에 필요한 정보(표면금리, 잔존만기 등)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국고채 종목표기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국제거래에 중요한 정보가 되는 표면금리와 잔존만기를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br>- 국고채 거래의 편의를 제고하고 국제화를 촉진           |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 전문 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2004.6월)<br>* 국고채 종목표기는 2005년부터 적용 | 국고과<br>☎02)<br>2110-2357   |
| 87 | 국유재산관련 국가채권 관리강화                     | <신 설>                                                              | ○국유재산 임차시 임차인은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국가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 보험보증증서를 제출하여야 함<br>- 채납시 보증금이나 보험료로 채납임대료를 충당                | 국유재산법<br>(2005.7.1)                                                  | 국유재산과<br>☎02)<br>2110-2367 |
| 88 | 경쟁입찰을 통한 국유잡종재산 매각시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사용 의무화 | <신 설>                                                              | ○경쟁의 방법으로 국유잡종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co.kr)을 통해 입찰공고, 낙찰, 개찰선언 등 경매절차가 진행됨<br>- 효율적이고 투명한 매각과정 확보 | 국유재산법<br>(2005.1.1)                                                  | 국유재산과<br>☎02)<br>2110-2367 |
| 89 | 국유지 집단화를 위한 교환 허용                    | <신 설>                                                              | ○소규모 국유지를 공유지 또는 사유지와 교환하는 방법으로 집단화하기 위한 경우를 교환가능 요건에 추가                                               | 국유재산법<br>(2005.1.1)                                                  | 국유재산과<br>☎02)<br>2110-2367 |
| 90 | 재해시 국유재산 임대료 면제                      | <신 설>                                                              | ○천재지변 등 재해로 인해 국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대료를 면제하여 재해지역 주민 보호                                                   | 국유재산법<br>(2005.7.1)                                                  | 국유재산과<br>☎02)<br>2110-2367 |
| 91 | 재개발지구내 국유지매각대금 분할납부기간 연장             | ○매각대금 15년간 분할납부 가능                                                 | ○주택재개발지구내에 소재하는 국유지를 해당 주민(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 분할납부기간을 기존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              | 국유재산법<br>(2005.7.1)                                                  | 국유재산과<br>☎02)<br>2110-2367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92 | (★)경제자유구역제도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은 내국인 진료가 불가능함</li> <li>○ 경제자유구역청장은 5급 이하 공무원 전보권만 가짐</li> <li>○ 경제자유구역청은 외자유치·개발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도 담당<br/>예) 불법 주정차 단속, 지방세 부과·징수, 쓰레기 수거 등</li> <li>○ 경제자유구역내 건축물의 견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경제자유구역 특성을 감안하여 정할 수 없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은 내국인 진료 가능함</li> <li>○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계약직,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짐</li> <li>○ 경제자유구역청은 외자유치·개발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무만 수행</li> <li>○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서 달리 정할 수 있음</li> </ul> | * 2004.12.22일 현재<br>국회 심의 중 | 경제자유구역<br>기획단<br>대외홍보과<br>☎02)<br>3679-0393 |
| 93 | 수출입은행의 여신한도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열별 한도<br/>: 자기자본의 25%</li> <li>○ 기업별 한도<br/>: 자기자본의 20%</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열별 한도<br/>: 자기자본의 50%</li> <li>○ 기업별 한도<br/>: 자기자본의 40%</li> </ul>                                                                                                       | 수출입은행법<br>시행령<br>(2005년 중)  | 개발협력과<br>☎02)<br>2110-2579                  |

## 국 세 청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  | 현금영수증제도 | <신 설> | ○ 건당 5,000원 이상 현금결제를 하고 현금영수증 수취시<br>소득공제 및 보상금 혜택 부여 | 조세특례제한법<br>제126조의3<br>(2005.1.1) | 부가가치세과<br>☎02)<br>503-1713 |



## 관 세 청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  |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특별<br>통관절차 마련·시행 | ○구체적 통관절차 없음 |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구매, 수입되는 전자상거래물<br>품의 거래형태에 따라 납세의무를 질 수입화주 구분지정<br><br>○특별통관절차를 적용받을 업체 및 물품을 지정하여<br>목록통관, 간이신고 등 간편한 통관절차를 적용하고<br>원칙적으로 전산선별건만 검사하거나 통관심사를 완화 | 전자상거래물품등의<br>특별통관절차에<br>관한고시<br>(2005.1.1) | 특수통관과<br>☎042)<br>481-7835 |

## 조 달 청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  | 조달마일리지 제도 실시         | <신 설>                                                                                                    | ○ 조달청을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수 이용 고객에 대하여 1년간 조달 수수료 5~10% 할인을 적용                                                                                                                              | (2005.1.1 조달 요청<br>분부터)         | 경영법무<br>담당관실<br>☎042)<br>481-7084    |
| 2  | 수요기관 등록 업무의 일원화      | ○ 수요기관 등록 및 인증서 승인<br>업무를 각 지방조달청에서 담당                                                                   | ○ 정부조달콜센터에서 수요기관 등록 및 인증서 승인<br>업무를 전담                                                                                                                                                    | 조달청고시<br>제2002-6호<br>(2005.1.1) | 정부조달<br>콜센터<br>☎042)<br>481-7060     |
| 3  | 비축원자재 원클릭 서비스<br>실시  | ○ 실수요업체가 비축원자재를 구입<br>할 때 조달청과 금융기관을 직접<br>방문하여야 구입 가능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비축원자재를<br>구입<br>- 기존 거래은행과의 인터넷 뱅킹을 통한 대금납부<br>및 인터넷 뱅킹결과를 국가재정정보시스템으로 확인<br>- 고객 희망시 고객의 창고까지 문전배달 서비스 제공<br>○ 원클릭 서비스 전용 전자인증서비스 제공 및 원클릭<br>서비스 이용시 0.5% 염가 판매 | 조달청 비축사업<br>운영규정                | 원자재비축<br>계획담당관실<br>☎042)<br>481-7194 |
| 4  | 비축사업 지급보증제도 개선<br>시행 | ○ 비축원자재 이용 업체가 외상<br>구매시마다 지급보증을 제출<br>함으로써 지급보증 구비에 따른<br>비용부담 증가 및 불편 가중<br><br>○ 지급보증서를 직접 방문하여<br>제출 | ○ 포괄적 지급보증제도 도입 및 시행<br>- 보증기간과 보증한도를 사전에 설정하고, 동 기간 및<br>한도 내에서 수시 외상으로 비축원자재를 구입하고<br>대금을 납부하면 그 부분에 대한 한도가 부활되도록<br>운영<br>○ 지급보증서를 전자적으로 처리<br>- 보증기관과 온라인(g2b)으로 접수 및 반환              | 조달청 비축사업<br>운영규정                | 원자재비축<br>계획담당관실<br>☎042)<br>481-7194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5  | PDA를 통한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 제공 | <신 설>                                                                                        | ○ 이동이 잦은 기업인들의 입찰참가 편의를 위해 개인 휴대단말기(PDA, 무선노트북)를 통한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 개시                                                                                                                                                                     | (2005.1.1)                          | 정보관리과<br>☎042)<br>481-7501          |
| 6  | RFID를 이용한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 <신 설>                                                                                        | ○ 물품에 RFID 태그를 부착하여 취득·보관·사용상황을 실시간 추적관리<br>○ 조달청 보유물품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단계적으로 확대)                                                                                                                                                            | (2005.6월부터<br>시범 실시)                | 물자관리과<br>☎042)<br>481-7121          |
| 7  | IT시스템사업 패키지서비스 제공       | ○ 공공기관의 IT시스템 사업 추진시 조달청은 입찰 및 계약서비스만 제공                                                     | ○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업추진 전과정을 일괄하여 패키지서비스 제공<br>* 제안서 평가도 조달청이 직접 수행                                                                                                                                                                         | 조달사업에 관한<br>법률<br>(2005.5월 실시)      | 구매국<br>(IT용역팀)<br>☎042)<br>481-7214 |
| 8  |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시행           | ○ 국가계약법에 의한 『저가위주의 단일 낙찰자』 선정                                                                | ○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임                                                                                                                                                            | 조달사업에 관한<br>법률시행령                   | 구매국<br>(구매제도과)                      |
| 9  | ‘일괄·대안 입찰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시행 | ○ 현행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설계 책임은 발주자에게, 시공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는 일반 공사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일괄·대안입찰공사에도 적용 | ○ 일반공사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일괄·대안입찰공사에 적용하기에는 공사의 특성상 한계가 있어 규정의 해석상 혼란 및 분쟁을 사전 방지<br>- 입찰자에게 공사현장에 대한 측량 및 지질·지반조사와 공사현장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자료조사 의무를 부과하고, 입찰안내서의 내용을 설계 전에 검토하여 불분명한 사항 등은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질의하여 확인 후 설계토록 하여 책임소재 명확히 구분 | 일괄·대안입찰공사<br>입찰특별유의서<br>(2005.1.1.) | 시설국<br>계약과<br>☎042)<br>481-7347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시공병행공사(Fast-Track)의 경우 전체공사에 대하여 실시설계 부적격 판정시 인수가능한 부분만 준공하고 계약해지</li> <li>- 공사의 특성상 실시설계적격자의 결격사유 발생시 재입찰에 부칠 경우 장기소요에 따른 사업차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설계적격자가 부도 등으로 계약 체결을 할 수 없는 경우 적격심사 차 순위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li> </ul>                                                                                                                                                                                                                                                                            | 일괄·대안입찰공사<br>입찰특별유의서<br>(2005.1.1.) | 시설국<br>계약과<br>☎042)<br>481-7347 |
| 10 | ‘일괄·대안 입찰공사계약<br>특수조건’ 시행 | ○ 현행 ‘공사계약특수조건’은<br>설계책임은 발주자에게, 시공<br>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는 일반<br>공사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설<br>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일괄·<br>대안입찰공사에도 적용 | <p>○ 일반공사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설계와 시공을 책임<br/>지는 일괄·대안입찰공사에 적용하기에는 공사의 특<br/>성상 한계가 있어 규정의 해석상 혼란 및 분쟁을 사<br/>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서에 오류·누락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br/>상대자와 발주기관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구분</li> <li>-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br/>경우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li> <li>- 발주기관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가<br/>필요한 시기까지 인도하도록 하여 발주기관에 제공<br/>의무를 규정</li> <li>-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실시공정이 계획공정<br/>대비 30% 이상 지연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br/>하여 시공지체의 문제점 해소</li> <li>-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는 반드시 3일 이내에 지시<br/>사항을 서면으로 확인하여 구두지시에 의한 분쟁예방</li> </ul> | 일괄·대안입찰공사<br>계약특수조건<br>(2005.1.1.)  | 시설국<br>계약과<br>☎042)<br>481-7347 |

## 기 획 예 산 처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  |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신설   | ○ 각 중앙부처가 다수의 회계를<br>통해 균형발 분산 추진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균형발전관련사업<br>통합추진<br>○ 지자체가 사업우선순위를 정하는 지방주도의 예산편성                                                                                               | 국가균형발전<br>특별법 제30조<br>(2005.1.1)                                                                                               | 균형발전<br>재정총괄과<br>☎02)<br>3480-7011 |
| 2  | (★)기금 자산운용 체제 개편 | ○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주식·<br>부동산 투자 원칙 금지 예외<br>허용<br><br>○ 자산운용체제에 대한 특별한<br>규정 없음<br>- 기금별 사정에 따라 전문성<br>등의 수준차 큼 | ○ 기금관리기본법상 원칙 금지 조항 삭제 주식투자<br>허용<br>- 단, 개별 기금법상 금지되어 있는 14개 기금은 계속<br>투자 금지<br><br>○ 자산운용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 책임성 강화 체제<br>도입<br>- 자산운용위원회, 자산운용전담부서, 자산운용지침 등<br>도입 | 기금관리기본법<br>제3조제3항<br>(2005.1.1)<br>* 국회계류 중<br><br>기금관리기본법<br>제3조2, 제11조의3,<br>제11조의4 제14조 및<br>제15조<br>(2005.1.1)<br>* 국회계류 중 | 금융기금과<br>☎02)<br>3480-7967         |
| 3  | (★)민간투자제도 개선     | ○ 민간투자 대상범위 확대<br>- 민간투자 대상시설은 산업기반<br>시설 위주의 35개 시설                                                        | ○ 교육·문화 등 생활기반시설까지 대상범위 확대<br>- 학교시설·아동보육시설·자연휴양림·문화시설·<br>군주거시설·공공임대주택·노인요양시설·수목원<br>·보건의료시설 9개 추가                                                                |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br>(2005.1.1)<br>* 국회계류 중                                                                                         | 민간투자<br>제도과<br>☎02)<br>3496-5141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투자 사업방식의 다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민간투자법에 「건설-이전-운영」 「건설-운영-이전」 「건설-소유-운영」 방식만 명문화</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이전-임대』 방식을 법에 명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사업자는 주로 자금투자·건설을 담당하고 주무 관청이 시설운영을 담당하는 방식</li> </ul> </li> </ul>                                                                                                                                                                     |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br>(2005.1.1)<br>* 국회계류 중 | 민간투자<br>제도와<br>☎02)<br>3496-5141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간접자본투자회사 설립·운용에 관한 규정 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규율이 되었음</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투자법에 특례조항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매금지형 펀드로 한정</li> <li>- 신주발행 허용</li> <li>- 자본금의 30% 차입허용</li> <li>- 동일종목에 펀드 자산총액의 100% 투자허용, 동일 회사 발행주식의 100% 투자 허용</li> <li>- 발기설립 이외에 모집설립 허용</li> <li>-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의 의무요건 중 자회사에 대한 의무 출자비율(비상장 50%, 상장 30%) 적용 배제</li> </ul> </li> </ul> | 민간투자법 제5절<br>(2005.1.1)<br>* 국회계류 중    | 민간투자<br>제도와<br>☎02)<br>3496-5141 |

## 공정거래위원회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  | 지주회사제도 보완<br>- 선진국형 지주회사체제로의<br>전환유도를 위해 지주회사<br>체제의 투명성은 제고하되,<br>자주회사 설립·전환을 쉽게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주회사체제의 투명성 제고를<br/>위한 사항</li> <li>- 자회사간 출자허용</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쉽게<br/>하기 위한 사항</li> <li>- 부채비율(100%) 충족 유예기간<br/>: 1년</li> <li>- 현물출자, 분할·분할합병 등<br/>일정유형에 대해서만 위의<br/>유예기간 인정</li> <li>- 비상장 합작자회사에 대한<br/>자회사 지분율 요건 : 50%</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회사간 출자금지</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요건(비상장 50%,<br/>상장 30%)</li> <li>- 지주회사의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소유 금지</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년으로 연장</li> <li>- 모든 설립·전환유형에 유예기간 인정</li> <li>- 30%로 완화</li> <li>- 금융(일반)지주회사가 될 당시 소유하고 있던 비금융<br/>(금융)회사 주식에 대해 2년간의 처분유예기간 인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점규제및공정거래<br/>에관한법률 제8조의2<br/>제3항제2호<br/>(2004.4.1)</li> <li>○ 동법 제8조의2제3항<br/>제1호</li> <li>○ 동법 제8조의2제2항<br/>제3호</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법 제8조의2제2항<br/>제1호</li> <li>○ 동법 제8조의2제2항<br/>제1호</li> <li>○ 동법 제8조의2제2항<br/>제2호</li> <li>○ 동법 제8조의2제2항<br/>제4호</li> </ul> | 독점정책과<br>☎02)<br>503-9122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2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합리적 개선<br>-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졸업 기준 도입 및 예외인정제도 보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투명경영을 유도할 수 있도록 4가지 졸업기준을 마련</li> <li>- 자산총액·재무구조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집단</li> <li>- 지주회사에 대해 적용제외</li> <li>○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인정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li> <li>- 상시적 구조조정 촉진 및 기업 애로 경감을 위해 인정된 현물 출자·영업양도, 물적분할, 분사 등에 대한 예외인정 2003.3월말로 시한만료</li> <li>- BTO(Build Transfer Operate) 및 BOT방식에 대해서만 적용 제외</li> <li>-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의 예외인정 범위 :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모든 외국인투자기업</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견제장치를 잘 갖춘 지배구조 모범기업</li> <li>- 출자구조가 단순하고 계열회사수가 일정 수 이하인 기업집단</li> <li>- 지배주주의 소유와 지배간 괴리가 작은 기업집단</li> <li>-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해서도 적용제외</li> <li>- 예외인정 부활</li> <li>- BOO(Build Own Operate) 방식의 SOC사업 민간 투자법인에 대한 출자에 대해서도 적용제외</li> <li>- ‘단일 외국인지분이 1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 (특수관계인 포함)으로 예외인정요건 강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법 제10조제7항</li> <li>○ 동법 제10조제1항 본문</li> <li>○ 동법 제10조제1항 본문</li> <li>○ 동법 제10조제7항</li> <li>○ 동법 제10조제1항 제4호</li> <li>○ 동법 제10조제6항 제1호</li> <li>○ 동법 제10조제1항 제3호</li> </ul> | 기업집단과<br>☎(02)<br>503-9124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3  | 계열금융사 의결권행사범위 축소    | ○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원칙적으로 보유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임원임면, 정관변경 등 일정한 경우에 발행주식 총수의 30% 까지 의결권 행사 허용 | ○ 임원임면 등 일정한 경우의 의결권 행사 허용범위를 15%로 축소<br>- 2006.4.1일부터 3년 동안 매년 5%씩 단계적 축소             | ○ 동법 제11조제3호                                     | 기업집단과<br>☎(02)<br>503-9124 |
| 4  | 비상장·비등록기업공시의무 강화    | <신 설>                                                                                                         | ○ 자산 2조이상 기업집단 소속 비상장·비등록회사의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및 경영활동 관련 중요사항 공시 의무화                        | ○ 동법 제11조의3                                      | 기업집단과<br>☎(02)<br>503-9124 |
| 5  | 기업결합심사제도 효율화        | ○ 대규모회사의 주식취득에 의한 기업결합 : 사후신고<br>○ 심사연장기간 60일<br><br><신 설>                                                    | ○ 사전신고로 전환<br><br>○ 90일로 확대(최초 30일 포함시 총 120일)<br>○ 소규모 기업결합(자산총액 및 매출액 30억원 미만) 신고 면제 | ○ 동법 제12조제6항<br><br>○ 동법 제12조제7항<br>○ 동법 제12조제1항 | 기업결합과<br>☎(02)<br>507-1934 |
| 6  | 카르텔에 대한 과징금 최고한도 인상 | ○ 관련 매출액의 5%                                                                                                  | ○ 카르텔을 통한 부당이익 추구유인을 억제하기 위해 관련매출액의 10%로 상향조정                                          | ○ 동법 제22조                                        | 공동행위과<br>☎(02)<br>504-4163 |
| 7  | 역외적용근거 신설           | <신 설><br><신 설>                                                                                                | ○ 외국사업자에 대한 문서송달 규정<br>○ 외국정부와의 상호 법집행 지원근거 신설                                         | ○ 동법 제55조의3<br>○ 동법 제36조의2                       | 국제협력과<br>☎(02)<br>504-5145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8  |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제도입   | ○ 2004.2.4일로 유효기간 만료                                | ○ 3년 시한 제도입                                                               | 동법 제50조제5항<br>(공포일부터 시행)                              | 조사기획과<br>☎02)<br>507-0161                                                                                              |
| 9  | 사적 소송 활성화       | ○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확정된<br>후에 재판상 주장이 가능<br><신 설>          | ○ '재판상 주장제한' 규정 삭제<br>○ 관련증거, 변론취지 등을 감안하여 법원이 손해액을<br>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신설 | 동법 제56조<br><br>동법 제57조                                | 심판관리<br>1담당관실<br>☎02)<br>504-5142                                                                                      |
| 10 | 신고포상금제 도입       | <신 설>                                               | ○ 카르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신문판매시장의<br>과도한 경품제공 등 법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br>제도 도입    | 동법 제64조의2                                             | 공동행위과<br>☎02)<br>504-4163<br>가맹사업<br>거래과<br>☎02)<br>504-9466<br>유통거래과<br>☎02)<br>503-9078<br>조사기획과<br>☎02)<br>507-0161 |
| 11 | (★)하도급법 적용범위 확대 | ○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하도<br>급거래의 범위를 제조·건설·<br>수리 위탁거래로 규정 | ○ 서비스업 분야의 하도급거래도 하도급법 적용                                                 | 하도급거래공정화에<br>관한법률<br>제2조제1항<br>(공포 3월 후)<br>* 국회 계류 중 | 하도급기획과<br>☎02)<br>503-8894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2 | (★)납품단가 인하행위유형<br>추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유형<br/>5개 규정</li> <li>○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행위유형<br/>5개 규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의계약시 정당한 이유 없이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추가</li> <li>○ 경쟁입찰시 정당한 이유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추가</li> <li>○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추가</li> <li>○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등 추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법 제4조제2항<br/>(공포 3월 후)<br/>* 국회 계류 중</li> <li>○ 동법 제4조제2항<br/>(공포 3월 후)<br/>* 국회 계류 중</li> <li>○ 동법 제11조제2항<br/>(공포 3월 후)<br/>* 국회 계류 중</li> <li>○ 동법 제11조제2항<br/>(공포 3월 후)<br/>* 국회 계류 중</li> </ul> | 하도급기획과<br>☎02)<br>503-8894 |
| 13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br>금지 | <신 설>                                                                                                               | ○ 정당한 이유 없이 금전 등 경제적 이익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금지                                                                                                                                                                                                                                                         | ○ 동법 제12조제2항<br>(공포 3월 후)<br>* 국회 계류 중                                                                                                                                                                                                         | 하도급기획과<br>☎02)<br>503-8894 |

## 금융감독위원회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  | PEF(사모투자전문회사)제도<br>시행              | ○ 신규 도입                                                               | ○ 기업의 경영권 참여 등을 통하여 투자기업의 기업가<br>치를 제고하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br>목적으로 하는 PEF(사모투자전문회사)제도를 시행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br>제144조의2 내지<br>제144조의18<br>(2004.12.15)     | 금융감독원<br>자산운용<br>감독국<br>☎02)<br>3786-8339 |
| 2  |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br>설명에 대한 확인방법 간소화 | ○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br>설명 확인을 위한 고객의 자필<br>기재 문구가 60자 이상이었음             | ○ 판매회사가 펀드가입시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제<br>공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한 사실을 투자자로부터<br>확인받는 서식을 간소화<br>* 투자자 자필기재 문구 축소                                                        | 간접투자자산운용업<br>감독규정 별지<br>제17호 및 제18호<br>(2004.12.15)      | 금융감독원<br>자산운용<br>감독국<br>☎02)<br>3786-8339 |
| 3  | 간접투자증권의 매입 및 환매<br>청구일 구분의 기준시간 등  | ○ 간접투자증권의 판매·환매신청<br>시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날짜에<br>접수된 청구에 대해서는 동일한<br>기준가격을 적용 | ○ 간접투자증권의 판매·환매시 투자설명서에 정해진<br>기준시간 경과 후에 접수된 판매·환매 청구에 대해<br>서는 기준시간 전에 접수된 청구에 적용되는 기준가격<br>다음에 최초로 산출되는 기준가격을 적용<br>* 2005.6.7일 이후 제출되는 투자설명서부터 적용 | 간접투자자산운용업<br>감독규정 제55조의2<br>(2004.12.15)                 | 금융감독원<br>자산운용<br>감독국<br>☎02)<br>3786-8339 |
| 4  | 은행연체율산출 및 공표방법<br>개선               | <신 설>                                                                 | ○ 연체대출채권비율 산정시 계절조정 반영, 경영실태<br>평가항목에 평가항목 변경<br>- 체감연체율과 공표연체율과의 괴리 해소<br>- 내부통제 목적의 연체율 산출방법 다양화                                                    | 은행업감독규정시행<br>세칙<br>(2005.1.31)                           | 금융감독원<br>은행감독국<br>☎02)<br>3786-8033       |
| 5  | 기업공시제도                             | ○ 공시서류 중 제조원가명세서<br>등 부속명세서 기재<br>○ 수시공시사항을 사업보고서에<br>모두 기재           | ○ 공시서류상 공시가치는 낮은 반면, 영업기밀 해당 소<br>지가 있는 제조원가명세서 등의 부속명세서를 삭제<br>○ 수시공시사항 중 이행이 완료되지 않거나 주요변경<br>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토록 변경                                   | 유가증권의발행 및<br>공시등에관한규정<br>제72조 제1항 및<br>제2항<br>(2005.1.1) | 금융감독원<br>공시감독국<br>☎02)<br>3786-8428       |

## 교육인적자원부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  |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br>제도 개선<br>(7차 교육과정을 적용 과목변경<br>및 축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수(7과목) : 윤리, 국어, 국사, 공통사회, 공통수학, 공통과학 및 공통영어</li> <li>선택 I (1과목) : 음악 I, 미술 I, 체육 I, 한문 I 또는 교련중 1 과목</li> <li>선택 II (1과목) : 기술, 가정, 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 가사, 정보산업, 진로·직업, 독일어 I, 프랑스어 I, 에스파냐어 I, 중국어 I, 일본어 I, 또는 러시아어 I 중 1과목</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수(6과목) : 국어, 사회, 국사, 수학, 과학 및 영어</li> <li>선택 I (1과목)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또는 미술중 1과목</li> <li>선택 II (1과목) : 정보사회와 컴퓨터, 농업과학, 공업 기술, 기업경영, 해양과학, 가정과학, 독일어 I, 프랑스어 I, 스페인어 I, 중국어 I, 일본어 I, 러시아어 I, 아랍어 I 또는 한문 중 1과목</li> <li>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선택 II의 1과목의 고시는 이를 면제</li> </ul> | 고등학교졸업학력<br>검정고시 규칙<br>(2005.1.1) | 교육복지정책과<br><b>☎02)</b><br>2100-6345 |
| 2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부금이 봉급·경상·증액교부금으로 다양하며, 법정교부율은 내국세 총액의 13%</li> <li>국세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양여금제도 별도 존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봉급·경상·증액교부금을 단일교부금으로 통합하고, 법정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19.4%으로 함</li> <li>지방교육양여금제도를 폐지하고, 국세교육세를 교부금의 재원으로 함</li> <li>봉급교부금이 폐지됨에 따라 교원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인건비소요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교부율을 보정</li> </ul>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br>(2005.1.1)          | 교육재정지원과<br><b>☎02)</b><br>2100-6365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2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는 봉급전입금과 시도세 전입금 별도 부담</li> <li>- 서울, 부산 : 봉급전입금+시세 총액 3.6%</li> <li>- 광역시 및 경기도 : 봉급전입금+ 시도세 총액 3.6%</li> <li>- 기타 도 : 도세 총액 3.6%</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봉급전입금을 폐지하되, 해당금액을 시도세 전입금 비율에 반영하여 상향조정</li> <li>- 서울 : 시세 총액 10%</li> <li>- 광역시 및 경기도 : 시도세 총액 5%</li> <li>- 기타 도 : 도세 총액 3.6%(현행과 동일)</li> </ul>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br>(2005.1.1.)                | 교육재정지원과<br>☎02)<br>2100-6365     |
| 3  | 두 자녀 교육비 지원            | <신 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층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층 가정의 두 자녀가 동시에 유치원에 다닐 경우 둘째아(둘째 이후 자녀)이상 교육비 지원</li> <li>-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소득인정액) 가구의 자녀</li> <li>- 지원액 : 월 30,000원</li> </ul>                                                                    | 유아교육법 제26조<br>(2005.3.1)                 | 유아교육<br>지원과<br>☎02)<br>2100-6375 |
| 4  | 농산어촌 지역 장애아<br>순회교육 지원 | <신 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어촌 지역 장애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정, 시설 및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있는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및 치료교육 등 순회교육 지원 확대, 학부모의 교육상담 지원 강화</li> <li>- 전국 9개 도(특별시 및 광역시 제외)의 특수교육지원센터 18개소에 순회강사 인건비, 순회교육 활동비,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li> <li>- 지원예산 : 국고 9억원</li> </ul> | 특수교육진흥법<br>(2005.3.1)                    | 특수교육<br>보건과<br>☎02)<br>2100-6385 |
| 5  | 주5일수업제                 | ○ 2004학년도 우선시행학교(10%)<br>월1회 실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주5일수업제 월1회 실시</li> <li>- 학교의 연간 수업일수는 감축 운영할 수 있지만, 수업시간수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을 준수해야 하므로 학교의 수업량에 변화는 없음</li> </ul>                                                                                                    | 초·중등교육법시행령<br>제45조(휴업일 조항)<br>(2005.3.1) | 학교정책과<br>☎02)<br>2100-6248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6  |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기록변경           | ○ 과목별성취도석차기록<br>- 과목별 성적을 '수/우/미/양/가'의<br>성취도와 과목석차로 기록 | ○ 과목별 원점수와 석차등급 기록<br>- 원점수는 학생이 취득한 점수와 과목평균 표준<br>편차를 함께 기록<br>- 석차등급은 9등급제로 등급과 과목을 이수한 학생의<br>재적수를 함께 기록                               | 2008학년도 이후<br>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br>(2005.3.1)         | 학교정책과<br>☎02)<br>2100-6246        |
| 7  | 특목고 관련 교육과정 부분<br>개정 · 고시 | ○ 교과이수단위 증배 · 운영시<br>보통교과와 전문교과 가능                      | ○ 특목고에서 교과이수단위 증배 · 운영시 전문 교과<br>로만 가능<br>- 특목고 설립취지를 살리기 위해 전문교육을 강화<br>하기 위함<br>- 외국어고는 전문교과 중 50% 이상은 전공외국어로<br>편성이수                    | 교육인적자원부고시<br>제2004-12호<br>(2005.3.1)            | 교육과정<br>정책과<br>☎02)<br>2100-6283  |
| 8  | 연구대회관리규정 시행               | <신 설>                                                   | ○ 교원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규정 제정<br>- 입상비율 등 운영 · 관리 개선<br>- 연구대회 인정절차 구체화<br>- 공인연구대회지도 · 감독 근거 마련<br>- 연구대회 불공정행위 관리 강화<br>- 연구대회네트워크 홈페이지 활용 | 연구대회관리규정<br>(교육인적자원부<br>훈령 제669호)<br>(2005.1.1) | 교원정책과<br>☎02)<br>2100-6313        |
| 9  | Call-Center 운영            | <신 설>                                                   | ○ 각종 교육민원에 대한 질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br>제공하기 위하여 전화민원 상담 및 전자민원 전담<br>처리                                                                           | 민원해소종합대책<br>추진과제<br>(2004.12.29)                | 민원조사<br>담당관실<br>☎02)<br>2100-6085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0 | EBS 수능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OD 화질 WMV 기반 300K 서비스</li> <li>○ 기본적인 VOD 및 LMS 콘텐츠 서비스</li> <li>○ 국영수 과목을 초·중·고급으로 교재개발</li> <li>○ 청각장애인 대상 자막방송 서비스 (500여편)</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OD 화질을 개선하여 300K와 600K 고화질을 동시에 서비스 제공</li> <li>○ 자기진단학습시스템 구축 및 동영상 재생기 인덱스 기능 등을 추가하여 쌍방향학습관리시스템 구축</li> <li>○ 수능 프로그램을 수준별, 제재별, 요구별로 특화하고, 내신프로그램 강화 및 인성교육, 비교과 프로그램 제공</li> <li>○ 국영수 초·중·고급 교재를 통합하고, 고교 3학년 대상 국·영·수 필수과목 교재수를 조정함으로써 교재구입 비용 감소<br/>※ 2004년 58책에서 20책 축소하여 38책 발행(36% 감소)</li> <li>○ 선택과목(사탐, 과탐, 직탐, 제2외국어/한문)등 비수익성 교재 개발 확대를 통해 소수 선택 과목 선택자들의 편의 제공</li> <li>○ 청각장애인 대상 자막방송을 3,000편으로 확대하여 서비스</li> </ul> | 한국교육방송공사법<br>(2005.1.1) | 교육정보화<br>기획과<br>☎02)<br>2100-6545 |



## 법 무 부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  | 전자어음제도 시행           | ○ 종이어음만 유통                                                      | ○ 개인용컴퓨터로 전자어음거래시스템에 접속하여<br>전자적 방식으로 어음거래 가능<br>- 인터넷뱅킹처럼 종이 없는 어음 거래로 효율성과<br>안전성 제고                                                                                                                                                                | 전자어음의발행 및<br>유통에관한법률<br>(2005.1.1)                                  | 법무심의관실<br>☎02)<br>503-7035        |
| 2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시행        | <신 설>                                                           | ○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허위공시(분식회계 포함), 내<br>부자거래, 주가조작, 부실감사로 소액투자자들이 피<br>해를 입은 경우 그 중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로 손해<br>배상청구를 하고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br>게 하는 것임<br>- 자산2조원 이상인 회사는 2005.1.1일부터 시행<br>- 자산2조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내부자거래, 주가조작은<br>2005.1.1일부터, 2007.1.1일부터 위 4가지 모두 시행 | 증권관련집단소송법<br>제정<br>(2004.1.20)<br>* 증권관련집단소송법<br>시행규칙 제정 중<br>(대법원) | 법무심의관실<br>☎02)<br>503-7035        |
| 3  | 국적민원 접수 장소 확대       | ○ 7개 지방출입국사무소(부산, 대구,<br>대전, 창원, 광주, 춘천, 제주)<br>에서는 혼인귀화 신청만 접수 | ○ 7개 지방출입국사무소에서도 혼인귀화 외 다른 귀화·<br>국적회복 신청도 접수하고, 국적포기사실확인서 발급<br>업무도 수행<br>- 다만, 접수업무가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국적판정<br>등은 국적업무출장소에서만 접수                                                                                                                            | (2005년 상반기)                                                         | 법무과<br>☎02)<br>503-7031           |
| 4  | 법률 구조 대상자 확대        | ○ 월평균 수입 170만원 이하                                               | ○ 월평균 수입 200만원 이하<br>○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구조 실시                                                                                                                                                                                                        | 법률구조법 및<br>법률구조법시행령,<br>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br>(2005.1.1)                    | 대한법률<br>구조공단<br>☎02)<br>3482-0546 |
| 5  | 교정위원제도<br>'의료분야' 신설 | ○ 교정위원 봉사분야<br>→ 교화·종교·교육                                       | ○ 기존봉사분야 외 의료분야 신설                                                                                                                                                                                                                                    | 교정위원제도<br>운영지침<br>(예규제713호)<br>(2004.12.1)                          | 교화과<br>☎02)<br>503-7086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6  | 방송통신대학 교육과정 중점 교도소 확대 운영          | ○ 방송통신대학 중점교도소<br>→ 여주교도소                                                 | ○ 여주교도소 외 전주교도소 추가                                                                                                                    | 수형자등교육규칙<br>(법무부령제588호)<br>(2005.3월)        | 교화과<br>☎02)<br>503-7086   |
| 7  | 여자수형자직업훈련 제도개선                    | ○ 각 기관 단위로 여자수형자<br>직업훈련생 선발, 교육                                          | ○ 전국 교정기관에서 여자수형자 선발, 청주여자교도<br>소에서 집금 교육                                                                                             | 수용자직업능력개발<br>훈련규정<br>(예규제668호)<br>(2005.1월) | 교화과<br>☎02)<br>503-7086   |
| 8  | 국민과 혼인한 중국동포 등에<br>대한 재입국허가 제도 개선 | ○ 국민 배우자가 모국 방문 또는<br>여행 시 복수재입국이 허용되<br>지 않는 국가 국민은 매번 재<br>입국허가를 받아야 했음 | ○ 국민의 배우자에 대한 우대정책의 일환으로 복수재<br>입국이 제한되는 중국, 리비아, 이란 등 국가 국민에<br>대해서도 복수재입국 허용                                                        | 출입국관리법<br>(2005.1.1)                        | 체류심사과<br>☎02)<br>503-7101 |
| 9  | 선원수첩의 여권기능 배제                     | ○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제네바<br>협약(1958)’에 따라 선원수첩을<br>여권에 준하는 문서로 인정               | ○ 2003년 6월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제네바 협약’의<br>개정으로 선원수첩의 여권기능을 배제함에 따라, 선<br>원이 진선 통과 등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br>선원신분증명서와 함께 여권을 소지하여야 함             | 출입국관리법<br>(2005.1.1)                        | 입국심사과<br>☎02)<br>503-7097 |
| 10 |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등<br>관리 강화            | <신 설>                                                                     | ○ 외국인 유학생 또는 어학연수생이 재학 또는 연수<br>중인 대학의 장은 외국인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br>지정해야 하고, 제적, 휴학, 미등록 등 재적 유학생 등의<br>학적변동사항 발생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br>하여야 함 | 출입국관리법<br>(2005.1.1)                        | 입국심사과<br>☎02)<br>503-7097 |
| 11 | 행선국 등 사증확인제도 폐지                   | ○ 국민이 출국하는 경우, 출입국<br>관리공무원이 행선국 또는<br>경유국의 사증소지 여부 확인                    | ○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국민 출국시의 행선국 등의 사<br>증확인을 폐지하여 심사대기시간 단축<br>※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권고에 따라 항공사가 승객의 사증소지<br>여부 등 확인                                    | 출입국관리법<br>(2005.1.1)                        | 출국관리과<br>☎02)<br>503-7103 |

## 행 정 자 치 부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  |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전면시행        | ○2·4번째 주 토요일 휴무(월 2회)                                  |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전면시행(2005.7.1)<br><br>* 상반기(2005.1.1~6.30)는 종전과 같이 월 2회 토요일휴무  | 국가공무원복무규정<br>(2005.7.1)                 | 복무과<br>☎02)<br>3703-4552   |
| 2  |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의무화             | ○주요문서목록의 작성·비치                                         | ○종전에 주요문서에 대해서 목록으로 작성·비치하도록 하였으나 원칙적으로 모든 정보를 목록으로 작성·비치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br>관한법률제8조제1항<br>(2005.7.30) | 제도혁신과<br>☎02)<br>3703-4663 |
| 3  | 인감증명발급기관 확대                 | ○인감증명발급을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만 발급                          |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시·군·구청에서도 발급이 가능해짐                                        | 인감증명법시행령<br>(2005.1.17)                 | 주민과<br>☎02)<br>3703-4878   |
| 4  | 인감증명발급사실확인시스템 운영            |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열람확인                                       | ○전자정부를 통하여 직접 개인 PC로 발급사실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 짐                                         | 인감증명법시행령<br>(2005.1.17)                 | 주민과<br>☎02)<br>3703-4878   |
| 5  | 인감증명 수수료 동일 적용              | ○자읍면동 1통/500원,<br>○타읍면동 1통/800원으로 주소<br>지를 구분하여 수수료 적용 | ○주소지 구분없이 1통/600원으로 동일적용                                                        | 인감증명법시행령<br>(2005.1.17)                 | 주민과<br>☎02)<br>3703-4878   |
| 6  | 대리발급사실통보                    |                                                        | ○인감증명을 대리발급한 읍면동장이나 시군구청장 등은 우편이나 휴대폰의 단문문자 전송 등의 방법으로 대리발급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인감증명법시행령<br>(2005.1.17)                 | 주민과<br>☎02)<br>3703-4878   |
| 7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자의 본인 확인방법 확대 | ○동·이장 확인                                               | ○동일 호적 내 가족까지로 확대                                                               | 주민등록법 시행령<br>(2005.4~5월,<br>시행규칙개정 이후)  | 주민과<br>☎02)<br>3703-4878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8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자 범위 확대          | ○ 본인 · 세대원만 신고                     | ○ 동일 호적내 가족까지로 확대                      | 주민등록법<br>시행령<br>(2005.4~5월,<br>시행규칙개정 이후) | 주민과<br>☎02)<br>3703-4878   |
| 9  | 주민등록증 주소변경사항<br>정리기관 확대    | ○ 주소지 읍 · 면 · 동에서만 정리              | ○ 전국 모든 읍 · 면 · 동에서 정리                 | 주민등록법<br>시행령<br>(2005.4~5월,<br>시행규칙개정 이후) | 주민과<br>☎02)<br>3703-4878   |
| 10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본인<br>확인 방법 개선 | ○ 주민등록증+엄지지문                       | ○ 엄지지문                                 | 주민등록법<br>시행령<br>(2005.4~5월,<br>시행규칙개정 이후) | 주민과<br>☎02)<br>3703-4878   |
| 11 | 개인사생활 및 개인정보<br>보호강화       | ○ 주민등록표 초본 제3자에게 교부시 세대주 성명과 관계 기재 | ○ 세대주 성명과 관계 기재 생략                     | 주민등록법<br>시행령<br>(2005.4~5월,<br>시행규칙개정 이후) | 주민과<br>☎02)<br>3703-4878   |
| 12 | 개인사생활 및 개인정보<br>보호강화       | ○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기재                    | ○ 서식 중 가능한 한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년월일<br>기재로 대체 | 주민등록법<br>시행령<br>(2005.4~5월,<br>시행규칙개정 이후) | 주민과<br>☎02)<br>3703-4878   |
| 13 |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br>지침폐지         | ○ 지침시달                             | ○ 지침폐지                                 | 지방재정법<br>제35조제5항                          | 재정정책과<br>☎02)<br>3703-4931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4 | 지방교부세율 인상                  | ○15.0%                    | ○ 교부세율 19.13% 조정<br>- 지방양여금 도로정비 및 지역개발사업 도로부문 등<br>보통교부세화(3.3%)<br>-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하여 분권교부세화(0.83%) | 지방교부세법<br>제3조제1항제2항<br>(2005.1.1)     | 재정조정과<br>☎02)<br>3703-4904       |
| 15 | 신활력지역지원사업추진                |                           | ○ 신활력지역 70개 시군에 매년 20~30개억씩 3년간<br>지원                                                             | 국가균형발전법제2조<br>(2005.1.1)              | 지역경제과<br>☎02)<br>3703-5458       |
| 16 | 오지종합개발 사업지속추진              | ○2004년 종료                 | ○2009.12월까지 5년간 사업기간 연장                                                                           | 오지종합개발촉진법<br>부칙 제2조<br>(2005.1.1)     | 지역균형<br>발전과<br>☎02)<br>3703-4989 |
| 17 | 농어촌도로기본계획승인권<br>지방이양       | ○ 장관                      | ○ 시도지사에게 이양                                                                                       | 농어촌도로정비법<br>제6조 제1항<br>(2005.1.16)    | 지역균형<br>발전과<br>☎02)<br>3703-4998 |
| 18 |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장<br>지목변경기준 완화 | ○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으로<br>지목변경 불가 | ○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의한 부설주차장에 한하여<br>주차장으로 지목변경 가능                                                    | 도시교통정비촉진법<br>시행령 부칙 제2항<br>(2005.1.1) | 지적과<br>☎02)<br>3703-5082         |

## 과 학 기 술 부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br>관리등에관한규정<br>(2005.6.1) | 연구조정<br>총괄담당관<br>☎02)<br>2110-3737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비 인센티브 지급율 인상</li> <li>○연구활동장려금 인상</li> <li>○연구개발준비금 인상</li> <li>○과학문화활동비 신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 기술료의 35%이상</li> <li>○총 인건비의 7%</li> <li>○내부 인건비의 15%</li> <li>○연구홍보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 기술료의 50%이상</li> <li>○연구참여자 15%</li> <li>○연구책임자 25%</li> <li>○내부인건비의 30%</li> <li>○과학문화활동비로 범위 확대</li> </ul> |                                     |                                    |
|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실 안전관리비 신설</li> <li>○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li> <li>○표준서식 마련 및 통합 평가위원 DB구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신 설&gt;</li> <li>○연구사업 참여제한 2년</li> <li>○부처별 연구개발계획서, 최종보고서 서식 사용</li> <li>○부처별 평가위원 DB</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건비의 2%범위내에 간접비로 계상</li> <li>○연구사업 참여제한 3년</li> <li>○통합 표준서식 마련</li> <li>○통합 DB</li> </ul>                    |                                     |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2  | 국가연구개발사업<br>주기적 평가제도 시범실시 | ○매년 평가 시행 | ○매년 각 부처 자체평가 실시<br>○주기적 평가제도 하반기 시범실시<br>- 주요사업의 30% 정도를 3년 주기로 평가 | 제14회 국가과학기술<br>위원회 의결<br>- 국가연구개발사업<br>조사·분석·평가 및<br>사전 조정제도 개선<br>방안(2003.12.18일<br>확정)<br>(2005년 하반기 시행 예정) | 조사평가과<br>☎031)<br>436-8624 |

## 농 립 부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  | (★)국가재해보험제도 도입    | ○자연재해의 거대성, 동시다발성 등으로 인해 민간보험사들의 참여 기피<br>-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의 발전 저해<br>- 지속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 등 많은 문제점 야기 | ○거대재해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부담하여 줌으로써, 민간보험회사들이 안정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사업에 참여<br>- 농업경영안정 장치 구축으로 적극적인 영농 가능 | ○농작물재해보험법 (2005년)<br>※ 현재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어 있음 | 구조정책과<br>☎02) 500-1665 |
| 2  | 중앙회 지배구조 개선       | ○상임회장<br>○상임감사 1인, 비상임감사 1인<br>○단일 이사회                                                       | ○회장 비상임 전환<br>○감사제 폐지, 이사회내 감사위원회 신설<br>○사업부문별로 이사회내 소이사회 신설                             | 농업협동조합법 (2005.6~7월 시행 예정)                 | 협동조합과<br>☎02) 500-1694 |
| 3  | 중앙회 총회 부가의결권제도 도입 | ○회원인 전 조합이 각각 1표를 행사                                                                         | ○회장선출을 제외한 총회 및 대의원 선출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조합별로 1~3표로 차등                              | 농업협동조합법 (2005.6~7월 시행 예정)                 | 협동조합과<br>☎02) 500-1694 |
| 4  | 조합간 사업연합 제도화      | ○조합간 공동사업체에 대한 법인격 부여 등 규정 없음                                                                | ○조합간 공동사업체를 농협법상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제도화                                                          | 농업협동조합법 (2005.6~7월 시행 예정)                 | 협동조합과<br>☎02) 500-1694 |
| 5  | 조합 배당제도 개선        | ○잉여금이 있는 경우 출자에 대한 배당을 하고 남음이 있으면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배당                                              |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을 우선하도록 법에 명시                                                              | 농업협동조합법 (2005.6~7월 시행 예정)                 | 협동조합과<br>☎02) 500-1694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6  | 조합경영의 전문성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임이사 도입은 조합 자율선택</li> <li>○ 조합장 연임제한은 없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조합은 상임이사 의무도입</li> <li>○ 상임조합장 연임은 2회로 제한</li> </ul>                                                                                                                     | 농업협동조합법<br>(2005.6~7월 시행 예정)                 | 협동조합과<br>☎02)<br>500-1694 |
| 7  | 조합경영의 투명성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회계감사 규정 없음</li> <li>○ 조합장 선거관리는 자체 선관위에서 담당</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정규모 이상조합은 조합장 임기 중 1회 외부회계감사 수감 의무화, 기타 조합은 대의원 1/3이상 청구시 조합장 임기 중 1회 외부회계감사 수감</li> <li>○ 직선 지역조합의 조합장 선거관리는 해당지역 선관위에 위탁</li> </ul>                                                    | 농업협동조합법<br>(2005.6~7월 시행 예정)                 | 협동조합과<br>☎02)<br>500-1694 |
| 8  | 시장·군수·구청장<br>농지전용허가 위임범위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군수·구청장의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전용허가 권한이 1만㎡ 미만까지 가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군수·구청장의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3만㎡ 미만으로 확대</li> </ul>                                                                                                                                      | 농지법시행령 제72조<br>(2005.1.1)                    | 농지과<br>☎02)<br>500-1670~1 |
| 9  | 창업 중소기업 공장신설시<br>농지조성비 면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 중소기업 공장신설시 농지조성비 전액 부과</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로 신설하는 공장에 대해 농지조성비 면제</li> </ul>                                                                                                                                   | 농지법시행령 별표2<br>제8호의3 신설<br>(2005.1.1)         | 농지과<br>☎02)<br>500-1670~1 |
| 10 | 농지전용 절차 간소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용도변경허가) 신청시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지형도 등을 구비하여 제출</li> <li>○ 농지전용변경허가시 전용허가 관련서류를 모두 제출</li> <li>○ 시군구의 농지전용허가 처리기간이 12일</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지전용허가(용도변경승인) 신청시 첨부서류 중 행정기관에서 직접확인이 가능한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지형도를 구비서류에서 제외</li> <li>○ 농지전용 변경허가시 구비서류 중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제출</li> <li>○ 시·군·구의 농지전용허가 처리기간을 10일로 단축</li> </ul> | 농지법시행규칙 제25조 및 제42조, 별지 16호 서식<br>(2005.1.1) | 농지과<br>☎02)<br>500-1670~1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1 |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br>요건 폐지            | ○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업회사<br>법인의 요건 제한<br>① 대표이사가 농업인<br>② 업무집행권을 갖는 자의 1/2<br>이상이 농업인<br>③ 농업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br>1/2이상 | ○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전면 허용(①②③요건 폐지)<br>-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한 농업회사법인<br>이면 농지소유 허용 | 농지법제2조제3호<br>(2005.7.1)<br>* 국회 계류 중     | 농지과<br>☎02)<br>500-1670~1 |
| 12 | (★)지역특구안에서<br>농지소유제한 완화             | ○ 지역특구안에서 특화사업자에<br>게 농지소유 제한 적용<br>- 전용할 농지는 특화사업자가<br>소유가 허용되나, 농업경영에<br>필요한 농지는 농업인과 농업<br>법인인 특화사업자만 소유 가능 | ○ 지역특구안에서 특화사업자의 농지 소유 허용<br>- 특화사업자는 특구토지이용계획에 포함된 농지<br>소유가능             | 농지법제6조제2항<br>(2005.7.1)<br>* 국회 계류 중     | 농지과<br>☎02)<br>500-1670~1 |
| 13 | (★)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br>농지의 임대허용 확대    | ○ 1996년 농지법시행 이후 농업<br>경영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br>원칙적으로 임대 금지<br>- 질병·징집 등 불가피한 경우<br>에만 허용                             | ○ 농업기반공사 등에 위탁하여 전업농 등에게 장기(5년<br>이상) 임대하는 것은 허용                           | 농지법 제6조 및제22조<br>(2005.7.1)<br>* 국회 계류 중 | 농지과<br>☎02)<br>500-1670~1 |
| 14 | (★) 상속농지·이농 후 계속소유<br>농지 소유상한 예외 허용 | ○ 상속농지·이농 후 계속소유<br>농지의 소유상한 : 1ha                                                                             | ○ 농업기반공사 등에 위탁하여 농업인·농업법인에게<br>장기(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 소유상<br>한의 예외 허용    | 농지법제7조제4항<br>(2005.7.1)<br>* 국회 계류 중     | 농지과<br>☎02)<br>500-1670~1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5 |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br>농지처분제도 개선 |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휴경 등<br>→ 처분의무 통지 → (미처분시)<br>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br>* 이행강제금 : 공시지가의 20%,<br>농지처분시까지 매년 반복 부과 | ○사후관리 절차·내용 완화<br>-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휴경 등 → 처분의무 통지<br>→ (성실경작, 매도위탁시) 처분명령 3년간 유예<br>* 유예기간동안 유예사유를 위반하지 않는 경우 처분의무<br>소멸             | 농지법제11조의2<br>(2005.7.1)<br>* 국회 계류 중  | 농지과<br>☎02)<br>500-1670~1        |
| 16 | (★) 농업보호구역 토지이용행위<br>제한 개선     |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br>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등을<br>제한행위열거방식으로 제한                                                    | ○토지이용행위 제한을 허용행위열거방식으로 전환<br>* 농촌소득증대 및 생활여건개선에 필요한 시설 설치 허용                                                                      | 농지법제34조제2항<br>(2005.7.1)<br>* 국회 계류 중 | 농지과<br>☎02)<br>500-1670~1        |
| 17 | (★) 농지조성비제도 개선                 | ○명칭 : 농지조성비<br>○부과 : 전용하는 농지의 대체<br>조성 원가를 기준으로 생산기<br>반정비 투자비용을 포함하여<br>농지별로 차등 부과<br>○용도 : 농지조성으로 한정 | ○명칭 :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변경<br>○부과기준 : 전용하는 농지의 공시지가 범위 안에서<br>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부과<br>○용도 : 농지조성 외에 영농규모화사업지원, 농지은행<br>의 농지매입 채원 등     | 농지법 제40조<br>(2005.7.1)<br>* 국회 계류 중   | 농지과<br>☎02)<br>500-1670~1        |
| 18 | 농기계안전검정제 도입                    | <신 설>                                                                                                  | ○농업인 보호를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농기계는 안<br>전검정을 거친 후에 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하고 그<br>안전검정 대상 농기계도 확대<br>- 대상농기계 : 31개 → 61개 기종                          | 농림사업시행지침<br>(2005.1.1)                | 농업기술<br>지원과<br>☎02)<br>500-1788  |
| 19 | 친환경농자재 부가가치세<br>영세율 적용         | <신 설>                                                                                                  | ○친환경농업육성법에 규정된 친환경자재중에 다수의<br>농가가 사용하고 있어 세제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br>기대되는 천적·키토산·목초액 등 3종의 자재에 대<br>하여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도록 관련세법을 개정,<br>농가부담 완화 | 조세특례제한법<br>(2005.1.1)                 | 친환경농업<br>정책과<br>☎02)<br>500-1810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20 | 농산물 자조금제도의 자율권 확대 및 사업구조 기준(자족 기능) 강화 | <p>○ 품목에 따라 자조금 단체의 가입조건이 300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어, 개별농가 또는 그 외 영농법인 등의 다른 생산자단체의 가입에 어려움이 있음</p> <p>○ 연간 자조금 적립액(보조금 제외)의 5% 해당액(연간 1억원 한도) 또는 2,000만원 범위내에서 운영경비 인정</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자조금조성단체는 2005.1.31일까지 사업주관기관에 2004년도 자조금 사업실적 및 정산 결과를 보고</p> <p>○ 사업주관부서에서 보조사업자를 확정(사업계획 승인)하고, 그 내용을 유통정책과에 통지(보조금 지원)</p> | <p>○ 자조금조성단체는 동일 품목의 미가입 생산자단체가 자조금납부등을 통하여 자조금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가입·탈퇴를 자유롭게 허용, 최초 지원연도로부터 3년 이내 반영</p> <p>※ 자조금단체가 품목대표조직으로서의 개방성확대 의무화(진입제한 완전철폐) 단, 별도 가입자격이 필요한 경우 농림부장관 승인 받아야 함</p> <p>○ 자조금의 연간 자체 적립액(보조금 제외)의 30% 해당액(연간 1억원 한도) 범위내에서 운영경비 지출 인정</p> <p>※ 자체 조성금액이 높은 조직에는 재량권을 확대하고 부진 조직은 재정적 기반능력 확보 등 자구책 마련 필요</p> <p>○ 자조금단체 심사기준에 실질적인 사무국 기능 의무화, 업무전담 담당자 배치, 회원자격의 개방성확대, 자발적 거출구조 등 사업구조 기준 강화</p> <p>○ 다만, 품목 특성상 계절적요인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사업부서는 기한 내 가정산 보고 후, 익년 3월말 이전까지 사업완료 후 정산 보고</p> <p>※ 과실 등 품목의 특성상 계절적요인 등을 감안하여 반영함</p> <p>○ 사업부서의 서류심사 결과와 현장방문심사를 거쳐 정례 산지유통정책협의회를 통해 심의·확정(상·하반기 각 1회)</p> <p>※ 연간 자조금 사업계획 신청 또는 승인한 품목 수에 비해 실제 미실행 품목이 빈번한 실정임에 따라, 사전 검토 및 현장 실사를 거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p> | 농림사업<br>시행지침<br>(2005년부터) | 유통정책과<br>☎02)<br>500-1829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21 |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신청<br>On-line 전산화 |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사업<br>계획서를 시·군청을 방문하<br>여 작성 후 제출                                                                                                                                                                          | ○인터넷으로 물류표준화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br>접수 및 처리과정 확인 가능                                                                                                                                                                                                                                     | 2005년 사업부터 적용                 | 유통정책과<br>☎02)<br>500-1824 |
| 22 | 농안기금 중 수산분야 이관                | ○수산분야도 농안기금에서 지원                                                                                                                                                                                                        | ○농안기금에서 지원하던 수산분야 수매비축사업 및<br>용자사업을 해양수산부의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하여<br>수산정책의 효율성 제고                                                                                                                                                                                                           | 농수산물유통 및<br>가격안정에관한법률<br>제57조 | 유통정책과<br>☎02)<br>500-1823 |
| 23 | 농산물유통전문교육<br>보조지원비율 조정        | ○보조지원비율 핵심요원 75%,<br>일반인 50%                                                                                                                                                                                            | ○핵심·일반요원 구분 철폐 보조율 70% 동일<br>- 핵심요원 : 현장에서 유통관련(예:APC임직원, 도매<br>시장임직원, 영농조합법인 등)<br>- 일반요원 : 농업인 등                                                                                                                                                                                 | 농수산물유통 및<br>가격안정에관한법률<br>제75조 | 유통정책과<br>☎02)<br>500-1818 |
| 24 | 인삼검사 신청기한 조정                  |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3일<br>전까지 관능검사 신청<br>- 단, 농약잔류검사 등은 10일<br>전까지 신청                                                                                                                                                        | ○관능검사, 농약잔류검사 등 모든 검사를 받고자 하는<br>날의 10일 전까지 신청                                                                                                                                                                                                                                     | 인삼산업법<br>(2005.1.1)           | 채소특작과<br>☎02)<br>500-1868 |
| 25 |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br>지원내용 개선     | ○포장화우대품목 : 무, 배추, 마늘,<br>양배추<br><br>○포장재비 및 공동선별비 지원<br>대상 : 산지유통전문조직, 친환경<br>경인증/품질인증 조직 및 농가,<br>기타 생산자조직<br><br>○표준규격포장 출하율이 30%<br>이하인 품목에 대해서도 30%<br>지원<br><br>○표준규격포장 출하율이 80%<br>이상인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br>비율을 20%로 조정 | ○포장화우대품목 : 무, 배추, 양배추<br>※ 마늘을 포장화우대품목에서 제외하고 공동선별비 지원대상<br>품목으로 전환<br><br>○포장재비 및 공동선별비 지원대상에 농림부로부터<br>지정받은 공동마케팅 조직을 추가<br><br>○표준규격포장 출하율이 30% 이하인 품목은 지원비<br>율을 40%로 상향<br><br>○표준규격포장 출하율이 80% 이상인 품목 중, 2005년도<br>신규적용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25%로 축소<br>하고, 2006년도부터 20%로 단계적으로 조정 | 농림사업시행지침서<br>(2005.1.1)       | 소비안전과<br>☎02)<br>500-1833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26 | 학교우유급식 지원대상자 확대                   |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등학생 210명에게 연간 300일 기준으로 200ML 백색우유공급                                      | ○우유소비확대 및 학교급식 개선을 위하여 초등학생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중학생 69천명까지 확대하여 지원<br>* 내년부터 지원대상자를 고등학생까지 확대할 예정                                                                             | 축산법 제3조,<br>낙농진흥법 제3조          | 축산경영과<br>☎02)<br>500-1909      |
| 27 |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br>비료대 지원 제외         | ○사료작물 재배농가에 비료대를 40% 보조지원                                                             | ○사료작물재배를 위한 비료대 지원제외<br>* 가축분뇨 퇴·액비 사용으로 친환경 축산 추진                                                                                                                    | 축산법 제3조                        | 축산경영과<br>☎02)<br>500-1905      |
| 28 | 자체위생 관리기준(SSOP)<br>작성·운용 대상 업종 확대 | ○영업자 및 종업원이 당해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지켜야 할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작성·운용 대상 업종<br>-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작성·운용 대상 업종 확대<br>- 집유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법, 축산물판매업                                                                                                       | 축산물가공처리법<br>시행규칙<br>(2005.2.1) | 축산물<br>위생과<br>☎02)<br>500-1917 |
| 29 | 조제유류의 과대광고 등 금지                   | ○조제분유 또는 조제우유의 광고 금지 및 의료기관, 모자보건시설에 무료 또는 저가의 판매촉진 행위 금지                             | ○조제유류의 광고 금지 및 의료기관, 모자보건시설에 무료 또는 저가의 판매촉진 행위 금지<br>※ 조제유류 : 조제분유, 조제우유, 성장기용조제분유, 성장기용조제우유, 기타조제분유, 기타조제우유                                                          | 축산물가공처리법<br>시행규칙<br>(2005.2.1) | 축산물<br>위생과<br>☎02)<br>500-1917 |
| 30 | 식육판매업소에서 표시사항<br>신설 및 원산지 영수증 발급  | <신 설>                                                                                 |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을 용기에 담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진열·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의 부위명·원산지·제조일자·유통기한·보관방법 및 조리방법이 표시된 스티커를 붙이거나 비닐 등에 표시하여야 하며, 음식점의 영업자 등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하여야 함 | 축산물가공처리법<br>시행규칙<br>(2005.2.1) | 축산물<br>위생과<br>☎02)<br>500-1917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31 | 식육판매업소 등의 HACCP 시행                     | ○도축장, 축산물가공장에서 HACCP 시행                                                                                                                                                                                                                            | ○식육판매업소,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등에서도 HACCP 시행                                                                                                                                                                                                 | 축산물가공처리법<br>(2005.2.1)                               | 축산물<br>위생과<br>☎02)<br>500-1917) |
| 32 | 검사관의 기준업무량 및 자체<br>검사원·검사보조원의 수<br>세분화 | ○자체검사원·검사보조원의 수<br>와 기준<br>- 자체검사원 : 닭30,000수 이하<br>도축시 1인 이상, 30,001수 이<br>상 도축시 2인 이상<br>- 검사보조원 : 소 30두 이하 도축시<br>1인 이상, 31두 이상 도축시 2인<br>이상, 돼지 300두 이하 도축시<br>1인 이상, 301두 이상 도축시<br>2인 이상, 닭 30,000수 이하 도축시<br>1인 이상, 30,001수 이상 도축시<br>2인 이상 | ○검사관의 기준업무량을 통한 자체검사원 및 검사보<br>조원 배치인원을 확대<br>- 검사관 : 축종별로 근무인원에 따라 도축두수 제한<br>예) 검사관 1인 소 30두 이하, 돼지 300두 이하, 닭<br>20,000수 이하<br>- 자체검사원 : 검사두수를 세분화함<br>예) 닭20천수 이하도축시 1인 이상<br>- 검사보조원 : 축종별 검사두수를 세분화함<br>예) 소 61두 이상 도축시 3인 이상 등 | 축산물가공처리법<br>시행령<br>(2005.2.1)                        | 축산물<br>위생과<br>☎02)<br>500-1917  |
| 33 |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개정<br>시행                  | ○사료내 혼합가능한 동물용<br>의약품의 종류 : 53종<br>○사료내 중금속 등 유해물질<br>관리대상 : 8종<br>○사료내 잔류농약 관리대상<br>종류 : 17종                                                                                                                                                      | ○사료내 혼합가능한 동물용 의약품의 종류 : 25종<br>○사료내 중금속 등 유해물질 관리대상 : 12종<br>○사료내 잔류농약 관리대상 종류 : 12종                                                                                                                                                 | 사료관리법제13조 및<br>유해사료의 범위와<br>기준(농림부 고시)<br>(2005.5.1) | 축산물<br>위생과<br>☎02)<br>500-1927  |
| 34 | 사료공장 HACCP제도 도입<br>시행                  |                                                                                                                                                                                                                                                    | ○축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사료의 제조·유통과정<br>에서 위해요소를 중점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으<br>로서 안전성 확보<신규>                                                                                                                                                          | 사료관리법제15조제1항<br>(2005.1.1)                           | 축산물<br>위생과<br>☎02)<br>500-1927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35 | 소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br>휴대제도 확대 등 방역대책<br>추진강화 |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1세 이상의<br>한우 암소(도축용 제외)는 검사<br>증명서를 휴대해야만 거래 가능        | ○가축시장에 출하하는 1세 이상의 모든 한육우 암소<br>(도축용 추가)와 농가에서 문전거래되는 도축용 한<br>육우 암소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해야만 가축시장에서<br>거래 또는 도축장에서 도축이 가능<br>- 검진증명서 미휴대 조치사항<br>· 해당소 : 가축시장 거래 및 도축제한<br>· 소유자 : 과태료처분(500만원 이하) | 결핵병및부루세라병방역<br>실시요령(농림부 고시<br>제2004-73호, 2004.12.6)<br>(2005.1.1)<br>* 1~2월 계도기간 3월부터<br>의무시행             | 가축방역과<br>☎02)<br>500-1939 |
|    |                                         | <신 설>                                                              |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가 없는 소를 구입하여 부루<br>세라병이 발생한 경우 살처분보상금을 평가액의<br>60%만 지급                                                                                                                       |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br>(대통령령 제18070 호,<br>2003.7.29) 개정 중<br>(2005년 상반기)<br>※ 현재 법령정비 협의 완료                       | 가축방역과<br>☎02)<br>500-1939 |
|    |                                         | ○부루세라병 발생농장의 감염<br>의심소·동거소의 도태가축에<br>대해 도태장려금을 두당 20~<br>50만원 정액지급 | ○도태가축의 산지가격과 축산물도매시장 판매금액의<br>차액을 지급, 도태장려금을 현실화                                                                                                                                         | 살처분가축 등에 대한<br>보상금·장려금지급요령<br>(농림부고시 제2004-32호,<br>2004.5.21) 개정 중<br>(2005.1월 예정)<br>※ 현재 규제심사 협의요청<br>중 | 가축방역과<br>☎02)<br>500-1943 |
| 36 | 추백리·가금티프스 양성종계군<br>도태장려금 지급             | ○도태장려금 지급대상에 가금<br>(질병)제외                                          | ○종계장·부화장방역실시요령규정에 따라 도태권고를<br>받고 도축장으로 출하한 종계<br>- 종계장의 추백리·가금티프스 검사결과 양성종계군<br>동거 종계에 대하여 수당 5,000원 도태장려금 지급                                                                            | 종계장·부화장방역실시<br>요령(농림부고시<br>제2004-74호, 2004.12.6)<br>(2005.5월)                                             | 가축방역과<br>☎02)<br>500-1943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37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br>경감지원 대상자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30% 경감지원</li> <li>- 군 및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읍·면지역</li> <li>- 시(市)의 동(洞)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li> <li>- 특별시·광역시의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li> </ul> | ○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30% 경감 지원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br>경감지원 시행지침<br>(2005.1.1)  | 농촌사회과<br>☎02)<br>500-2081 |
| 38 |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br>융자지원 절차 간소화 | ○ 제출서류(6종) : 주민등록등본 등 6종                                                                                                                                                                                                       | ○ 제출서류(1종) : 신청서 1장만 제출<br>- 감축되는 서류는 G4C 등 정부전산망으로 확인 | 농어촌출신 대학생<br>학자금 융자지원 지침<br>(2005.1.1) | 농촌사회과<br>☎02)<br>500-2087 |

## 농 촌 진 흥 청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  | 생물농약 등록기준 신설                | ○ 농약관리법상 미생물농약만 등록이 가능하였고, 생화학농약 등 생물농약 등록기준은 없음                     | ○ 생화학, 미생물 등 생물농약 등록관리 규정을 신설<br>- 생화학농약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천연물 또는 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화학물질<br>- 미생물농약은 진균, 세균 자체 또는 이들의 분비물로 병해충을 방제하는 약제     | 농진청고시<br>생물농약의등록시험<br>방법및서류검토기준<br>(2005년 상반기) | 농업자원과<br>☎(031)<br>299-2601       |
| 2  | 부정불량 농약 및 비료 신고자 보상금액 대폭 인상 | ○ 부정불량 농약 또는 비료의 유통행위를 신고할 경우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5~20만원의 보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하고 있음 | ○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액을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5~20만원에서 20~50만원으로 대폭 인상 지급                                                                          | 농진청훈령<br>부정불량농약및비료<br>신고자보상규정<br>(2005.1.1)    | 농업자원과<br>☎(031)<br>299-2595       |
| 3  |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 <신 설>                                                                | ○ 농촌자원과 노인의 보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활성화와 농촌노인의 생산적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건강 장수마을'을 시범 육성<br>- 소득활동 기반조성, 문화전승 및 사회활동 지원, 건강·장수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 등 | 2005년 80여개소 육성<br>* 2008년까지 400개소<br>목표        | 농촌생활<br>자원과<br>☎(031)<br>299-2681 |

## 산 립 청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  |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 <신 설>                                                                                                                | ○ 백두대간 중 생태계·자연경관 또는 산림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br>(2005년 상반기)       | 산림보호과<br>☎042)<br>481-4290  |
| 2  | 백두대간보호 계획 수립       | <신 설>                                                                                                                | ○ 10년 단위의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 및 2005년도 시행 계획 수립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br>(2005년 하반기)     | 산림보호과<br>☎042)<br>481-4290  |
| 3  | 백두대간 지역주민 소득사업 지원  | <신 설>                                                                                                                | ○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지역 주민에 대한 소득사업 지원<br>- 지원금액 : 72억원(국고 70%, 지방비 30%) | 시 책<br>(2005.1.1)                      | 산림보호과<br>☎042)<br>481-4290  |
| 4  | 백두대간 지역의 훼손지 복원·복구 | <신 설>                                                                                                                | ○ 백두대간 지역 중 개발행위로 인하여 훼손된 지역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복원·복구 추진              | 시 책<br>(2005.1.1)                      | 산림보호과<br>☎042)<br>481-4290  |
| 5  | 보전산지내 공장설립 규모 제한   | <신 설>                                                                                                                | ○ 난개발 방지를 위해 보전산지안에서 1ha 미만의 공장 설립 제한                            |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3조<br>(2005년 상반기)           | 산지관리과<br>☎042)<br>481-4141  |
| 6  |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감면확대    | <신 설><br><br>○작업로·운재로 : 50%                                                                                          | ○ 중소기업 창업공장 : 100%<br><br>○작업로·운재로 : 100%                        |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3조<br>(2005년 상반기)           | 산지관리과<br>☎042)<br>481-4141  |
| 7  | 임산물 품질인증 절차 일원화    | ○임산물 품질인증 절차 이원화<br>- 산림청<br>· 신청서 접수, 이송<br>· 인증결정, 인증서 교부, 공고<br>- 국립산림과학원<br>· 품질인증을 위한 시험·검사<br>· 사후관리 및 행정처분 의뢰 | ○ 임산물 품질인증 절차 일원화<br>- 산림청의 담당 업무를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단일화        | 임업및산촌진흥 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br>(2005.7.1) | 임산물이용과<br>☎042)<br>481-4206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8  | 사방사업 감리주체 확대            | ○ 산림기술사,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가 사방공사 등의 시공감리 실행                | ○ 1급 산림토목기술자도 사방사업 감리를 할 수 있는 근거법규 마련                         | 사방사업법시행 규칙<br>(2005년 상반기)          | 치산과<br>☎042)<br>481-4271    |
| 9  | 산림조합 상임조합장 중앙회장 연임횟수 제한 | <신 설>                                                | ○ 상임 조합장 및 중앙회장의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                                 | 산림조합법<br>(2005.5.1)                | 산림정책과<br>☎042)<br>481-4135  |
| 10 | 산림조합장 선거관리위탁            | <신 설>                                                | ○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관리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 산림조합법<br>(2005.5.1)                | 산림정책과<br>☎042)<br>481-4135  |
| 11 |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임명방법 변경      | ○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4명)을 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임명                  | ○ 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 임명 2인, 산림청장 위촉 1인, 금감위원장 위촉 1인으로 구성            | 산림조합법<br>(2005.5.1)                | 산림정책과<br>☎042)<br>481-4135) |
| 12 | 산림조합 외부 회계감사제 도입        | <신 설>                                                | ○ 중앙회 및 일정기준 이상인 조합에 대하여 외부회계 감사제도 도입                         | 산림조합법<br>(2005.5.1)                | 산림정책과<br>☎042)<br>481-4135  |
| 13 | ‘국민참여의 숲’ 단체 참가자격 완화    | ○ 단체의 참가자격<br>- 50인 이상 단체 및 동호회 참여<br>- 비영리 법인·단체 참여 | ○ 단체의 참가자격 완화<br>- 30인 이상 단체 및 20인 이상 동호회 참여<br>- 영리 법인·단체 참여 | 국민참여의 숲<br>지정·운영 계획<br>(2004.12.7) | 산림휴양과<br>☎042)<br>481-4218  |
| 14 | 자연휴양림 이용요금변동제 시행        | ○ 평행별로 연중 이용요금이 일정함                                  | ○ 비수기·주중요금과 성수기·주말요금을 차별화하여 운영                                | 시 책<br>(2005.1.1)                  | 산림휴양과<br>☎042)<br>481-4218  |
| 15 | 산림용 종자 산지증명제 운영         | ○ 종자채취시 임의채취로 종자 산지내역 미작성                            | ○ 종자산지내역 작성 및 산지내역 확인 후 종자검사 실행                               | 종묘사업실시요령<br>(2005.1.1)             | 산림자원과<br>☎042)<br>481-4189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6 | 숲가꾸기 설계·감리제도 확대      | ○시범기관 : 49개 기관                                                                                   | ○시범기관 : 92개 기관                                                                                                                                      | 시 책<br>(2005.1.1)                          | 산림자원과<br>☎042)<br>481-4189                                   |
| 17 | 현금보조조립 확대            | ○현금보조 조립(304ha)                                                                                  | ○임업후계자, 산림경영자 위주 현금보조 조립을 확대<br>(478ha)                                                                                                             | 시 책<br>(2005.1.1)                          | 산림자원과<br>☎042)<br>481-4189                                   |
| 18 | 묘목생산 및 수급제도 개선       | ○산림용 묘목대행생산지정 비율<br>- 경제수 : 60%<br>- 큰나무조립 : 50%<br>- 수원함양조립 : (-)<br><br>○묘목대행생산자 지정<br>- 임의 지정 | ○산림용 묘목대행생산지정 비율<br>- 경 제 수 : 100%<br>- 큰나무조립 : 100%<br>- 수원함양조립 : 100%<br>※ 조립계획량 기준<br><br>○묘목대행생산자 지정<br>- 등록된 묘목생산자에게 공개하여 평가기준에 따라<br>선정(공개지정) | 시 책<br>(2005.1.1)<br><br>시 책<br>(2005.1.1) | 산림자원과<br>☎042)<br>481-4189<br><br>산림자원과<br>☎042)<br>481-4189 |
| 19 | 공공산림정비 숲가꾸기 사업<br>추진 | <신 설>                                                                                            | ○주요 도로변 가시권구역 공공산림에 대한 집중관리<br>- 예산액 : 235억원<br>- 상시고용인원 : 2,000명                                                                                   | 시 책<br>(2005.1.1)                          | 산림자원과<br>☎042)<br>481-4189                                   |
| 20 | 지역특화숲 조성             | <신 설>                                                                                            | ○지속가능한 지역특화숲 조성사업을 정책사업으로<br>추진(10개소, 70억원)                                                                                                         | 시 책<br>(2005.1.1)                          | 산림자원과<br>☎042)<br>481-4189                                   |
| 21 | 밀원식물 육성              | <신 설>                                                                                            | ○밀원식물 육성대책 수립 추진<br>- 경제수(현금보조포함) 조립에 밀원수종 지원<br>- 경관조립에 밀원수종(화목류) 식재 권장<br>- 밀원식물 시범림 조성<br>- 우량 아까시림 숲가꾸기 사업 실시                                   | 시 책<br>(2005.1.1)                          | 산림자원과<br>☎042)<br>481-4189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22 | 산림병해충 방제<br>- 소나무재선충병<br>- 솔잎혹파리<br>- 솔껍질깍지벌레 | ○ 항공약제 : 메프유제<br>○ 신고포상금 10만원<br>○ 피해목 제거 : 9.1~익년 4.30<br>○ 항공엽면시비, 위생간벌, 천적<br>방사사업<br>○ 항공방제 | ○ 치아크로프로이드로 교체<br>○ 신고포상금 50만원<br>○ 피해목 제거 : 연중<br>○ 2005부터 사업 종료<br>○ 2005부터 사업 종료                                                                                                                                                                           | 2005 산림병해충<br>방제 세부지침<br>(2005.1.1)                                                                      | 산림보호과<br><b>☎042)</b><br>481-4246  |
| 23 | 수목원 등 조성사업<br>사전 타당성 심사제도 운영                  | ○ 지자체에서 사업예산 신청시<br>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br>지자체의 사업계획에 의하여<br>예산확보 및 지원(균특회계)                      | ○ 수목원·생태숲·산림박물관 조성 신규·확대·보완<br>사업추진시 부지확보 등 사업계획의 사전 타당성 심<br>사 후 국고지원<br>- 전문가 자문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 실행<br>- 旣착수한 사업도 매년 사업계획 심사                                                                                                                                    | 농림사업시행지침<br>(2005.1.1)<br>수목원조성·관리및<br>운영요령<br>(2005.1.1)                                                | 산림보호과<br><b>☎042)</b><br>481-4249  |
| 24 | 국유림경영관리계획<br>수립                               | <신 설>                                                                                           | ○ 국유림관리소 단위의 장기 종합 국유림경영관리 계획<br>수립                                                                                                                                                                                                                           | 국유림영림계획<br>작성및운영요령<br>(2005.1.1)                                                                         | 국유림경영과<br><b>☎042)</b><br>481-4091 |
| 25 | 국유림 영림계획 평가<br>및 모니터링 실시                      | <신 설><br><br><br><br><br><br><br><br><br><br><신 설>                                              | ○ 국유림 영림계획 평가 실시<br>- 연간평가(1년 평가)<br>대상 : 국유림 모든 영림계획구<br>- 중간평가(5년 평가)<br>대상 : 5년째 되는 영림계획구<br>- 최종평가(10년 평가)<br>대상 : 10년째 되는 영림계획구<br><br>○ 국유림영림계획 모니터링 실시 및 영림계획 변경<br>- 영림계획 운영 5년이 되는 영림계획구를 대상으로<br>관계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모니터링을 실시<br>- 10년 장기계획을 현실에 맞게 변경 | 국유림영림계획<br>작성및운영요령<br>(2005.1.1)<br><br><br><br><br><br><br><br><br><br>국유림영림계획<br>작성및운영요령<br>(2005.1.1) | 국유림경영과<br><b>☎042)</b><br>481-4091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26 | 사방지식재 수종 변경            | ○사방수종 위주 식재<br>- 오리나무, 상수리, 리기다, 아<br>까시 등 | ○토질이 좋은 곳은 경제수 식재<br>- 뿌리가 깊은 참나무류, 소나무(용기묘 포함) 등                         | 시 책<br>(2005.1.1) | 치산과<br>☎042)<br>481-4271   |
| 27 | 산림유역관리 사업 연차별<br>설계·시공 | ○당년 설계·시공                                  | ○연차별 설계·시공<br>- 1년차 : 현지조사, 설계<br>- 2년차 : 치산, 사방사업<br>- 3년차 : 조림, 숲가꾸기 사업 | 시 책<br>(2005.1.1) | 치산과<br>☎042)<br>481-4271   |
| 28 | 해안침식지 복구시 방풍림<br>조성    | <신 설>                                      | ○해안침식지 복구 사업지는 방풍림을 의무적으로 조성                                              | 시 책<br>(2005.1.1) | 치산과<br>☎042)<br>481-4271   |
| 29 | 임도사업의 설계·시공 주체<br>분리   | ○임도사업의 설계·시공을 동<br>일한 업체에서 일괄 시행사례<br>발생   | ○임도사업의 설계·시공 주체를 분리 시행                                                    | 시 책<br>(2005.1.1) | 치 산 과<br>☎042)<br>481-4275 |
| 30 | 임도 유지관리 사업의 민간<br>위탁   | ○국유임도 유지·관리 사업을<br>직영 추진                   | ○국유임도 유지·관리 사업의 민간위탁 추진<br>- 계획 : 1,100km                                 | 시 책<br>(2005.1.1) | 치 산 과<br>☎042)<br>481-4275 |
| 31 | 민유임도 사업의 사전 설계         | ○당년 설계·시공                                  | ○익년도 사업지에 대한 사전설계를 추진하여 충분한<br>검토시간 확보                                    | 시 책<br>(2005.1.1) | 치 산 과<br>☎042)<br>481-4275 |
| 32 | 임도의 성토 경사면<br>기울기 조정   | ○임도설계시 성토 경사면의 기<br>울기를 1:1.5~2.0을 적용      | ○임도설계시 성토 경사면의 기울기를 1:1.0~2.0으로<br>적용                                     | 시 책<br>(2005.1.1) | 치 산 과<br>☎042)<br>481-4275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33 | 산불진화 현장 통합 지휘체계<br>구축    | ○산불진행 단계별 일사분란한<br>지휘체계 미흡 | ○현장 지휘체계 확립<br>- 상황단계별 대응요령 메뉴얼화<br>- 휴대용수첩 제작 배부<br>- 도상훈련의 반복 실시<br><br>○현장지휘 지원수단 강구<br>- 표준화된 산불진화 상황판 활용<br>- 소속식별 조끼 보급<br>- 공중과 지상간 통신 유지<br><br>○ ‘중앙현장지원단’운영 | 시 책<br>(2005.1.1)<br><br><br><br><br><br><br><br><br><br>시 책<br>(2005.1.1) | 산불방지과<br>☎042)<br>481-4251~3<br><br><br><br><br><br><br><br><br><br>산불방지과<br>☎042)<br>481-4251~3 |
| 34 | 산불전문예방진화대<br>확충 및 운영 내실화 | ○운영인원의 부족 및 지침의 미흡         | ○시·군, 관리소별 운영인원 확충<br>- (2004) 16명 → (2005) 20명<br><br>○산불진화대원 진화지침 발간<br><br>○전국 산불진화경연대회 개최                                                                         | 시 책<br>(2005.1.1)                                                          | 산불방지과<br>☎042)<br>481-4251~3                                                                     |
| 35 | 숲생태 전문가 운영               | <신 설>                      | ○국유자연휴양림에 숲 생태전문가를 배치하여 휴양활동<br>지원<br>- 개소당 전문가 1명, 보조인력 2명 배치                                                                                                        | 시 책<br>(2005.1.1)                                                          | 산불방지과<br>☎042)<br>481-4251~3                                                                     |



## 산업자원부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  | 한국산 원산지 판정기준  | ○수입원료나 부품을 사용하여<br>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할 경우<br>이러한 제품의 원산지 판정기<br>준이 부재                                                                | ○한국산 원산지 판정기준 도입<br>① 국내에서 실질적 변형이 일어나야 함<br>② 국내에서 부가가치생산이 51%이상인 제품이어야 함<br><br>○상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의 경우 ‘한국산’<br>또는 ‘Made in KOREA’표시를 할 수 없음 | 대외무역법<br>제24조의2                                     | 무역정책과<br>☎02)<br>2110-5315 |
| 2  | 섬유교역 자유화      | ○미국·EU·캐나다·터키 섬<br>유류 수출시 섬유쿼타제에 의<br>해 의류협회·직물조합의 승<br>인이 필요했음<br><br>○중국·멕시코·UAE·홍콩에<br>폴리에스터직물 수출시 의류<br>협회·직물조합의 승인이 필요   | ○WTO 섬유/의류 협정에 의거 섬유쿼타제가 폐지되어,<br>수출 승인이 불필요해짐<br><br>○섬유교역자유화에 의해 폴리에스터직물 수출승인제<br>폐지                                                          | 수출입공고에서 섬유<br>쿼타 및 폴리에스터직물<br>수출승인 관련<br>규제사항 삭제    | 수출입과<br>☎02)<br>2110-5336  |
| 3  |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개선 | ○외국인기업전용단지와<br>외국인투자지역이 이원화<br><br>○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지<br>원은 국가만 가능<br><br>○사전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br>제재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br>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일원화<br><br>○지방자치단체도 조례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br>현금지원이 가능<br><br>○사전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제재를 형사벌에서 행<br>정벌로 완화                           | 외국인투자촉진법<br>제18조제1항<br><br>동법 제14조의2<br><br>동법 제37조 | 투자정책과<br>☎02)<br>2110-5355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4  | 승강기 관리제도 | <p>○ 승강기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판매 또는 양도한 승강기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필요한 부품과 용역을 제공하여야 함</p> <p>○ 승강기 보수업 등록시 대표자 및 모든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승강기 보수는 하도급 안됨. 다만, 승강기 관리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가능</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 <p>○ 승강기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판매 또는 양도한 승강기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부품과 용역을 사전에 확보하여 승강기 관리주체의 요청을 받은 경우 2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함</p> <p>○ 승강기 보수업 등록시 대표자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되도록 규제를 완화함</p> <p>○ 승강기 관리주체와 보수업자 간의 표준보수계약서를 정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권고함</p> <p>○ 승강기 보수는 하도급 안됨. 다만, 승강기 관리주체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가능(관리주체의 동의 방식을 서면 동의방식으로 구체화함)</p> <p>○ 승강기 검사시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검사필증을 교부하도록 함</p> | <p>승강기제조 및 관리에관한법률 (2005.7.1 예상)</p> <p>* 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2004.128일)되었으나 아직 공포되지 않아 시행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음)</p> <p>- 법률 시행일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 부터임</p> | <p>산업기계과<br/>☎02)<br/>2110-5625</p>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5  |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자동차 등<br>환경친화적자동차개발 및 보급<br>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 ○ 환경친화적자동차개발 및<br>보급촉진에 관한 법적기반 미비 | ○ 환경친화적자동차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적기반<br>구축<br>- 환경친화적자동차개발 및 보급 촉진 기본계획 수립<br>-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촉진 지원시책 수립<br>(시행시기는 관련업계와 부처협의 후 결정)                                                                                                                                                                                  | 환경친화적자동차의<br>개발및보급촉진에<br>관한법률시행               | 수송기계<br>산업과<br>☎02)<br>2110-5633  |
| 6  | 부품소재육성정책변경                                           | ○ 부품소재전문생산기업에만<br>지원대상에 포함         | ○ 부품소재전문기업에 부품소재생산 설비제조기업도<br>추가                                                                                                                                                                                                                                                                          |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br>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br>제2조<br>(2005.3.1) | 자본재산업<br>총괄과<br>☎02)<br>2110-5616 |
| 7  | 첨단산업기술 유출방지                                          | <제 정>                              | ○ 산업기술유출방지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br>○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설치<br>○ 산업기술보호지침 제정·배포<br>○ 산업보안실태조사 및 개선명령 부과<br>○ 국가핵심기술지정<br>○ 국가핵심기술 등의 해외이전 및 해외 매각 등의 경우<br>사전 정부승인<br>○ 첨단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br>○ 첨단산업보안기술 인증제도 도입<br>○ 산업보안관리사제도 도입<br>○ 산업보안 우수기업 지정 및 유공자 포상<br>○ 첨단산업보안기술개발 지원 및 산업보안설비 구축<br>비용 지원<br>○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첨단산업기술유출방지<br>및보호지원에<br>관한법률안,<br>(2005년 하반기) | 산업기술<br>정책과<br>☎02)<br>2110-5172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8  | 산업기술혁신기본법 제정             | ○ 산업기술 지원체계 이원화<br>-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br>(인프라조성), 산업발전법<br>(R&D 지원)<br><br><신 설>    | ○ 산업기술 지원체계 단일화 추진<br><br>○ 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각종 자금·세제 지원<br>및 포상 등 종합적 지원 체계 정비               | 산업기술혁신기본법안,<br>(2005년 하반기)                     | 산업기술<br>정책과<br>☎02)<br>2110-5172 |
| 9  | 신기술인증제품 20%구매<br>대상기관 확대 | ○ 대상기관만 확대                                                                         | ○ 33개 기관 → 151개 공공기관·정부기관으로 확대                                                               | (2005.4월)                                      | 산업기술<br>정책과<br>☎02)<br>2110-5172 |
| 10 | 전자문서 이용확대                | ○ 각종법률에 의하여 의무화된<br>문서행위를 전자문서로 가능<br>한지 여부 불명확<br>○ 전자문서의 안전한 보관과<br>진정성 입증 수단 부족 | ○ 28개 법률에 의한 56개 문서행위를 전자문서로 가능<br>토록 함<br>○ 전자문서의 안전한 보관을 대행할 공인전자문서<br>보관소 제도 시행           | 전자거래기본법<br>개정법률안<br>(2005년 하반기 시행 전망)          | 전자상거래과<br>☎02)<br>2110-5156      |
| 11 |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            |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br>시설과 사용 후 연료 중간저장<br>시설을 통합한 종합관리시설의<br>건설을 추진해 옴               |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우선 추진하되,<br>2008년까지 준공토록 하고, 사용 후 연료 관리방침은<br>향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중장기적 차원에서 결정 | 2004.12.17일<br>원자력위원회를 통해<br>방사성폐기물<br>관리대책 변경 | 원전수거물팀<br>☎02)<br>2110-5533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2 | 대·중·소기업협력자금지원<br>확대           | <신 설>                                                                                                                                               | ○ 대·중·소기업 협력자금지원확대<br>- 대중소기업협력사업추진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br>자금지원하는 경우 정부도 동일금액을 융자지원<br>(150억원→1000억원)<br><br>* 산업기반자금지원계획<br>(산업자원부공고 제2004-237호, 11.15) | 산업발전법제 28조,<br>중소기업진흥및구매<br>촉진에관한법률<br>제5장     | 산업구조과<br>☎02)<br>2110-5162      |
| 13 | 공장설립 절차간소화                    | ○ 공장설립승인가한 30일<br><br><신 설>                                                                                                                         | ○ 공장설립승인가한 단축(30일→20일)<br><br>○ 공장설립승인시 협의사항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br>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협의된 것<br>으로 간주                                                 | 산업집적활성화및공<br>장설립에관한법률<br>개정시행규칙시행<br>(2005.1월) | 건교부,<br>농림부,<br>환경부 등<br>전국지자체  |
| 14 |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br>공장의 입지제한 완화 |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의 생활<br>환경 및 자연환경을 현저히<br>해하게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br>공장의 입지를 제한함으로써<br>특정업종(레미콘, 아스콘, 비<br>금속성형가공 등)에 관하여<br>원천적으로 공장설립을 제한<br>하여 기업규제 및 민원 야기 | ○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밀폐형 설비로 하고 환경오염<br>방지시설 등을 갖춘 도시형 공장으로서 공업용수 또는<br>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공장의 입지를<br>제한 할 수 없도록 하여 기업규제개선 및 경쟁력 제고에<br>기여               | 개정된<br>공장입지기준고시 시행<br>(2004.9.24)              | 건교부,<br>농림부,<br>환경부 등<br>전국 지자체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5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br>관한 통합지침 개정 | ○ 농공단지의 조성·관리·운영의<br>효율성을 높이고 입주기업에<br>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농공단지의<br>활성화를 기하고자 농림부·<br>환경부·건설교통부와 농공단<br>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br>지침을 고시 | ○ 입지선정 기준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조정<br>○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br>○ 농공단지조성 주체를 민간기업에도 확대                   | 농공단지의 개발 및<br>운영에 관한 통합지침<br>(산업자원부 고시 제<br>2004-100호,<br>(2004.10.7)) | 기업혁신지원과<br>☎02)<br>2110-5093 |
| 16 | 지역발전투자협약                     | <신 설>                                                                                                                       | ○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br>중앙정부·지자체의 투자분담, 성과관리 등에 대해<br>상호협약을 체결하는 제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br>제20조, 동법시행령 제19조                                          | 균형발전정책과<br>☎02)<br>2110-5592 |
| 17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br>위한 제도개선 추진  | <신 설>                                                                                                                       | ○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제 도입<br>○ 신·재생에너지 분야 부품공용화·표준화 시행<br>○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지원<br>○ 체계적인 전문인력양성 | 신에너지및재생에너<br>지개발·이용·보급<br>촉진법 개정법률 시행                                  | 신재생에너지과<br>☎02)<br>2110-5404 |
| 18 |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br>신고        | <신 설>                                                                                                                       | ○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는<br>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시 관할관청에 신고                                     | 석유및석유대체연료<br>사업법 제12조<br>(2005.4.23)                                   | 석유산업과<br>☎02)<br>2110-5455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9 | 조건부등록 이후 본등록 의무화  | <신 설>                                                          | ○ 조건부등록을 한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는 조건부등록 후 관할 관청에 본등록을 반드시 하도록 함                                      | 석유및석유대체연료<br>사업법 제11조<br>(2005.4.23)                | 석유산업과<br>☎02)<br>2110-5455               |
| 20 | 석유사업자에 대한 직권등록 취소 | <신 설>                                                          | ○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개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석유판매업을 하지 아니한 때 관할 관청은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석유및석유대체연료<br>사업법 제13조<br>(2005.4.23)                | 석유산업과<br>☎02)<br>2110-5455               |
| 21 | KS표시 인증업체 정기심사 주기 | ○ KS표시를 인증 받은 자는 정기 심사를 인증을 받은 연도부터 5년마다 받아야 함                 | ○ 최초 정기심사는 5년, 그 이후는 정기심사 결과를 고려한 심사등급에 따라 3년 또는 4년으로 단축                                             | 산업표준화법시행<br>규칙운용요강                                  | 기술표준<br>정책과<br>☎02)<br>509-7220          |
| 22 | 공산품안전사후관리 지방이양    | ○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인 안전 검사대상 공산품의 개선·파기 또는 수거명령, 안전검사제도의 이행을 위한 검사 등 | ○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의 개선·파기 또는 수거명령 등은 시·도지사의 자치사무로 이양하고, 안전검사 제도의 이행을 위한 검사 등은 국가 및 시·도의 공동사무로 변경           | 품질경영및공산품<br>안전관리법 제15조,<br>제17조 및 제24조<br>(2005.6월) | 기술표준원<br>생활복지<br>표준과<br>☎02)<br>509-7247 |
| 23 | 어린이 보호포장 의무화      | <신 설>                                                          | ○ 어린이가 음용 또는 흡입할 경우에 중독이 예상되는 공산품에 대하여 어린이 보호포장을 의무화                                                 | 품질경영및공산품<br>안전관리법 제9조의 2<br>(2005.10월)              | 기술표준원<br>생활복지<br>표준과<br>☎02)<br>509-7247 |

## 중 소 기 업 청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  | 중소기업 보호제도 개편 및<br>대·중소기업 협력 지원 | ○고유업종, 지정계열화 제도 등<br>중소기업보호제도 운용 | ○중소기업보호제도 축소·폐지<br><br>○대·중소기업협력재단 설치 및 대·중소기업간 자율적<br>협력추진                                                  | 중소기업의사업영역<br>보호및기업간협력<br>증진에관한법률 개정<br>(2005.3.1) | 기업환경<br>개선과<br>☎02)<br>503-7930  |
| 2  | 재래시장의 정의 명확화                   | ○재래시장 여부 판단기준 불명확                |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br>판단                                                                            | 재래시장육성을위한<br>특별법<br>(2005.3.1)                    | 지식서비스<br>기업과<br>☎02)<br>503-7925 |
| 3  | 시장경영현대화 지원                     | <신 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상인의 전자상거래 도입,<br>공동상품권 발행, 상인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 재래시장육성을위한<br>특별법<br>(2005.3.1)                    | 지식서비스<br>기업과<br>☎02)<br>503-7925 |
| 4  |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선정<br>권한 이양         | ○중소기업청장이 선정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선정                                                                                           | 재래시장육성을위한<br>특별법<br>(2005.3.1)                    | 지식서비스<br>기업과<br>☎02)<br>503-7925 |
| 5  | 시장정비사업의 건폐율 및<br>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신 설>                            | ○건폐율은 주거지역 70% 이하, 상업지역 90% 이하<br><br>○건축물 높이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br>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br>리의 4배 이하 | 재래시장육성을위한<br>특별법<br>(2005.3.1)                    | 지식서비스<br>기업과<br>☎02)<br>503-7925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6  | 재래시장 국세 및 지방세 감면        | <신 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래시장의 비가림시설 설치 등으로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장하는 시설물 등에 부과되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li> <li>○ 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지방세를 감면</li> <li>○ 시장정비사업 시행자가 분양처분으로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환지에 대하여 국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면제</li> </ul> | 재래시장육성을위한<br>특별법<br>(2005.3.1) | 지식서비스<br>기업과<br>☎02)<br>503-7925 |
| 7  | 벤처확인 혁신능력평가 점수<br>상향 조정 | ○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기 위해<br>서는 혁신능력평가 결과가 55점<br>이상이어야 가능 | ○ 현행 55점 이상을 60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                                                                                                                                                                                                                                                                         | (2005.1.1)                     | 창업벤처<br>정책과<br>☎042)<br>481-4386 |
| 8  | 창업사업계획승인기간 단축           | ○ 30일                                              | ○ 20일                                                                                                                                                                                                                                                                                               | 중소기업<br>창업지원법<br>(2005.4월)     | 창업벤처<br>정책과<br>☎042)<br>481-4494 |
| 9  | 창업민원 사전협의제 도입           | <신 설>                                              | ○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 전 사전협의 절차 신설                                                                                                                                                                                                                                                                          | 중소기업<br>창업지원법<br>(2005.4월)     | 창업벤처<br>정책과<br>☎042)<br>481-4494 |
| 10 | 창업사업계획 일괄의제처리<br>대상 확대  | ○ 47개 인허가                                          | ○ 16개 인허가 추가                                                                                                                                                                                                                                                                                        | 중소기업<br>창업지원법<br>(2005.4월)     | 창업벤처<br>정책과<br>☎042)<br>481-4494 |
| 11 | 창업투자회사 업무범위 확대          | ○ 창업자, 벤처기업 투자 및 창투<br>조합 결성                       | ○ 한국벤처투자조합 결성 및 집행추가                                                                                                                                                                                                                                                                                | 중소기업<br>창업지원법<br>(2005.4월)     | 벤처진흥과<br>☎042)<br>481-4487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2 | 창투사 공시제도 신설           | <신 설>                              | ○ 창투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공시제도 도입                                                   | 중소기업<br>창업지원법<br>(2005.4월)       | 벤처진흥과<br>☎042)<br>481-4487  |
| 13 | 창투사 및 조합 연차적 의무 비율 완화 | ○ 등록 후 3년 이내에 연차적으로 50%까지 의무적으로 투자 | ○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후 50%투자                                                            | 중소기업<br>창업지원법<br>(2005.4월)       | 벤처진흥과<br>☎042)<br>481-4487  |
| 14 | 창투사의 일시적 경영지배 목적투자 허용 | <신 설>                              | ○ 투자기업의 회생지원 또는 인수·합병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 중소기업<br>창업지원법<br>(2005.4월)       | 벤처진흥과<br>☎042)<br>481-4487  |
| 15 | 창업보육센터 취소사유 보완        | ○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등                | ○ 보육실을 창업지원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임대 실적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중소기업<br>창업지원법<br>(2005.4월)       | 소기업창업과<br>☎042)<br>481-4410 |
| 16 |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운영         | <신 설>                              |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기업구조 조정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br>○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투자관리전문기관이 집행·운영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br>특별조치법<br>(2005.4월) | 벤처진흥과<br>☎042)<br>481-4419  |
| 17 | 한국벤처투자조합등록제 시행        | <신 설>                              | ○ 중소기업청에 등록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br>특별조치법<br>(2005.4월) | 벤처진흥과<br>☎042)<br>481-4417  |
| 18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해제 요건명시 | <신 설>                              | ○ 지정해제 요건 명시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br>특별조치법<br>(2005.4월) | 벤처진흥과<br>☎042)<br>481-4423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9 |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업종<br>확대                              | ○‘제조업’에 한정                                                     | ○가입대상에 ‘제조업’ 이 외의 ‘제조관련 서비스업’,<br>‘제조관련 도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위 업종을<br>영위하는 기업의 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 | 매출채권보험<br>취급규정<br>(2005.1.1)                   | 금융지원과<br>☎042)<br>481-4378 |
| 20 | 병역대체복무제도개선<br>- 공고 병역지정업체간<br>산학연계 시스템 구축         | <신 설>                                                          | ○공고졸업 예정자가 병역지정업체에서 현장실습<br>학점을 이수, 졸업 후 해당업체로 편입을 유도                                          | 전문연구산업<br>기능요원의 관한 규정<br>개정<br>(병무청, 2005.1.1) | 인력지원과<br>☎042)<br>481-4394 |
| 21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국민주<br>택 우선공급                          | ○공공주택에 한해 공급                                                   | ○공공주택 외에 민영주택도 공급지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br>(2005.1.1)                      | 인력지원과<br>☎042)<br>481-4394 |
| 22 | 인력구조고도화사업 지원                                      | <신 설>                                                          | ○업종조합 등 단체를 통해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추<br>진(15개 조합)                                                      | 중소기업인력지원<br>특별법<br>(2005.2월)                   | 인력지원과<br>☎042)<br>481-4513 |
| 23 | 산학협력기업부설 연구소<br>설치 지원                             | <신 설>                                                          | ○대학내 기업부설 연구소 설치를 지원(30개 대학)                                                                   | 중소기업인력지원<br>특별법<br>(2005.2월)                   | 인력지원과<br>☎042)<br>481-4513 |
| 24 |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제도<br>개선<br>- 지원대상 확대<br>- 지방중심 지원체계 구축 | ○제조업 중심 신기술인증에 한정<br>(NT, EM 등)<br><br>○중소기업청(본청)에만 우선구매<br>요청 | ○지원대상에 소프트웨어제품(GS인증 제품)을 추가<br><br>○지방중소기업청 중심으로 운영체계 시행                                       | 기술개발제품<br>우선구매제도 고시<br>(2005.1월)               | 판로지원과<br>☎042)<br>481-4461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25 |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작성<br>대상기관 확대    | ○정부기관(24개), 지자체 등 98<br>개 기관에 한정 | ○대상기관 확대(115개)                                  | 중소기업진흥 및<br>제품구매촉진법 제10조<br>(2005.3월)             | 관로지원과<br>☎042)<br>481-4461 |
| 26 | 공동브랜드사업 참여기관 확대             | ○KAIST에 한정                       | ○대학 및 연구기관으로 확대<br>(5개)                         | 중소기업진흥 및<br>제품구매촉진법 제15조<br>(2005.4월)             | 관로지원과<br>☎042)<br>481-4468 |
| 27 | 해외시장개척요원양성사업<br>파견기간 탄력적 확대 | ○4개월 균등파견                        | ○최대 6개월 이내 파견<br>- 3개월을 기본으로 하고 우수 활동자는 3개월을 연장 | 2005 해외시장<br>개척요원양성사업<br>기본계획<br>(2004.11.22)     | 해외시장과<br>☎042)<br>481-4465 |
| 28 | 수출지원센터 설치·운영 및<br>관리감독권 조정  | ○산자부                             | ○중기청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br>설치운영 및<br>운영에관한규정<br>(2005.1월 시행예정) | 해외시장과<br>☎042)<br>481-4465 |
| 29 | 수출기업화를 위한<br>자금·인력 등 지원     | <신 설>                            | ○창업초기기업 또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한<br>자금·인력 등 지원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br>설치운영 및<br>운영에관한규정<br>(2005.1월 시행예정) | 해외시장과<br>☎042)<br>481-4465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30 | 중소기업기술연구회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 중소기업(일반회원)의 현금 출자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사업비의 10% 이상</li> </ul> </li> <li>○ 기술료 일시(조기)납부시 감면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료 1년 이내 일시 납부시 20% 감면, 2년 이내 조기납부시 15%감면</li> </ul> </li> <li>○ 기술개발활용보고서 제출기간 (5년)</li> <li>○ 성공보수 일시불 지급</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금 출자비용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회원 출자총액의 30% 이상(총사업비의 7.5% 수준)</li> </ul> </li> <li>○ 감면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일 이내 일시납부시 40%감면, 1년 이내 조기납부시 30%감면, 2년 이내 조기납부시 20%감면</li> </ul> </li> <li>○ 제출기간 단축(5년 → 2년)</li> <li>○ 일시불 또는 5년 이내 분할지급</li> <li>○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사용 의무화</li> </ul> | 중소기업기술연구회<br>등록 및 관리규정<br>(2005.1.1) | 기술정책과<br>☎042)<br>481-4433 |
| 31 | 기술혁신 소그룹 결성 지원 | <신 설>                                                                                                                                                                                                                                                                                                                                                                          | ○ 중소기업이 결성하는 내부의 자발적 기술혁신 연구 모임의 활동비 지원                                                                                                                                                                                                                                                                                                                                                | 중소기업기술혁신<br>촉진법<br>(2005.1.1)        | 기술정책과<br>☎042)<br>481-4433 |
| 32 | 기술혁신교육지원       | <신 설>                                                                                                                                                                                                                                                                                                                                                                          | ○ 중소기업 CEO/CTO 등을 대상으로 기술혁신 교육 실시                                                                                                                                                                                                                                                                                                                                                      | 중소기업기술혁신<br>촉진법<br>(2005.1.1)        | 기술정책과<br>☎042)<br>481-4435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33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br>지원     | <신 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의 신청·평가·사후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br/>종합관리시스템 운용</li> <li>○ 전략과제 지원한도 확대<br/>- 1년, 1억원 → 2년, 2~3억원</li> </ul>                       | 중소기업기술혁신<br>개발사업운영요령<br>(2005.1.1)    | 기술개발과<br>☎042)<br>481-4446  |
| 34 | 산학연 공동기술<br>개발사업 지원    | <신 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모과제 확대 및 기간 연장<br/>- 신청·접수창구를 지방청으로 일원화<br/>- 신청기간 연장(2주 → 1개월)</li> <li>○ 과제특성별 사업비 차등지원 컨소시엄 전문화, 특성화<br/>추진 등</li> </ul> | 산학연공동기술<br>개발사업운영요령<br>(2005.2월)      | 기술개발과<br>☎042)<br>481-4442  |
| 35 | 중소기업 불법기술유출<br>피해방지 지원 | <신 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종별, 분야별 첨단기술 보유업체를 대상으로 기술<br/>유출 보안시스템 진단지도 및 구축 지원<br/>(2005년 : 4.2억원)</li> </ul>                                         | 중소기업기술혁신<br>촉진법<br>(2005.1.1)         | 시험평가과<br>☎042)<br>481-4457  |
| 36 | 중소기업 정보화 종합컨설팅<br>지원   | <신 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정보화종합컨설팅’ 사업에 정보화역기능<br/>방지 지원 추가<br/>- 바이러스 감염, 해킹, 내부자료 유출 등 정보보호 기능</li> </ul>                                      | 중소기업정보화종합<br>컨설팅사업 운영요령<br>(2005.1.1) | 기업정보화과<br>☎042)<br>481-4403 |

## 특 허 청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  | pct온라인전자제출시행         | ○pct서면 출원 및 수수료 은행 방문 납부 | ○pct출원서 등 64종 서식의 온라인 출원시행<br><br>○pct통지서 온라인 발송시행<br><br>○pct수수료 온라인 납부 시행                          | 특허법 시행규칙<br>(2005.2.11)                   | 정보개발과<br>특허넷II<br>TFT<br>☎042)<br>481-5094 |
| 2  | 24시간 365일 서비스 개시     | ○전자출원의 경우 평일 20시까지 출원    | ○단계적으로 전자민원서비스 시간을 확대<br>○2005.2~2005.6월 : 08~24시,<br>2005.7~2005.10월 : 06~24시,<br>2005.11월 : 00~24시 | 특허법 시행규칙<br>(2005.2.11)                   | 정보개발과<br>특허넷II<br>TFT<br>☎042)<br>481-5116 |
| 3  | 채택근무시행               | ○청사 내 근무                 | ○2005.3월부터 채택근무 시범사업 실시<br><br>○2006년부터 본격 시행                                                        | 전자정부구현을 위한<br>행정업무등전자화<br>촉진에관한법률,<br>특허법 | 정보개발과<br>특허넷II<br>TFT<br>☎042)<br>481-5108 |
| 4  | 홈페이지를 통한<br>전자문서제출 등 | ○전자출원소프트웨어로<br>전자문서제출    | ○전자출원프트웨어 및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전자문서<br>제출가능                                                                  | 특허법시행규칙등<br>7개 시행규칙<br>(2005.2.11)        | 정보개발과<br>특허넷II<br>TFT<br>☎042)<br>481-8112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5  | PDF형식의 첨부서류 제출및<br>암호화 과정생략  |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PDF<br>형식의 첨부서류 제출불가<br><br>○전자출원시 민원인의 암호화<br>하여 제출                                              | ○PDF형식의 첨부서류 제출이 가능<br><br>○전자출원시 민원인의 암호화 과정 생략                                                     | 특허법시행규칙등<br>7개 시행규칙<br>(2005.2.11) | 정보개발과<br>특허넷Ⅱ<br>TFT<br>☎042)<br>481-8112  |
| 6  | 통지서 등을 법정주소 이 외의<br>송달장소로 발송 | ○법정주소로만 통지서 등을 발송                                                                                                | ○법정주소 이 외의 송달장소로 통지서 등을 발송                                                                           | 특허법시행령<br>(2005.2.11)              | 정보개발과<br>특허넷 Ⅱ<br>TFT<br>☎042)<br>481-8112 |
| 7  | KT-net 온라인 특허수수료<br>납부서비스 폐지 | ○특허수수료 납부방법<br>- KT-net 온라인 납부 서비스<br>· 이용가능은행 : 농협<br>- 재정정보시스템<br>· 이용가능은행 : 새마을금고,<br>상호저축은행, 신협을 제외한<br>금융기관 | ○농협만 이용가능한 KT-net(Baroeft) 서비스는 중단함<br><br>- 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전<br>금융기관을 통하여 특허수수료를 온라인으로 납부 |                                    | 정보개발과<br>☎042)<br>481-5155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8  | 공무원 직무발명의<br>처분보상금을 50%로 상향조정      | ○ 처분수입금 기준으로 처분보<br>상금을 10~30% 차등 지급                      |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수입금을 기준으로 공무원<br>직무발명의 처분보상금을 일률적으로 50% 지급                                                      | 공무원직무발명의<br>처분·관리 및 보상<br>등에 관한 규정<br>제17조제1항<br>(2005.1.1) | 발명정책과<br>☎042)<br>481-5887       |
| 9  | 변리사1차 시험<br>영어과목의 민간어학시험으로<br>대체   | ○ 1차 시험을 영어과목을 100점<br>만점의 독해위주 필기시험에<br>의함               | ○ 영어과목을 민간어학능력검정시험<br>(TOEFL, TOEIC, TEPS, FLEX, G-TELP)으로 대체<br>하고, 기준점수 이상인 자 중 총득점에 의해 합격자<br>선발           | 변리사법 시행령<br>제4조제1항<br>(2005.1.1)                            | 산업재산<br>보호과<br>☎042)<br>481-5187 |
| 10 | 의장심사등록출원의<br>조기 심사가능               | ○ 의장심사 등록출원에 대해서만<br>출원 후 6월내에 등록결정 할<br>수 있었음            | ○ 의장심사등록 출원에 대해서도 출원 후 6월 이내에<br>등록결정 할 수 있음                                                                  | 의장심사기준<br>제22조제6호 개정<br>(2005.1.1)                          | 심사기준과<br>☎042)<br>481-5273       |
| 11 | 상표이의신청 담당 심사관의<br>변경 및 이의결정처리기간 단축 | ○ 상표 이의신청의 경우 출원공고<br>결정한 심사관이 소속하지 않은<br>다른 과의 심사관이 이의심사 | ○ 출원공고 결정한 심사관이 직접 이의신청 심사를 담<br>당하게 하고, 상표등록출원인의 답변서 제출기간이<br>경과한 후 2개월 이내에 이의 결정을 하게 함으로써<br>이의신청 처리기간을 단축함 | 상표의장심사<br>사무취급규정<br>제27조, 32조 개정<br>(2005.1.1)              | 심사기준과<br>☎042)<br>481-5271       |

## 정 보 통 신 부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  |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제도 도입              | <신 설>                                                                                      | ○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평균 이용자수·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부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br>및정보보호등에<br>관한법률<br>(2005.4.1) | 정보이용<br>보호과<br>☎02)<br>750-1263 |
| 2  | 전화, 모사전송을 통한 광고에 대해 옵트인 제도 도입 | ○ 전화,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음성 광고 전송시 해당음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정보임을 이용자가 알 수 있게 명시토록 의무화   | ○ 전화, 모사전송을 이용한 영리 목적의 광고 전송시 당해 수신자의 사전동의(Opt-in)를 의무화<br><br>○ 특히, 야간시간대에(21~익일 8시) 광고 발송시에는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 정보통신망이용촉진<br>및정보보호등에<br>관한법률<br>(2005.4.1) | 정보이용<br>보호과<br>☎02)<br>750-1263 |
| 3  |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확대 시행              | ○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가 2004. 1월부터 사업자별로 순차적으로 시행<br>- 2004.1.1일 : SKT 시행<br>- 2004.7.1일 : KTF 시행 | ○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확대 시행<br>- 2005.1.1일 : LGT 가입자 번호 이동 시행                                                                                | 전기통신사업법<br>(2005.1.1.)                     | 통신안전과<br>☎02)<br>750-1373       |
| 4  | 인터넷전화(070)서비스 출시              | ○ 일부 사업자중심으로 발신전용·품질미보장 인터넷전화 서비스 제공                                                       | ○ 정부의 제도화 추진에 따라 착신번호(070)가 부여되고,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이 보장된 인터넷전화서비스 시장 등장                                                                   | 전기통신사업법<br>(2005.1.1.)                     | 통신안전과<br>☎02)<br>750-1371       |
| 5  | 주파수사용승인의 유효기간 지정              | ○ 주파수사용승인의 유효기간 미지정                                                                        | ○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주파수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을 10년 범위로 한정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                                                    | 전파법<br>(2005.7.1)                          | 전파방송<br>총괄과<br>☎02)<br>750-2414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6  | 전력선통신설비의 허가기준<br>완화        | ○전선로를 이용한 9kHz 이상의<br>모든 통신설비는 허가를 받고<br>운용          | ○전력선통신설비 중 다른 통신에 방해를 줄 가능성이<br>큰 설비에 한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외의 설비는<br>허가 없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도록 허가기준을<br>완화                                                                                                                                                                                                                 | 전파법<br>(2005.7.1)    | 전파방송<br>총괄과<br>☎02)<br>750-2414      |
| 7  | 정보통신 인증표시<br>미부착 기기의 벌칙 완화 | ○정보통신 인증을 필한 기기에<br>인증표시를 부착하지 아니하고<br>유통한 경우 벌금을 부과 |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 등을 필한 기기에<br>인증표시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유통한 위법행위에<br>대한 벌칙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                                                                                                                                                                                                                                   | 전파법<br>(2005.7.1)    | 전파방송<br>총괄과<br>☎02)<br>750-2414      |
| 8  | 전파정책 결정의 전문성 및<br>신뢰성 제고   | <신 설>                                                | ○전파관련 정책의 전문성·신뢰성 및 합리성을 제고<br>하기 위하여 전파이용 중·장기계획 등 전파관련 주요<br>정책사항을 심의할 전파정책심의위원회의 신설 운영                                                                                                                                                                                                                         | 전파법<br>(2005.7.1)    | 전파방송<br>총괄과<br>☎02)<br>750-2414      |
| 9  | 국내소포 서비스 개편 및<br>요금조정·시행   | ○방문소포의 부과세 미납<br>○손해배상한도 40만원                        | ○접수한 다음날 배달하는 「등기소포」를 기본서비스<br>로 운영하고, 고객이 명칭만으로도 서비스 내용을<br>알 수 있도록 서비스 체계를 개편<br><br>- 손해배상액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br>배송 약속일보다 지연배달시 부가수수료를 보상해<br>주는 ‘고객불만보상제’도입<br><br>- 빠른등기소포 요금을 평균 431원 인하하고, 보통일반<br>소포를 211원 인상하는 등 전체적으로 요금을<br>2.05% 인하<br><br>- 국내특급을 당일특급(수수료 2,000원)과 익일오전<br>특급(수수료 1,000원)으로 개편 | 우편법시행령<br>(2005.1.1) | 우정사업본부<br>소포사업팀<br>☎02)<br>2195-1532 |

## 보 건 복 지 부

| 번호 | 제 목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  | 건강가정지원센터                  | ○지방센터 3개소 → 6개소, 중앙센터 1개소(신설)                                                                                                                                                                                                                          | (2005.1월 중)   | 인구가정정책과<br>☎02)<br>503-7578     |
| 2  | 저소득모부자가정아동양육비             | ○1인당 월 2만원 → 5만원                                                                                                                                                                                                                                       | (2005.1.1)    | 인구가정정책과<br>☎02)<br>503-7578     |
| 3  | 미숙아 의료비                   | ○1인당 최고 3백만원 → 출생시 체중별 차등지원<br>- 2.5~2.0kg : 2백만원<br>- 1.9~1.5kg : 4백만원<br>- 1.5kg 미만 : 7백만원                                                                                                                                                           | (2005.1.1)    | 인구가정<br>정책과<br>☎02)<br>503-7578 |
| 4  | 보건소여성과어린이<br>건강증진사업       | ○영유아성장·발달 스크리닝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br>하고 고위험아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장애발생 최소화 도모<br>23개소 → 145개소                                                                                                                                                      | (2005.1.1)    | 인구가정<br>정책과<br>☎02)<br>503-7578 |
| 5  | 장애인편의시설<br>설치대상시설확대       | ○의원, 치과의원, 이용원, 미용원, 교도소, 구치소를 편의시설설치 대상시설에 포함<br>○아파트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 (2005.7.1)    | 재활지원과<br>☎02)<br>503-8500       |
| 6  | 장애수당 지급대상자확대 및<br>지급방법 개선 | ○지급대상<br>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대상 1,2급 장애인과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자폐)<br>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대상 1-6급 전체 장<br>애인<br>○지급방법<br>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 → 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br>달부터 지급하되, 15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 당월분 장애 수당 전액을 지급하고 15일 이후<br>신청한 경우에는 반액을 지급 | (2005.1.1)    | 장애인<br>정책과<br>☎02)<br>503-7567  |

| 번호 | 제 목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7  | 배아연구기관, 유전자은행,<br>유전자치료기관 등의 해당기관<br>내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br>설치 | ○ 해당 기관에서 행하는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br>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기관위원회를 설치<br>하도록 함                                                                                                                 | 생명윤리및안전에<br>관한법률<br>(2005.1.1) | 보건의료<br>정책과<br>☎02)<br>503-7548 |
| 8  |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                                               |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함                                                                                                                                                                                                  | 생명윤리및안전에<br>관한법률<br>(2005.1.1) | 보건의료<br>정책과<br>☎02)<br>503-7548 |
| 9  | 배아 및 체세포 복제 연구<br>기관의 등록과 계획서 제출                           | ○ 배아연구기관(체세포 복제 포함)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등<br>록을 받아야 하며, 배아연구를 개시하기 전에 배아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br>어야 함<br><br>○ 체세포복제 배아연구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등록을<br>받아야 하며, 체세포복제 배아를 개시하기 전에 체세포복제 배아연구계획서를 제출하<br>여 승인을 얻어야 함 | 생명윤리및안전에<br>관한법률<br>(2005.1.1) | 보건의료<br>정책과<br>☎02)<br>503-7548 |
| 10 | 유전자검사 및 치료의 신고                                             |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함                                                                                                                                                                                                     | 생명윤리및안전에<br>관한법률<br>(2005.1.1) | 보건의료<br>정책과<br>☎02)<br>503-7548 |
| 11 | 유전자은행의 허가                                                  |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 생명윤리및안전에<br>관한법률<br>(2005.1.1) | 보건의료<br>정책과<br>☎02)<br>503-7548 |

| 번호 | 제 목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2 | 의약품제조·수입자의 불량식품<br>자진수거(리콜)신고 의무화 | ○의약품제조업자는 출고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거나 품질이 불량하<br>다는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방식약청장에게 자진수거 사유와 계획을 통보<br>하고 당해 제품을 회수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 | (2005년 상반기)   | 의약품정책과<br>☎02)<br>503-7557  |
| 13 | 의료기관회계기준 적용                       | ○의료기관회계기준 적용대상 의료기관 확대 - 300병상이상 종합병원 개설자 → 200<br>병상이상 종합병원 개설자                                                              | (2005.1.1)    | 보건자원과<br>☎02)<br>503-7547   |
| 14 | 특수의료장비 등록                         | ○특수의료장비(MRI, CT, 유방촬영용장치) 등록관청변경 및 품질검사실시<br>- 등록관청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br>- 품질검사 : 서류검사 1년, 정밀검사 3년마다                            | (2004.12.1)   | 보건자원과<br>☎02)<br>503-7547   |
| 15 | 혈액원 허가제도 및 심사평<br>가제 실시           | ○혈액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혈액제제 안<br>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에 대하여 심사평가 실시                                        | (2005.1.29)   | 혈액정책과<br>☎02)<br>503-7365   |
| 16 | 혈액원 제조관리 책임자<br>고용의무화             | ○혈액원의 혈액제제 제조업무 관리를 위하여 1인 이상의 의사를 두어야 함                                                                                      | (2005.1.29)   | 혈액정책과<br>☎02)<br>503-7365   |
| 17 | 지방공사의료원 관리권 이관                    | ○지방공사의료원의 관리 소관 중앙부처가 종전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br>(『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제정)                                                           | (2005년 하반기)   | 공공보건정책과<br>☎02)<br>504-3986 |

| 번호 | 제 목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8 | 안마시술소 등의 변경신고<br>사항 확대 |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자 및 그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2005.1.1)    | 보건의료정책과<br>☎02)<br>503-7548 |
| 19 | 금연사업                   |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 154원→354원                                                                                                                                                                    | (2005년도)      | 건강정책과<br>☎02)<br>503-7537   |
| 20 | 보건소건강생활실천사업            | ○건강생활실천사업 156개 보건소에서 246개 전국 보건소로 확대                                                                                                                                                       | (2005.1.1)    | 건강정책과<br>☎02)<br>503-7538   |
| 21 | 금연상담 치료                | ○금연클리닉이 전국 246개 보건소로 확대                                                                                                                                                                    | (2005.1.1)    | 건강정책과<br>☎02)<br>503-7538   |
| 22 | 희귀·난치성질환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 11종→71종<br>(2004년 혈우병, 근육병, 고셔병, 베체트병, 크론병 등 11종에서 2005년도에는 계속지원 11종 질병을<br>포함하여 신규지원 헌팅톤병, 윌슨병, 유코다당증, 모야모야병, 다운증후군, 루프스, 쿠르즈병,<br>터너증후군 등 60종을 포함하여 총 71종의 질환으로 확대하기로 함) | (2005.1.1)    | 질병정책과<br>☎02)<br>503-7543   |
| 23 | 지역암센터 설치               | ○국가50억, 지방비 20억, 대학병원 30억 (3개소)                                                                                                                                                            | (2005.1.1)    | 암관리과<br>☎02)<br>503-7363    |
| 24 | 국가암조기검진 대상 확대          | ○검진대상자 확대 120만명 → 220만명                                                                                                                                                                    | (2005.1.1)    | 암관리과<br>☎02)<br>503-7363    |
| 25 | 저소득암환자 사후관리            | ○소아암환자 확대 500명 → 1,200명                                                                                                                                                                    | (2005.1.1)    | 암관리과<br>☎02)<br>503-7363    |
| 26 | 정신건강상담전화               |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 상담을 위한 정신건강상담전화 운영                                                                                                                                                            | (2005.1.1)    | 정신보건과<br>☎02)<br>503-7544   |

| 번호 | 제 목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27 |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 ○정신질환자 사회복지 시설수 : 101개소 → 106개소                                                                                                                                                                                                      | (2005.1.1)                                                                  | 정신보건과<br>☎02)<br>503-7544          |
| 28 | 정신보건센터                  | ○정신보건센터 개소수 : 117개소 → 126개소                                                                                                                                                                                                          | (2005.1.1)                                                                  | 정신보건과<br>☎02)<br>503-7544          |
| 29 | 건강보험요양급여심사청구<br>제도개선    | ○요양급여비용 심사 삭감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무조건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나,<br>이의신청 전에 심사부서에 추가적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권리구제의 편의<br>도모                                                                                                                               | (2005.1.1.)                                                                 | 보험관리과<br>☎02)<br>503-7572,<br>7573 |
| 30 | 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여부<br>확인업무 조정 | ○공단과 심평원의 업무중복으로 인한 혼란을 제거하기 위하여, 국민이 양 기관에 선택적으로<br>건강보험 적용여부를 손쉽게 확인                                                                                                                                                               | (2005.1.1)                                                                  | 보험관리과<br>☎02)<br>503-7572,<br>7574 |
| 31 | 농어민건강보험료 경감             | ○보험료의 30%→보험료의 40%(추가소요농특예산에서 지원)                                                                                                                                                                                                    | (2005.1.1)                                                                  | 보험정책과<br>☎02)<br>503-7544          |
| 32 | 보험적용대상 확대               | ○MRI(자기공명영상)<br>비급여→급여<br>○소이증(한쪽 귀 또는 양쪽 귀가 정상보다 훨씬 작고 모양이 변형된 기형)<br>비급여 →요양급여비용의 20%<br>○안면화상<br>비급여→요양급여비용의 20%<br>○연골무형성증<br>비급여→요양급여비용의 20%<br>○인공와우(인공달팽이관)<br>요양급여비용전액본인부담→요양급여비용의 20%<br>(6개월내 최대 300만원 초과시는 최대300만원까지만 부담) | ○(2005.1월 중)<br>○(2005년 하반기)<br>○(2005년 하반기)<br>○(2005.1.1)<br>○(2005.1월 중) | 보험급여과<br>☎02)<br>503-7534          |



| 번호 | 제 목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33 | 본인부담경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분만시 본인부담 면제<br/>요양급여비용의 20% → 면제</li> <li>○ 미숙아 입원진료시 본인부담 면제<br/>요양급여비용의 20% → 면제</li> <li>○ 회귀·난치성 질환 본인부담 경감대상 확대 (요양기관 외래 약국이용시)<br/>대상항목 : 74 → 대상항목 : 99개<br/>(척추갈림증 등 25개 추가)</li> </ul> | (2005.1월 중)   | 보험급여과<br>☎02)<br>503-7534 |
| 34 | 급여기준 확대            | ○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간 연장 90일→ 180일                                                                                                                                                                                                               | (2005년 상반기)   | 보험급여과<br>☎02)<br>503-7534 |
| 35 | 최저생계비<br>(기초생계비)인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생계비 평균 8.9% 인상</li> <li>-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비도 인상</li> <li>예시) 2인 가구 최저생계비(현금급여기준) 인상액<br/>2004년 610(537) → 2005년 669(572)천원</li> </ul>                                                               | (2005.1.1)    | 생활보장과<br>☎02)<br>503-7565 |
| 36 |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li> <li>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달리하는 2촌의 혈족<br/>→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달리하는 2촌의 혈족</li> </ul>                                                                                      | (2005.7.1)    | 생활보장과<br>☎02)<br>503-7565 |
| 37 | 차상위 의료급여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4 : 차상위 계층 회귀난치성질환자(1종),<br/>만성질환자(2종) 의료급여</li> <li>○ 2005 : 차상위 계층 회귀난치성질환자(1종),<br/>만성질환자(2종),</li> <li>○ 12세 미만 아동 의료급여(2종) 확대</li> </ul>                                                  | (2005.1.1)    | 의료급여과                     |

| 번호 | 제 목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38 | 입양아동 의료급여                 | ○입양아동 의료급여(1종)                                                                                                                              | (2005.1.1)    | 의료급여과                       |
| 39 | 한방지역보건사업                  | ○사업대상 보건소 173개 → 177개소로 확대                                                                                                                  | (2005.1.1)    | 한방의료(담)<br>☎02)<br>503-7535 |
| 40 |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소<br>지원       |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제공<br>운영하는 20개 보건소지원(신규)                                                                                                | (2005.4월 중)   | 한방의료(담)<br>☎02)<br>503-7535 |
| 41 |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               | ○한방건강증진 사업에 필요한 의료장비 등 지원(신규)<br>- 사업대상 보건(지)소 320개 한방진료실                                                                                   | (2005.4월 중)   | 한방의료(담)<br>☎02)<br>503-7535 |
| 42 |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 ○한방원리를 응용한 핵심원천기술개발 연구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비 35억원 → 65억원<br>으로 확대                                                                                   | (2005.3월 중)   | 한방의료(담)<br>☎02)<br>503-7535 |
| 43 | 우수한약관리 기준마련               | ○국산한약(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배, 제조, 유통 단계별 우수한약관리기준<br>마련시행<br>- 우수한약관리기준제정, 시행<br>· 우수한약재재배관리기준(GAP)<br>· 우수한약제조관리기준(GMP)<br>· 우수한약유통관리기준(GSP) | (2005상반기)     | 한약(담)<br>☎02)<br>503-7529   |
| 44 | 우수한약재<br>재배농가품질<br>검사비 지원 | ○국내한약재 재배농가(총35,000호)에 대한 우수한약재재배지원<br>- 80농가에 대하여 품질검사비 지원                                                                                 | (2005상반기)     | 한약(담)<br>☎02)<br>503-7529   |

## 환 경 부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  |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br>구매 의무화        | <p style="text-align: center;">&lt;자율구매&gt;</p> <p>○ 공공기관은 환경마크상품과<br/>재활용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p> | <p style="text-align: center;">&lt;의무구매&gt;</p> <p>○ 공공기관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친환경<br/>상품을 구매하여야 함<br/>- 다만, 안정적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한<br/>우선구매 이행을 위해 상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br/>예외 인정</p> | 친환경상품구매촉진<br>에 관한법률<br>(2005.하반기) | 환경경제과<br>☎02)<br>2110-6678   |
| 2  | 화학물질확인 제도 전면 도입              | ○ 화학물질 수입자가 화학물질<br>성분내역서를 제출하여 확인<br>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세관에<br>제출                               | ○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물질이<br>신규물질, 유독물 등 규제대상 화학물질에 해당하는<br>지의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 유해화학물질관리법<br>(2005.12월)           | 화학물질안전과<br>☎02)<br>2110-7953 |
| 3  | 유독물, 관찰물질의 제조·<br>수입신고 제도 개선 | ○ 예상 수입(제도)량을 매년 신고                                                                        | ○ 영업개시 시점에서 1회 신고하고 이후에는 중요한<br>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변경신고                                                                                                                              | 유해화학물질관리법<br>(2005.12월)           | 화학물질안전과<br>☎02)<br>2110-7953 |
| 4  |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지정·<br>관리         | ○ 유독물중에서 취급제한·금지<br>물질로 지정하여 영업허가 등<br>관리                                                  | ○ 유독물이 아닐지라도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br>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하여 관리                                                                                                                             | 유해화학물질관리법<br>(2005.12월)           | 화학물질안전과<br>☎02)<br>2110-7953 |
| 5  | 자체방제계획의 수립·제출                | ○ 2,000톤 이상의 모든 유독물<br>영업자에 대해 자체방제계획을<br>수립하도록 의무                                         | ○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경우에만 자체방제계획을 수<br>립하도록 함                                                                                                                                          | 유해화학물질관리법<br>(2005.12월)           | 화학물질안전과<br>☎02)<br>2110-7953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6  |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및<br>행위제한          | <신 설> | <p>○ 핵심구역에서의 개발행위제한<br/>&lt;예외&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군사시설, 도로·철도·하천 등 공용·공공용 시설, 생태통로 등 자연환경보전시설, 산림보호·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과 임업시험연구시설,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복원·보수 등, 대체에너지 이용·보급시설, 일정 조건하의 광산개발,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계되는 일정 조건하의 시설</li> <li>- 위반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li> </ul> <p>○ 완충구역에서의 개발행위제한<br/>&lt;예외&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구역에서의 허용행위, 수목원·자연휴양림 등 산림공익시설, 임도 등 산림경영 관련시설, 교육·연구 및 기술개발 관련시설, 일정규모이하의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종교시설 증·개축, 전력·석유 또는 가스공급시설</li> <li>-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li> </ul>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br>법률<br>(2005.1.1) | 자연정책과<br>☎02)<br>2110-6740          |
| 7  | 밀렵된 야생동물을 먹는 자도<br>처벌          | <신 설> | ○ 반달가슴곰, 사향노루, 멧돼지, 고라니 등 밀렵된 야생동물 32종을 알고서 먹는 사람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야생동식물보호법<br>(2005.2.10)        | 자연자원과<br>☎02)<br>2110-6744          |
| 8  | 국내서식하는 뱀, 개구리 포<br>획금지 및 수출입허가 | <신 설> | ○ 산개구리, 유혈목이 등 국내 서식하는 뱀, 개구리를 허가없이 포획하거나 수출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야생동식물보호법<br>(2005.2.10)        | 자연자원과<br>☎02)<br>2110-6746,<br>6747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9  |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br>194종에서 221종으로 확대 | ○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br>보호야생동식물 194종 지정관리 | ○ 멸종위기야생동식물 I급, II급으로 명칭을 변경하고<br>총 221종을 지정하여 보호·관리<br>※ 허가없이 포획·채취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br>이하 벌금                                                       | 야생동식물보호법<br>(2005.2.10)           | 자연자원과<br>☎02)<br>2110-6761,6762 |
| 10 | 조수보호구를 야생동식물<br>보호구역으로 개편      | ○ 조류, 포유류 보호를 위해 조수<br>보호구 지정·관리   | ○ 조류, 포유류뿐 아니라 야생동·식물 전체에 대해<br>서식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수보호구를 야생동식물<br>보호구역으로 개편                                                                                    | 야생동식물보호법<br>(2005.2.10)           | 자연자원과<br>☎02)<br>2110-6746,6747 |
| 11 | 대규모 국책사업의<br>사전환경성검토 실시        | ○ 산업단지 등 일부 사업에만<br>환경성을 검토        | ○ 도로, 철도, 댐, 운하, 항만 등 국가·지자체가 시행<br>하는 500억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해 타당성조사단계<br>에서 환경성을 검토<br>- 일반국도, 지방도 등은 도로노선 선정단계에서<br>환경성을 검토                                     | 환경정책기본법<br>시행령<br>(2005.1.1)      | 국토환경보전과<br>☎02)<br>2110-6696    |
| 12 |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강화                  | ○ 휘발유 제조기준중 벤젠함량<br>을 1.5%로 규제     | ○ 휘발유 제조기준 중 벤젠함량을 1.0%로 강화                                                                                                                                 | 대기환경보전법<br>(2005.1.1)             | 대기정책과<br>☎02)<br>2110-6777      |
| 13 | 자동차연료 품질등급제 도입                 | <신 설>                              | ○ 수도권 지역에 공급되는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하여<br>정기적으로 정유사별 환경품질등급 설정 및 공개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br>관한특별법<br>(2005.1.1) | 대기정책과<br>☎02)<br>2110-6777      |
| 14 | 저공해자동차 판매 및 구매<br>의무화          | <자율구매><br>○ 자율 판매 및 자율구매           | <의무구매><br>○ 연평균 판매수량 3,000대 이상(승합·화물차 300대<br>이상)을 제작·판매하는 자는 일정 비율(환경부 고<br>시)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급<br>○ 10대 이상 차량을 보유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는<br>차량 구매시 20% 이상 저공해차 의무 구매 |                                   | 대기총량제도과<br>☎02)<br>2110-7927    |
| 15 | 휘발성유기화합물의<br>함유기준 설정           | <신 설>                              | ○ 수도권 지역에서 사용되는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br>화합물의 함유기준 설정                                                                                                                |                                   | 대기총량제도과<br>☎02)<br>2110-7927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6 | 소형소각시설 배출허용기준 강화                     | ○ 황산화물 및 먼지 (소각용량 2톤/시간 미만 100 ppm, mg/Sm <sup>3</sup> ) | ○ 황산화물은 70ppm, 먼지는 80mg/Sm <sup>3</sup> 로 강화                                                                      |                       | 대기총량제도와<br>☎02)<br>2110-7927 |
| 17 | 악취방지법 시행                             | ○ 악취를 대기배출시설 및 생활 악취시설로 구분하여 차등 관리                       | ○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관리하던 악취를 악취방지법에서 관리하게 되고 주요공단 및 악취민원다발지역 등을 시·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                             | 악취방지법<br>(2005.2.10)  | 대기관리과<br>☎02)<br>2110-6788   |
| 18 |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시행                        | ○ 2004.12.31일까지 시행하도록 정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 ○ 강화된 대기배출허용기준 시행<br>- 2000.10.30일 예고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암모니아 등 가스상물질 18종, 먼지 등 입자상물질 9종) 시행                             | 대기환경보전법<br>(2005.1.1) | 대기관리과<br>☎02)<br>2110-6791   |
| 19 | 휘발성유기화합물 하부적하방식 개선                   | ○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유조차 등에 싣고 내릴 때 하부로만 싣고 내리도록 일률적으로 정함         | ○ 휘발성유기화합물 하부적하방식 관련 규정 개선<br>-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경우 물질의 특성상 상온에서 고체로 되거나 점도가 커서 하부로 싣고 내리기가 곤란할 때 상부로도 싣고 내릴 수 있도록 예외 인정 | 대기환경보전법<br>(2005.1.1) | 대기관리과<br>☎02)<br>2110-6793   |
| 20 | 자동차의 배출가스 상태를 상시 확인하는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장착 | <신 설>                                                    | ○ 2005년부터 소형 승용차 중 출고비용 10%는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가 부착되어 배출가스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경고등이 켜져서 필요한 적정정비를 받을 수 있음                        | 대기환경보전법<br>(2005.1.1) | 교통환경기획과<br>☎02)<br>2110-6809 |
| 21 |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책임자 자격요건 완화             | ○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 경력 5년 이상                                  | ○ 정기검사와 정밀검사의 합산경력도 인정                                                                                            | 대기환경보전법<br>(2005.1.1) | 교통환경관리과<br>☎02)<br>2110-6857 |
| 22 | 정밀검사 지정사업자의 검사 업무 범위 확대              | ○ 지정사업자는 비사업용 자동차의 검사만 가능                                | ○ 비사업용 자동차 외 사업용 자동차의 검사 허용                                                                                       | 대기환경보전법<br>(2005.1.1) | 교통환경관리과<br>☎02)<br>2110-6857 |
| 23 | 정밀검사 과징금 부과방식 개선                     | ○ 위반횟수에 따라 정액제 방식의 과징금 부과                                | ○ 사업자의 월평균 수익금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차등 부과                                                                                   | 대기환경보전법<br>(2005.1.1) | 교통환경관리과<br>☎02)2110-6857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24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시행 | ○낙동강수계 시지역, 금강 및 영산강수계의 광역시·<br>시지역 중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지역 | 낙동강·금강·영산<br>강수계물관리및주민<br>지원등에관한법률<br>제11조제1항<br>(2005.8.1) | 유역제도과<br>☎02)<br>2110-6837 |
| 25 |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br>부과율 조정      | ○1톤당 120원        | ○1톤당 130원                                           | 한강수계상수원수질<br>개선및주민지원등에<br>관한법률                              | 유역제도과<br>☎02)<br>2110-6840 |
| 26 |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br>부과율 조정      | ○1톤당 110원        | ○1톤당 120원                                           | 낙동강수계물관리및<br>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br>제32조제1항<br>(2005.1.1)            | 유역제도과<br>☎02)<br>2110-6840 |
| 27 | 금강수계 물이용 부담금<br>부과율 조정      | ○1톤당 130원        | ○1톤당 140원                                           | 금강수계물관리및주<br>민지원등에관한법률<br>제30조제1항<br>(2005.1.1)             | 유역제도과<br>☎02)<br>2110-6840 |
| 28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br>부담금 부과율 조정 | ○1톤당 130원        | ○1톤당 140원                                           | 영산강·섬진강수계<br>물관리및주민지원등<br>에관한법률<br>제30조제1항<br>(2005.1.1)    | 유역제도과<br>☎02)<br>2110-6840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29 |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br>통행제한 지역의 확대 |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상수원<br>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으로<br>지정된 하천 및 호소의 인접<br>상류지역에 대한 유해물질 수송<br>차량 통행제한도로의 범위 등을<br>정함<br>- 팔당호주변 일반국도 제6호선<br>12km 등 8개 지역 20개 도로<br>구간 188.7km 지정.                                                     | ○팔당호 주변 국도 45호선 27km 등 5개 지역 8개 도로<br>구간 98.6km를 추가로 지정함.<br>- 팔당호 주변 국도 45호선 27km<br>- 용담호 지방 795호선 20km, 군도 22호선 5.5km<br>- 상사호 지방도 58호선 9.0km<br>- 운문댐 국도 20호선 12.9km<br>- 남강댐 국도 7호선 3.1km, 군도 18호선 18.0km<br>- 밀양댐 지방 1050호선 6.6km<br>※ 13개 지역 28개 도로 287.3km | 수질환경보전법<br>제29조의3,<br>동법시행규칙<br>제48조의2제2항,<br>별표9의3<br>(2005.6.14) | 산업폐수과<br>☎02)<br>2110-6845 |
| 30 |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br>검사기관지정 강화    | ○정수기 기준·규격<br>- 일반정수성능검사 항목<br>: 냄새, 맛, 색도, 탁도, 일반세균<br>- 정수성능 검사시 유출수가 먹는<br>물 수질기준 이내면 합격<br>- 제거율: 냄새, 맛, 탁도(80%),<br>색도(70%), 일반세균(100cfu/<br>ml이하)<br>○정수기 필터 원산지 표시<br>-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시 필터<br>명세제출<br>- 필터의 표시기준 없음 | ○정수기 기준·규격 변경<br>- 일반정수성능검사 항목: 냄새, 맛, 색도, 탁도, 클로<br>로포름<br>- 건강상 유해영향물질항목(33개)은 유출수가 유입수<br>함유농도이내여야 합격<br>- 제거율 강화: 냄새, 맛, 탁도(90%), 색도, 클로로포름<br>(80%)<br>○정수기 필터 원산지 표시<br>-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시 필터 원산지 증명서류 추가<br>제출<br>- 필터의 원산지, 제조원, 교체시기 등 표시 의무화                 | 정수기의기준·규격<br>및검사기관지정고시<br>(2005.5.23)                              | 수도정책과<br>☎02)<br>2110-6882 |
| 31 | 하수 및 오수·분뇨통계 통합              | ○하수도 통계 및 오수·분뇨<br>통계를 별도로 발간                                                                                                                                                                                           | ○하수도 통계 및 오수·분뇨통계를 통합하여 발간<br>- 하수 및 오수·분뇨 통합의 추세에 맞춰 하수 및 오수·<br>분뇨통계를 통합 발간하여 통계 활용의 편리성 및<br>효용성 등 제고                                                                                                                                                           | (2005.1.1)                                                         | 생활하수과<br>☎02)<br>2110-6885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32 |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실태평가<br>결과에 따른 포상방법 확대 | ○ 평가결과 최우수처리시설<br>운영실무자에 장관표창 실시 | ○ 하수처리장 시설규모를 5단계로 구분하여 규모별<br>최우수 처리시설에 총 5,000만원씩 포상금 지급 및<br>운영 실무자 표창수여                                       | 하수도시설운영관리<br>업무처리 통합지침<br>(2005.1.1)     | 생활하수과<br>☎02)<br>2110-6889   |
| 33 | (★)토양오염의 신고                      | <신 설>                            | ○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br>처리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누출·유출한 경우에는<br>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토양환경보전법<br>(2005.7.1)<br>* 개정·공포일에 따라 변경 | 토양수질관리과<br>☎02)<br>2110-6766 |
| 34 | (★)오염토양 반출처리                     | <신 설>                            | ○ 부지의 협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부지안에서 오<br>염토양의 정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가<br>보유한 시설에 반출 정화                                      | 토양환경보전법<br>(2005.7.1)<br>* 개정·공포일에 따라 변경 | 토양수질관리과<br>☎02)<br>2110-6766 |
| 35 | (★)오염토양의 투기금지                    | <신 설>                            | ○ 오염토양의 투기 및 정화과정에서 누출·유출 행위<br>금지                                                                                | 토양환경보전법<br>(2005.7.1)<br>* 개정·공포일에 따라 변경 | 토양수질관리과<br>☎02)<br>2110-6766 |
| 36 | (★)오염토양 위해성 평가                   | <신 설>                            |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원인자를<br>알 수 없거나 오염원인자가 정화능력이 없는 경우 오염<br>토양을 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해성 평가를<br>실시하여 정화범위 및 정화시기 조정 | 토양환경보전법<br>(2005.7.1)<br>* 개정·공포일에 따라 변경 | 토양수질관리과<br>☎02)<br>2110-6766 |
| 37 | (★)토양정화의 검증                      | <신 설>                            | ○ 일정규모 이상의 오염토양을 정화할 경우에는 토양<br>관련전문기관에게 위탁하여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br>대한 검증을 받아야 함                                        | 토양환경보전법<br>(2005.12월)<br>* 개정·공포일에 따라 변경 | 토양수질관리과<br>☎02)<br>2110-6766 |
| 38 | (★)토양정화업의 등록                     | <신 설>                            | ○ 토양정화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규모 이상의<br>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함                                                    | 토양환경보전법<br>(2005.7.1)<br>* 개정·공포일에 따라 변경 | 토양수질관리과<br>☎02)<br>2110-6766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39 | 폐기물 감량지침 준수의무<br>대상사업자 확대 | ○ 규모 : 지정폐기물을 연간 200톤<br>이상 배출하는 자 | ○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br>를 감량지침 준수의무 사업자에 규모에 포함<br>- 규모<br>· 최근 3년간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을<br>200톤 이상 배출하는 자<br>· 최근 3년간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br>외의 폐기물을 1,000톤 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관리법시행령<br>(2005.1.1)                             | 폐기물정책과<br>☎02)<br>2110-6921 |
| 40 |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br>제도 실시   | ○ 시(市) 지역의 음식물류폐기물<br>매립 가능        | ○ 시(市)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바로 매<br>립할 수 없음<br>- 소각·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 후 발생하는<br>잔재물만 매립 가능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2005.1.1)                           | 생활폐기물과<br>☎02)<br>2110-6927 |
| 41 | 순환골재의 재활용용도 및<br>품질기준 설정  | <신 설>                              | ○ 건설폐기물의 분리·선별·파쇄 등을 거쳐 생산된<br>순환골재(循環骨材)의 재활용용도를 도로공사용, 저<br>지대·연약지반을 메우는 성토용 및 폐기물매립시설<br>의 복토용 등으로 다양화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재활<br>용을 도모하고,<br>- 재활용 제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하여<br>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및 설계·시공지침을 마련 | 건설폐기물의재활용<br>촉진에관한법률<br>제35조 및 시행령 제4조<br>(2005.1월) | 산업폐기물과<br>☎02)<br>2110-6936 |
| 42 | 공공 건설공사의 순환골재<br>의무사용     | <신 설>                              | ○ 국가 및 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도로<br>공사, 하수관거공사, 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 등에<br>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생산된 순환골재를 일정량<br>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천연골재의 대체재로<br>적극 활용                                                                 | 건설폐기물의재활용<br>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br>(2005.1월)               | 산업폐기물과<br>☎02)<br>2110-6936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43 |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br>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신 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적정처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재활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li> <li>-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술, 순환골재의 생산·수요 등에 관한 정보의 종합적인 유통체계를 갖추어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구축</li> </ul> | 건설폐기물의재활용<br>촉진에관한법률<br>(2005.1.1)     | 산업폐기물과<br>☎02)<br>2110-6944 |
| 44 | 건설폐기물처리업자<br>용역이행능력 평가          | <신 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할 때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li> <li>- 용역이행실적, 자본금, 기술력 및 신인도 등을 분석하여 업체별로 평가</li> </ul>                                                 | 건설폐기물의재활용<br>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br>(2005.1.1) | 산업폐기물과<br>☎02)<br>2110-6944 |
| 45 |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br>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방치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조치 제도 이 외에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기술지원 및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건설폐기물 보관실태, 허용보관량 준수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li> </ul>                          | 건설폐기물의재활용<br>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br>(2005.1.1) | 산업폐기물과<br>☎02)<br>2110-6944 |
| 46 | 폐기물 처리업자의 수탁능력<br>확인            | <신 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자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이 포함된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제출 받아 확인 후 폐기물 위탁</li> </ul>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2005.1.1)              | 산업폐기물과<br>☎02)<br>2110-6936 |
| 47 | EPR 대상품목 확대                     | ○2004년 현재 생산자에게 재활용<br>의무를 부여하는 제품이 윤활유<br>등 16개 제품임 | ○2005년부터 휴대폰 및 오디오를 EPR제도에 신규 편입·<br>관리                                                                                                                                                                                                        | 자원의절약과재활용<br>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br>(2005.1.1) | 자원재활용과<br>☎02)<br>2110-6953 |

## 노 동 부

| 번호 | 제 목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  | 보험료 신고·납부기한 연장                      |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시기를 사업체의 결산시기를 고려하여 연도 초일부터 70일 내 (3.10 또는 3.11) → 3.31일까지로 연장                                     | 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1항 (2005.1.1) | 산재보험과<br>☎02)<br>503-9761~2 |
| 2  | 5인 미만 사업장 징수특례제도 신설                 |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부 편의 및 보험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준임금을 사용하여 보험료를 부과·고지하는 특례제도 도입                                    | 보험료징수법 제21조 (2005.1.1)               | 산재보험과<br>☎02)<br>503-9761~2 |
| 3  |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 기간 축소               | ○연체금의 부과기간을 60개월 → 36개월로 단축                                                                                       | 보험료징수법 제25조 (2005.1.1)               | 산재보험과<br>☎02)<br>503-9761~2 |
| 4  | 보험사무대행기관 제도개선                       | ○인가대상 확대 : 법인 → 법인·개인(공인노무사)<br>○영세사업장 위탁, 피보험자 관리강화, 신규가입 촉진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보험사무대행, 지원금의 지급 기준 변경 등         | 보험료징수법 제33,35조 (2005.1.1)            | 산재보험과<br>☎02)<br>503-9761~2 |
| 5  | 동일 사업주 일괄적용 대상 확대                   | ○사업주의 업무편의 및 보험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동일 사업주가 행하는 각각의 사업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건설공사 등) 하나의 사업으로 적용하는 일괄적용의 대상을 30억 이상 → 모든 면허업자로 확대 | 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6조 (2005.1.1)             | 산재보험과<br>☎02)<br>503-9761~2 |
| 6  |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대상 축소 및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요건 완화 | ○도급사업 일괄적용 대상 : 건설업·제조업·수선업, 기타의 사업 → 건설업 인·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요건 : 면허업자, 보험료 납부인수 서면계약체결 이외 요건(1억원 이상 등)은 삭제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2005.1.1)        | 산재보험과<br>☎02)<br>503-9761~2 |

| 번호 | 제 목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7  |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확대               | ○현재 적용제외되고 있는 ‘기타의 사업’에 대해서도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제고, 재해예방 노력 유도 등을 위해 개별실적요율제도를 적용확대                                                                                              | 보험료징수법 제15조<br>(2005.1.1)             | 산재보험과<br>☎02)<br>503-9761~2 |
| 8  | 직장보육교사등 임금 지원                | ○1인당 지원액 인상(월 70만원 → 월 80만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br>제34조의4제2항<br>(2005.1.1) | 여성고용과<br>☎02)<br>502-5441   |
| 9  |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의<br>대행수수료 규정의 폐지 | ○종전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이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대행수 수료를 정부에서 정하는 금액이상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안전·보건관리대행기 관의 기술지도 능력 등 대행서비스의 질에 따라 계약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수수료가 결 정될 수 있도록 대행수수료에 관한 위임규정을 삭제함 | 산업안전보건법<br>시행령 제15조 제3항<br>(2005.1.1) | 산업안전과<br>☎02)<br>504-2052   |
| 10 | CLEAN사업장 조성지원 확대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약 9,000개소)을 CLEAN 사업장으로 조성 지원<br>- 근원적인 재해예방과 실질적인 작업환경개선이 가능하도록 지원품목을 확대(75종 → 90종)<br>- 지원금액 한도액을 상향조정(2,000→3,000만원)하여 지원수준 현실화                        | 산업안전보건법<br>제62조<br>(2005.1.1)         | 산업안전과<br>☎02)<br>504-2052   |
| 11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처분<br>강화         | ○대여하고자 하는 자만 처분 → 대여받는 자까지 처분                                                                                                                                             | 국가기술자격법<br>시행규칙 제34조<br>(2005.1.1)    | 자격지원과<br>☎02)<br>503-9757   |

| 번호 | 제 목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2 | 국가기술자종목 정비                  | ○시계수리기능사 등 43종목 폐지<br>○원자력발전, 핵연료기술사 → 원자력발전기술사 등 52종목 통합(91종목 → 39종목)<br>○스포츠경영관리사 등 9종목 신설                              | 국가기술자격법<br>시행규칙 제4조<br>(2005.1.1)                   | 자격지원과<br>☎02)<br>503-9757   |
| 13 | 훈련 연장급여 지원대상<br>훈련과정 및 직종확대 | ○기준훈련직종(204개 직종)으로 제한된 훈련범위를 정부위탁과정, 기능사양성과정, 장애인<br>훈련과정과 실직자 재취직훈련과정(일부)으로 확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br>제54조<br>(2005.1.1)                    | 고용보험과<br>☎02)<br>502-6631~2 |
| 14 | 1,000인 이상 기업<br>고용평등프로그램 추진 | ○1,000인 이상 기업 남녀고용평등계획서를 제출(신규)                                                                                           | (2005.3.1)                                          | 여성고용과<br>☎02)<br>502-5441   |
| 15 | 주40시간제 시행 확대                | ○근로자를 300~999인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법정<br>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으로 단축되고, 월차휴가가 폐지되며, 연차휴가가 조정(15 → 25<br>일)되고 생리휴가가 무급화 | 근로기준법 제49조,<br>제57조, 제59조<br>(2005.7.1)             | 근로기준과<br>☎02)<br>503-9742   |
| 16 | 생리휴가 무급화                    | ○여성근로자에게 월1회 부여하는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전환(300인 이상 ~ 1,000인 미만)                                                                      | 개정 근로기준법에<br>의함(근로기준법<br>제71조 부칙 제1조)<br>(2005.7.1) | 여성고용과<br>☎02)<br>502-5441   |

## 건 설 교 통 부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  | 건축물의 사전분양 요건강화                 |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공동주택, 콘도미니엄, 노인복지 시설, 아파트형 공장 등을 제외한 상가 등은 피분양자 보호제도 없음</p> | <p>○적용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양면적 3,000㎡ 이상의 상가 및 업무시설 등</li> </ul> <p>○사전분양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2이상 건설회사의 연대보증을 받은 경우 골조공사 2/3 이상 완료 후</li> </ul> | 건축물의분양에관한<br>법률 제정<br>(2005.4.23) | 건축과<br>☎02)<br>504-9139   |
| 2  | 허위분양광고 금지                      |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 ○허위 분양광고를 금하고 허위가 있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이를 불이행시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건축물의분양에관한<br>법률 제정<br>(2005.4.23) | 건축과<br>☎02)<br>504-9139   |
| 3  | 85㎡ 이하의 공동주택에<br>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 |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 <p>○적용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택지 안에서 건설하는 85㎡ 이하의 공동주택</li> </ul> <p>○분양가 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교부령이 정하는 가격 이하로 분양하여야 함</li> </ul>                                    | 주택법 개정<br>(2005.2월말)              | 주택정책과<br>☎02)<br>504-9139 |
| 4  | 택지채권입찰제 도입                     | ○ 감정가액으로 추첨방식으로 분양                                                                                             | <p>○공공택지 내에서 분양하는 85㎡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택지에 대한 채권입찰제를 도입하여 개발이익환수</li> </ul>                                                                                              | 주택법 개정<br>(2005.2월말)              | 주택정책과<br>☎02)<br>504-9139 |
| 5  | 분양가 주요항목 공개                    |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 <p>○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85㎡ 이하)과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택지비, 건축비, 설비감리비, 감리비 및 기타 건교부령이 정하는 비용을 공개토록 함</li> </ul>                                                                        | 주택법 개정<br>(2005.2월말)              | 주택정책과<br>☎02)<br>504-9139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6  | 명목회사형 REIT's제도 도입        | ○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CR-REIT's에만 명목회사형 인정 | ○ 일반적인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REIT's에 명목회사 형태의 회사설립을 허용하여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의 활성화 기대                                                                                           |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br>(2005.4.23)       | 토지정책과<br>☎02)<br>504-9139 |
| 7  | REIT's 설립 시 예비인가제도 법제화   | ○ 인가지침에 근거하여 운영 중                              | ○ 설립인가 전 발기인의 신용도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할 수 있는 예비인가제도를 법률에 규정                                                                                                    |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br>(2005.4.23)       | 토지정책과<br>☎02)<br>504-9139 |
| 8  | 유료도로 개설요건 완화             | ○ 채산성이 있는 경우에만 유료도로 개설 허용                      | ○ 채산성은 없으나, 그로인해 공공교통상의 효용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우 유료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                                                                                               | 유료도로법 개정<br>(2005.4.23)          | 도로정책과<br>☎02)<br>504-9071 |
| 9  | 고속국도 관리자에게 고속국도 진입통제권 부여 | <신 설>                                          | ○ 폭우 등 자연재해 발생 시 고속국도 관리자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고속국도의 진입통제권 부여                                                                                                            | 고속국도법 개정<br>(2005.3월말)           | 도로정책과<br>☎02)<br>504-9071 |
| 10 | 철도공사 출범                  | ○ 철도청에서 철도의 건설 및 운영 업무 수행                      | ○ 철도시스템의 효율화와 철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3년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한국철도공사법 등 법률을 제정하여,<br><br>○ 철도건설은 2004년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담당하게 하였고, 열차운행 등 철도운영은 내년 1월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에서 담당 | 철도산업발전기본법<br>철도공사법<br>(2005.1.1) | 철도정책과<br>☎02)<br>504-9029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1 | 기업도시 개발제도 도입 | <신 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기업에 기업도시 개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준비(시·군과 협약체결 등) → 구역지정제안 + 개발계획승인 신청 → 승인 → 각종 영향평가 및 실시계획 승인신청 → 승인 → 착공</li> </ul> </li> <li>○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지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수용권 부여(지자체 대행 원칙, 1/2이상 협의매수 후 수용)</li> <li>- 자금조달 특례(일부 출자총액산정 예외 인정 등)</li> <li>- 41개 법률, 88개 인·허가 의제처리</li> <li>- 학교·병원·체육시설 설치상의 특례 인정</li> <li>- 각종 조세·부담금 감면, 인·허가 의제처리</li> <li>- 간선시설 국고지원, 국·공유지 사용상 혜택</li> </ul> </li> </ul> | <p>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정<br/>(2005.4월 말)</p> <p>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정<br/>(2005.4월 말)</p> | <p>기업도시과<br/>☎02)<br/>2110-8452</p> <p>기업도시과<br/>☎02)<br/>2110-8452</p> |
| 12 | 도시철도 안전기준 강화 | <신 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철도 차량실내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함</li> <li>○ 산소호흡기, 방독면 등의 응급장비를 구비토록 함</li> <li>○ 열차운행정보의 자동전송설비를 설치토록 함</li> </ul>                                                                                                                                                                                                                                                                                                                                                                                              | 도시철도차량안전 기준에관한규칙(개정)<br>(2005.3월 중)                                       | 도시철도과<br>☎02)<br>2110-8186                                              |

## 국 방 부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  | 박사과정 이수자 소위임용<br>최고연령 상향조정                        | ○27세                                             | ○29세                                                                                                                                           | 군인사법<br>(2005.4월 예정)                    | 인력관리과<br>☎(02)<br>748-5130             |
| 2  | 외국 장교양성학교 교육기간<br>5년 이상(국내 교육기간 포함)자<br>초임계급 상향조정 | ○소위                                              | ○중위                                                                                                                                            | 군인사법<br>(2005.4월 예정)                    | 인사관리과<br>☎(02)<br>748-5120             |
| 3  | 현역병 병장 진급 최저 복무<br>기간 단축                          | ○상등병으로서 8개월                                      | ○상등병으로서 7개월                                                                                                                                    | 군인사법시행규칙<br>(2005.4.1)                  | 인력관리과<br>☎(02)<br>748-5130             |
| 4  | 군 기술교육이수자 기능사<br>필기시험 일부 면제                       | <신 설>                                            | ○군 기술교육기관 훈련과정 수료하고 1년 이상 동일<br>직무분야 복무자의 국가기능사 필기시험 면제<br>- 환경, 자동차정비, 전기공사, 잠수, 한식조리, 보일러<br>6종목<br>- 훈련시간 이수(350시간) · 복무확인서 발급 : 각군<br>참모총장 | 국가기술자격법<br>시행규칙<br>(2005.1.1)           | 교육과<br>☎(02)<br>748-5180               |
| 5  | 민간대학 군사학과 개설 확대                                   | ○1개 대학 (대전대 60명)                                 | ○3개 대학 추가<br>(경남대50명, 원광대 40명,조선대 40명)                                                                                                         | 군사학발전협력<br>합의서<br>(2005년<br>학사일정부터)     | 육본 교육인적<br>자원 개발과<br>☎(02)<br>505-1220 |
| 6  | 각군 사관학교 군사학 학위<br>수여                              | ○사관학교 전과정 이수 생도에<br>전공학위 수여<br>(공학사, 이학사 또는 문학사) | ○전공학위 외에 군사학사 학위 동시수여                                                                                                                          | 사관학교 설치법 /<br>동법시행령<br>(2005년 임관자부터 적용) | 교육과<br>☎(02)<br>748-5180               |
| 7  | 장병 RH(-)혈액형 보유자<br>특별관리제도 시행                      | <신 설>                                            | ○RH(-)혈액형 보유 장병 DB 관리하여 군인/국민 긴급<br>혈액필요시 지원<br>- 국방부 ↔ 각군본부 ↔ 지역의무대간 DB구축                                                                     | (2005.1.1)                              | 보건과<br>☎(02)<br>748-6640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8  | (★)병 봉급 인상                | ○월 35,800원(상병기준)                                                                                                         | ○월 46,600(정부안)<br>○월 60,100원(국회 국방위 조정안)<br>* 국회 예산안 의결시 최종 확정<br>* 2008년까지 80,000원 수준 인상 | 공무원보수규정<br>(2005.1.1)                                    | 복지정책과<br>☎02)748-6610                     |
| 9  | 군 위성TV방송 실시               | <신 설>                                                                                                                    | ○스카이 라이프와 케이블 TV 채널을 이용한 국방 TV 방송 실시                                                      | (2005.8월 시험방송/<br>10월부터 정규방송)                            | 국방홍보원<br>영상기획<br>편성실<br>☎02)<br>2079-3581 |
| 10 | 장병 급식개선                   | <신 설><br><br>○꼬리곰탕/돼지갈비/비엔나소<br>시지/계맛살(연12회)<br>○주스류 원액함량 50%                                                            | ○스파게티/냉면/파인애플주스/조기(연1회/2회/14캔/<br>월6회)<br>○연16회/15회/24회/24회<br><br>○원액함량 100%             | (조기/돼지갈비 :<br>2005.2월, 기타 :<br>2005.7월)                  | 물 자 과<br>☎02)<br>748-5720                 |
| 11 | 공군병 복무기간 1개월<br>추가단축      | ○28개월                                                                                                                    | ○27개월                                                                                     | (2004.11월<br>입영자부터 시행)<br>* 2003.11월 최초단축<br>(30개월→28개월) | 인력관리과<br>☎02)<br>748-5130                 |
| 12 | 예비군 훈련보상비 인상 및<br>지급방법 개선 | ○훈련보상비 : 1인당 3,000원<br>○동원훈련 입소여비 지급방법 :<br>병무청에서 우편대체계좌 지급                                                              | ○훈련보상비 : 1인당 3,500원<br>○동원훈련 입소여비 지급방법 : 퇴소시 훈련소집 부대<br>에서 현금 지급                          | (2005.1.1)                                               | 예비전력과<br>☎02)<br>748-5240                 |
| 13 | 국립묘지 안장대상 확대 등<br>제도개선    | ○안장대상 : 군인,순국선열/ 애국<br>지사, 국장/국민장으로 장의된 자,<br>국가·사회 공로가 현저한자/<br>대한민국 공로 현저한 외국인 중<br>대통령 지정자<br>○안장신청/승인절차 : 수기문서<br>처리 | ○안장대상 : 종전+의사상자, 순직 소방관,자발적 참전한<br>해외동포<br><br>○안장신청/승인절차 : 인터넷 전산처리                      | 국립묘지령<br>(2005.7.1)<br><br>(2005.7.1)                    | 인사근무과<br>☎02)<br>748-5160                 |

## 병 무 청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  | 징병검사 일자/장소<br>본인선택제 시행         |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br>및 장소에서 검사                                                                                                           |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br>- 방법 : 인터넷 접수<br>- 대상 : 방학기간(2·7·8월) 중 대학생만 실시<br>※ 2006년부터 전원확대 예정  | 병역법 시행령<br>(2005년도 징병 검사시)      | 선병과<br>☎042)<br>481-2945 |
| 2  | 징병검사 과정에서 임상병리<br>검사 종목 확대실시   | ○간기능검사(GOT,GPT) : B형<br>간염 양성자 및 징병 전담의사가<br>의뢰한 경우<br>○약물중독검사 : 공항과 항만이<br>인접한 5개 징병검사장에서 선별<br>실시<br>- 검사종목(4종) : 필로폰, 코카인,<br>몰핀, 대마 | ○간기능검사(GOT,GPT): 수검대상자 전원 실시<br><br>○약물중독검사 : 전 징병검사장에서 선별 실시<br>- 검사종목(5종) : 기존에 엑스터시 추가  | 병역법<br>(2005년도 징병 검사시)          | 선병과<br>☎042)<br>481-2942 |
| 3  | 신체등급 1-3급의 고퇴/중졸<br>학력자 현역병 입영 | ○고퇴/중졸 학력자는 공익근무<br>요원소집                                                                                                                | ○신체등급 1-3급의 고퇴/중졸 학력자는 현역병 입영                                                              | 병역법/시행령<br>(2005.1.1)           | 징집과<br>☎042)<br>481-2733 |
| 4  | 군사특기별 모집으로<br>자율적 선택기회 확대      | ○직군별 모집으로 유사 특기분야<br>복무사례 발생                                                                                                            | ○직군을 세분화한 군사특기별로 지원서 접수 및 선발로<br>군 복무분야에 대한 선택권 강화                                         | 병역법/육군병<br>모집업무예규<br>(2005.1.1) | 모병과<br>☎042)<br>481-2744 |
| 5  | 육군 모집병 지원자격<br>(학력)완화          | ○신체등급 1-3급의 고졸이상<br>학력자만 지원가능                                                                                                           | ○신체등급 1-3급의 중졸이상 학력까지 지원자격 완화<br>(일부특기)<br>※ 해당특기 : 도자,구레이다,페이로다,굴삭기운전                     | 병역법/육군병<br>모집업무예규<br>(2005.1.1) | 모병과<br>☎042)<br>481-2744 |
| 6  | 카투사 지원서 접수시기 변경<br>및 선발기간 단축   | ○접수시기 : 매년 8월<br>○접수기간 : 20일<br>○선발기간 : 95일<br>- 접수개시일 : 매년 8월 1일<br>- 선발일 : 매년 11월 4일                                                  | ○접수시기 변경 : 매년 10월<br>○접수기간 : 7일<br>○선발기간 : 67일<br>- 접수개시일 : 매년 10월 1일<br>- 선발일 : 매년 12월 7일 | 병역법/카투사<br>선발계획<br>(2005.10.1)  | 모병과<br>☎042)<br>481-2748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7  | 전가족 국외영주권 취득자<br>병역면제 제도 폐지<br>(병역면제⇒병역연기) |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br>얻은 사람에 대하여 병역면제<br>처분           | ○전가족 영주권 취득여부 관계없이 국외에 거주하는<br>사람은 병역연기 처분                                                                                             | 병역법<br>(2005.7.1 이후 시행예정)                | 국외자원<br>관리과<br>☎042)<br>481-2757 |
| 8  | 공익근무요원 등<br>군 대체복무자에 대한 예비<br>군복 지급절차 개선   | ○대체복무 만료시                                            | ○교육소집 입소 시(소집부대 일괄 지급)                                                                                                                 | 군복 및 군일용품<br>지급규정<br>(2005.1.1)          | 동원과<br>☎042)<br>481-2793         |
| 9  |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 및<br>복무기관 본인선택제 확대<br>시행       | ○서울지역 거주자<br>(2004.9.1일부터 시범실시)                      | ○전국 확대 실시<br>- 지원방법 : 본인이 인터넷을 통해 소집일자/복무기관을<br>선택, 복무함                                                                                | 공익근무요원<br>소집대상 등<br>의무부과규정<br>(2005.1.3) | 소집과<br>☎042)<br>481-2785         |
| 10 |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인원<br>조정                       | ○복무기관에서 인원요청 시<br>시·군·구별 보유자원 감안 인원<br>배정            | ○공익성 및 국민 편의성 등에 의한 배정 조정<br>- 현수준 유지 : 수자원 감시 등 12개 분야<br>- 단계적 감축 : 일반행정정보조 등 2개 분야<br>- 배정 중단 : 차량단속 등 2개 분야<br>- 봉사 등 사회복지시설 배정 확대 | 공익근무요원<br>복무관리규정<br>(2005년 상반기)          | 소집과<br>☎02)<br>481-2785          |
| 11 | 전문연구요원 의무종사 기간<br>단축 (4년 → 3년)             |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 : 4년                                   |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 : 3년                                                                                                                     | 병역법<br>(2005년 하반기)                       | 산업지원과<br>☎02)<br>481-2813        |
| 12 | 군 소요 부족 적성자<br>산업기능요원 편입 허용                | ○군소요 부족 적성자 산업기능<br>요원 편입제한<br>(부족적성 : 중장비운전 의무, 요리) | ○군소요 부족 적성자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허용                                                                                                              | 병역법시행령<br>(2005.1.1)                     | 산업지원과<br>☎02)<br>481-2811        |

## 통 일 부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br>제도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지급수준 중 기본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160배 가산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40배 상당액의 범위</li> <li>○ 영구임대주택</li> <li>&lt;제45조 단서 신설&gt;</li> <li>○ 고용지원금 신청(매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착금 지급제도를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지급수준은 유지하면서 기본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160배에서 100배로 축소하고 가산금은 40배에서 50배로 상향, 장려금 신설</li> </ul> </li> <li>○ 주거지원의 범위를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의 영구임대주택에 국민임대주택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주거지원 확대</li> </ul> </li> <li>○ 교육지원을 합리적으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지원기간을 설정하여 거주보호기간 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후 5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여야 교육지원</li> </ul> </li> <li>○ 고용지원금 신청 및 지급 주기를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지원금의 신청과 정부의 지급을 기존 매월에서 매분기로 조정</li> </ul> </li> </ul> | 북한이탈주민의보호<br>및 정착지원에 관한<br>법률시행령<br>(2005.1.1) | 정착지원과<br>☎02)<br>3703-2376 |

## 해 양 수 산 부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  | 내항화물선 등록기준 강화                 | ○등록기준 : 선박 1척 이상                                  | ○등록기준 : 선박1척 이상, 다만,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으로 사업에 종사할 경우 총톤수 합계가 500톤 이상일 것         | 해운법시행규칙<br>(2005.1월)              | 연안해운과<br>☎02)<br>3148-6621 |
| 2  | 신규투입 연안 화물선의 선령 제한            | ○제한없음                                             | ○선령 15년 미만으로 제한. 단, 폐기물운반선은 17년 미만                                           | 신규투입(등록)연안화물선의선령제한고시<br>(2005.1월) | 연안해운과<br>☎02)<br>3148-6621 |
| 3  | 선박승무기준의 강화                    | ○5톤 미만 선박은 여객정원이 13인 이상만 선박직원법을 적용하여 해기사면허를 받도록 함 | ○5톤 미만 선박 중 낚시어선 및 유·도선도 선박직원법을 적용토록 하여 해기사면허를 받도록 함                         | 선박직원법<br>(2005.8월)                | 선원노정과<br>☎02)<br>3148-6633 |
| 4  | 해외취업선원의 고용보험 적용               | <신 설>                                             | ○해외취업선원도 고용보험을 적용토록 규정                                                       | 선원법시행령<br>(2005.4월)               | 선원노정과<br>☎02)<br>3148-6633 |
| 5  | 선원의 노동기본권 향상을 위한 쟁위행위 제한 구체화  | <신 설>                                             | ○선박이 항행 중에 쟁위행위를 제한하는 경우를 구체화<br>- 선박이 항행 중에 인명파 선박의 안전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 | 선원법<br>(2005.12월)                 | 선원노정과<br>☎02)<br>3148-6633 |
| 6  | 어선원의 권익향상을 위한 어선의 선원법 적용범위 확대 | ○25톤 미만 어선은 선원법 적용 제외                             | ○25톤 이상 어선을 선원법 적용대상으로 하던 것을 20톤 이상까지 적용범위 확대                                | 선원법<br>(2005.7월)                  | 선원노정과<br>☎02)<br>3148-6633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7  | 외국항만 출입선원의 편의를<br>위한 선원신분증명서제도 도입 | <신 설>                                                                                                                                                                               | ○ 외국의 항만을 출입하고자 하는 선원은 선원신분증명서<br>소지                                                                                                                | 선원법<br>(2005.6월)                       | 선원노정과<br>☎02)<br>3148-6633        |
| 8  | 선원에 대한 주 40시간 근로제<br>도입           | ○ 주 44시간 근로 및 주12시간의<br>시간 외 근로를 명할 수 있음                                                                                                                                            | ○ 주 40시간 근로 및 주 16시간 시간외근로를 명할 수<br>있음. 유급휴가 월 2일 확대                                                                                                | 선원법<br>(2005.7월)<br>*50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선원노정과<br>☎02)<br>3148-6633        |
| 9  | 어선원에 대한 유급휴가제<br>도입               | <신 설>                                                                                                                                                                               | ○ 어선원의 유급휴가에 대한 특례인정<br>- 부령에서 정하는 어업의 업종에서 1년 이상 계속<br>승무한 선원                                                                                      | 선원법<br>(2005.7월)                       | 선원노정과<br>☎02)<br>3148-6633        |
| 10 |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대상<br>확대             |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목적의<br>비영리사업 등 4가지의 경우에<br>한하여 공유수면 점·사용료<br>감면                                                                                                                       | ○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방제시설의 설치와 경제자유<br>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제주국제자유도시특<br>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을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에도<br>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 공유수면관리법<br>(2005.7월)                   | 연안계획과<br>☎02)<br>3148-6574        |
| 11 | 단일선체유조선의 퇴출시한<br>단축               | ○ 단일선체유조선 퇴출시한<br>- 범주1 : 2007년<br>- 범주2,3 : 2015년<br><br>※ 범주 1 : 중량화물(원유, 연료유, 중<br>유, 윤활유)을 운송하는 재화중<br>량톤수 2만톤 이상, 경량화물을<br>운송하는 재화중량톤수 3만톤 이<br>상으로 분리밸러스트탱크를 설<br>치하지 아니한 유조선 | ○ 단일선체유조선 퇴출시한<br>- 범주1 : 2005년, 범주2,3 : 2010년<br><br>○ 중급유운송단일선체유조선 퇴출시한<br>- 재화중량톤수 5,000톤 이상(2005.4.5)<br>- 재화중량톤수 600~5,000톤 미만(선박별 2008년도 인도일) | 해양오염방지법<br>시행규칙<br>(2005.4.5)          | 해사기술<br>담당관실<br>☎02)<br>3148-6322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1 |                                         | ※ 범주 2 : 범주 1과 동일한<br>톤수로서 분리밸러스트탱크 설치 유<br>조선<br><br>※ 범주 3 : 5천톤 이상 유조선 중 범주<br>1·2 제외 선박<br>(중량화물은 5,000~2만톤, 경량화물은<br>5,000~3만톤) | ○ 유조선의 이중저구조 설치<br>- 재화중량톤수 5백톤 미만 : 2010년 이후 건조된 선박<br>부터<br>- 2010년 이전에 건조된 선박 : 2020년 이후 선령 30년<br>기준<br>○ 국내운항 중급유운송유조선 퇴출시한<br>- 5,000톤 이상 : 2010년<br>- 600~5,000톤 미만 : 2015년 | 해양오염방지법<br>시행규칙<br>(2005.4.5)                          | 해사기술<br>담당관실<br>☎02)<br>3148-6322 |
| 12 | 선박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br>배출규제                   | <신 설>                                                                                                                                | ○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새로운 설비설치 금지<br>○ 선박기관(130kw이상)으로부터 질소산화물 배출금지<br>○ 저유황함유 연료유 사용강제화<br>○ 국제해사기구형(IMO) 소각기 사용강제화                                                                      | 해양오염방지법<br>(2005.5.19)                                 | 해사기술<br>담당관실<br>☎02)<br>3148-6322 |
| 13 | 담보권 등이 설정된 방치폐선의<br>직권처리를 위한 절차규정<br>마련 | ○ 방치선박 중 담보권 등 권리가<br>설정된 폐선은 이해관계인이<br>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거 처리<br>불가                                                                       | ○ 방치폐선 이해관계인에게 이의 제출권한을 부여하고<br>이의서 미제출시 관리청이 직권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수면관리법<br>시행령·시행규칙 및<br>공유수면관리<br>업무처리규정<br>(2005년 중) | 해양방재<br>담당관실<br>☎02)<br>3148-6333 |
| 14 | 일선수협 제도개선                               | ○ 상임이사 : 자율적 도입<br>○ 조합장연임 : 제한없음<br>○ 조합장선거 : 자체선거관리<br>○ 외부회계감사 : 없음                                                               | ○ 상임이사 : 도입의무<br>○ 조합장 연임 : 1회 연임<br>○ 조합장 선거 : 선관위 위탁<br>○ 외부회계감사 : 일정규모이상 도입의무화                                                                                                  | 수협법<br>(2005.7월)                                       | 수산정책과<br>☎02)<br>3148-6812        |
| 15 | 농안기금 중 수산부문 이관                          | ○ 농림부장관이 관리하는 농안<br>기금에서 수산물 유통 및 가격<br>안정사업 수행                                                                                      | ○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br>관리하는 수산발전기금으로 통합                                                                                                                                    | 농수산물유통및가격<br>안정에관한법률<br>(2005.1월)                      | 수산정책과<br>☎02)<br>3148-6813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6 | 정치망어업 관리선을 어선원 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     | ○수협중앙회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임의가입)                                 | ○수협중앙회의 승인 없이도 보험에 가입(당연가입)                                                                                                          |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br>보험법시행령<br>(2005.1월)            | 수산경영과<br>☎02)<br>3148-6862 |
| 17 | 어선원 보험료 미납기간 중 발생한 재해범위 조정         | ○보험료 납입독촉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발생한 재해로 보험금 지급시 그 지급액의 10%를 어선주로부터 징수 | ○보험료 납입기한 만료일 다음날부터 발생한 재해로 보험금 지급시 그 지급액의 10%를 어선주로부터 징수                                                                            |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br>보험법시행령<br>(2005.1월)            | 수산경영과<br>☎02)<br>3148-6862 |
| 18 | 어선보험 가입비율 개선                       | ○잔존가액의 100~80%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                                  | ○잔존가액의 80~50%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                                                                                                            |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br>보험법시행령<br>(2005.1월)            | 수산경영과<br>☎02)<br>3148-6862 |
| 19 | 어선원·어선보험의 보험요율 할인·할증 경과조치          | <신 설>                                                       | ○어선소유기간이 3년 미경과 어선은 2006.12.31일까지 할인·할증을 유예                                                                                          |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br>보험법시행령<br>(2005.1월)            | 수산경영과<br>☎02)<br>3148-6862 |
| 20 | 지정해역 주변 오염행위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 <신 설>                                                       | ○지정해역 주변해역의 오염행위에 대하여 처벌<br>- 고의 :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br>- 과실 :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br>- 동물용의약품사용 :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 수산물품질관리법<br>(공포 후 1년 유예)<br>* 2004.12.9 국회의결 | 품질위생팀<br>☎02)<br>3148-6922 |
| 21 | 유어장별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방법<br>- 어류가두리양식어장 | ○당해 어장에 면허되었거나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 ○어류가두리양식어장에서도 낚시를 이용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도 가능                                                                                                | 유어장의지정 및<br>관리에관한규칙<br>(2005.7월)             | 양식개발과<br>☎02)<br>3148-6963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22 | 육상양식(종묘생산)어업허가<br>방법          | ○육상양식 및 육상종묘생산어업,<br>신고제로 운영                           | ○ 기존 허가어업인 해상종묘생산어업에 포함하여 육상<br>양식 및 육상종묘생산어업도 허가제로 전환                                            | 수산업법<br>(2005.6월) | 양식개발과<br>☎02)<br>3148-6963 |
| 23 | 연안 및 구획어업에 사용하는<br>어선의 선복량 제한 | ○ 연안및구획어업에 사용하는 어선<br>- 8~10톤까지(구획어업 5톤)<br>자유롭게 증톤 가능 | ○ 일정규모까지는 종전과 같이 증톤이 가능하나, 해양<br>수산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톤하고자 하는<br>경우 동일 업종의 어선을 매입·폐선한 규모만큼 증톤<br>가능 | 수산업법<br>(2005.6월) | 어업정책과<br>☎02)<br>3148-6914 |

## 문 화 관 광 부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  | 애니메이션 방송총량제 실시               | <신 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상파 방송3사는 2005년 7월부터 전체방영시간의 1%를, 기타 방송사는 1.5% 이내에서 국산 신규 애니메이션을 편성</li> <li>○ 작품제작과 방영시간이 약 2배 가량 확대되어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li> </ul>                                                      | 방송법 및<br>방송법시행령<br>(2005.7.1) | 콘텐츠진흥과<br>☎02)<br>3704-9383  |
| 2  | 도서정가제 허용범위 축소                | ○ 모든 분야 간행물에 대해 정가판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용도서분야 정가판매 제외(공정위고시 '재판매가 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에 따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위 도서정가제 허용범위 부분축소</li> <li>- 2008년 이후 정가제 허용범위에 대해 공정위와 재협의 예정</li> </ul> </li> </ul> | 출판및인쇄진흥법<br>(2005.1.1)        | 출판산업과<br>☎02)<br>3704-9639   |
| 3  | 공공 공연장에 무대예술전문인 의무배치         | <신 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객석 500석 이상 공공공연장에 무대예술전문인을 의무적으로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객석수에 따라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등 3개 분야 1·2·3등급 각 1명 이상 총 3명 이상 배치</li> </ul> </li> </ul>    | 공연법<br>(2005.1.1)             | 기초예술진흥과<br>☎02)<br>3704-9533 |
| 4  | 관광특구지정권한의 시·도 지사에 이양         | ○ 관광특구 지정은 시·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특구지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적합지역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li> <li>○ 지자체별 특성이 반영된 관광특구의 내실있는 육성 추진</li> </ul>                                                                         | 관광진흥법<br>(2005.4.17)          | 관광자원과<br>☎02)<br>3704-9742   |
| 5  | 관광특구 내 관광사업자에 대한 관광기금지원제도 도입 | <신 설>                                 | ○ 관광특구안의 관광객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보조 또는 융자지원제도 신설                                                                                                                                                             | 관광진흥법<br>(2005.4.17)          | 관광자원과<br>☎02)<br>3704-9742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6  | 관광지 지정실효제도 도입   | ○ 관광지 지정 후 조성계획승인의 유효기간 미설정      | ○ 관광지 지정 후 2년 이내에 조성계획 승인신청이 없거나 조성계획승인 후 2년 이내 사업착수 없을시 관광지 지정 또는 조성계획승인의 효력 상실 (예외적으로 3년)<br><br>○ 무분별한 관광지 지정·개발 방지 및 원활한 사업추진 조장 | 관광진흥법<br>(2005.4.17)  | 관광국<br>관광자원과<br>☎02)<br>3704-9742   |
| 7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     | <신 설>                            | ○ 주5일수업제 등을 맞아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전면 시행<br>-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실시<br>-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단지에 청소년수련시설설치 의무화                                 | (2005.2.10)           | 청소년국<br>청소년문화과<br>☎02)<br>3704-9955 |
| 8  | 청소년증 발급<br>(개선) | ○ 13세 이상 18세 미만 신청하는 모든 청소년에게 발급 | ○ 발급대상을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신청하는 모든 청소년으로 확대<br><br>○ 학생증이 없는 초등학교 고학년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함으로써 청소년을 위한 각종 할인제도의 혜택을 불편 없이 누리도록 함               | 청소년기본법<br>(2005.2.10) | 청소년국<br>청소년정책과<br>☎02)<br>3704-9912 |
| 9  | 한국청소년진흥센터 개원    | <신 설>                            | ○ 청소년육성사업의 중추역할을 하게 될 한국청소년 진흥센터 개원<br>- 청소년관련 각종 정보 제공 기능<br>-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 시행                                                       | 청소년기본법<br>(2005.2.10) | 청소년국<br>청소년정책과<br>☎02)<br>3704-9916 |
| 10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     | <신 설>                            | ○ 어려운 청소년을 지원하고 청소년인권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면 시행<br>- 특별지원청소년의 지원<br>- 청소년우대 및 청소년증 발급<br>- 청소년 건강증진 등                                | (2005.2.10)           | 청소년국<br>청소년참여과<br>☎02)<br>3704-9940 |

## 여 성 부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 확대            | ○상시여성근로자 300인이상인 사업장                                                                                                                            | ○상시 여성근로자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 영유아 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2005.1.30) | 보육기획과 ☎02) 3703-2713 |
| 2  | 보육시설종사자 경력증명 발급기관 변경         | ○보육시설의 장                                                                                                                                        | ○시·군·구 관리(2005년 7월 31일 이후)                                                                                                                                                                                                 | 영유아 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2005.1.30) | 보육기획과 ☎02) 3703-2713 |
| 3  | 보육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기준 강화 | ○보육교사의 자격등급을 2등급으로 구분<br>○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취득 용이<br>○보육교사교육원 수료시 보육교사 2급 취득<br>○대학(전문대 포함)에서 165개 교과목 중 10과목(보육실습 포함) 30학점을 취득할 경우 보육교사 1급 취득 | ○보육교사의 자격등급을 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변경(승급시 경력요건 강화)<br>○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은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로 보육교사 자격은 ‘보육업무의 경력이 있는 자’로 한정<br>○보육교사교육원 수료시 보육교사 3급 취득<br>○대학(전문대 포함)에서 보육과 직접 관련이 있는 31개 교과목 중 12과목(보육실습 포함)35학점을 취득할 경우 보육교사 2급 취득 | 영유아 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2005.1.30) | 보육기획과 ☎02) 3703-2713 |
| 4  | 보육교사 국가공인 자격증 제도 도입          | ○보육교사 자격 인정제 (별도의 자격증 발급 없음)                                                                                                                    | ○보육교사 자격은 국가에서 검정 후 자격증 발급 (2005년 4월 이후)                                                                                                                                                                                   | 영유아 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2005.1.30) | 보육기획과 ☎02) 3703-2713 |
| 5  | 보육시설 설치기준 강화                 | <신 설><br><br><신 설>                                                                                                                              | ○위험시설로부터 50m이내 떨어진 곳에 설치(기존시설 제외)<br>○정원은 300인을 초과할 수 없음(기존 시설 제외)                                                                                                                                                         | 영유아 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2005.1.30) | 보육기획과 ☎02) 3703-2713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5  | 보육시설 설치기준 강화      | ○보육시설 면적 1인당 3.63㎡<br>보육실 면적 3세미만 1인당 2.64㎡, 3세 이상 1인당 1.98㎡                                                                                                                                                                                               | ○보육시설 면적을 영유아 1인당 3.63㎡ → 4.29㎡로 늘리고 보육실 면적은 영유아 1인당 모두 2.64㎡로 변경(기존시설 제외)                                                                                                                                                                                                       | 영유아 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2005.1.30) | 보육지원과<br>☎02)<br>3703-2722 |
| 6  | 보육시설 평가 인증제 시범 운영 | <신 설>                                                                                                                                                                                                                                                      | ○목적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문제점 등 보완 위해 시범 실시<br>○평가대상 : 1,200개소(신청시설)<br>○기 간 : 2005.1~12월<br>○운영 : 민간위탁(한국여성개발원)                                                                                                                                                             | 영유아 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2005.1.30) | 보육지원과<br>☎02)<br>3703-2722 |
| 7  | 보육료 지원확대          | ○차등보육료 지원<br>- 지원대상 :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소득인정액 159만원 이하<br>- 지원단가 : 0~1세 25만 7,000원 /월 2세 21만 2,000원/월 3~4세 13만 1,000원/월<br>- 지원비율 : 3계층(지원단가의 100, 60, 40%)<br><br>○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br>- 지원대상 : 4인가구 기준 월 평균소득인정액 223만원 이하 가구<br>- 지원단가 13만 1,000원~9만 4,000원/월 동일 | ○차등보육료 지원<br>- 지원대상 : 4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인정액 204만원 이하 가구<br>- 지원단가 : 0~1세 29만 9,000원/월, 2세 24만 7,000원/월, 3~4 세 15만 3,000원/월<br>- 지원비율 :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br>· 3계층 → 4계층(지원단가의 100, 80, 60, 30%)<br><br>○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br>- 지원대상 : 4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인정액 272만원 이하 가구<br>- 지원단가 : 15만 3,000원/월 | 영유아 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2005.1.30) | 보육지원과<br>☎02)<br>3703-2722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7  |                   | <p>○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p> <p>- 지원대상: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의 모든 장애아동</p> <p>- 지원단가: 중증장애아동 25만 7,000원/월, 경증장애아동 21만 2,000원/월</p> <p>&lt;신 설&gt;</p> | <p>○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p> <p>- 지원대상: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의 모 든 장애아</p> <p>- 지원단가: 29만 9,000원/월</p> <p>○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신규)</p> <p>- 지원대상: 4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인정액 340만원 이하 가구의 두 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p> <p>- 지원단가: 0~1세 6만원/월, 2세 5만원/월, 3세 이상 3만원/월</p> | 영유아 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2005.1.30) | 보육지원과<br>☎02) 3703-2722 |
| 8  | 민간시설 영아반 교사인건비 확대 | ○민간시설 영아반 운영시 반당 15만원을 교사인건비로 지원                                                                                                           | ○민간시설 영아반 운영 활성화와 교사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민간 영아반 운영시 반당 40~45만원을 교사 인건비로 지원                                                                                                                                                                                      | 영유아 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2005.1.30) | 보육지원과<br>☎02) 3703-2722 |



## 국 가 보 훈 처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  | 보훈심사 기능 확충            |                         | ○보훈심사위원회 실질심사<br>- 비상임위원제 개선, 심사인력 확충<br>○보훈심사시 간접입증자료 적극 인정<br>- 상이기관증, 의사진단서, 소송판례 등 반영         | 국가유공자예우등에<br>관한법률시행령      | 심사정책과<br>☎02)<br>2020-5161  |
| 2  | 국가보훈기본법 제정            |                         | ○국가보훈의 기본이념과 국가·지자체·국민의 책무<br>규정<br>○국가보훈업무 추진체계의 확립<br>○예우·지원 원칙(생활정도 따른 지원, 권리발생·소멸<br>시기 등) 규정 | 국가보훈기본법<br>(2005년 상반기 중)  | 심사정책과<br>☎02)<br>2020-5161  |
| 3  | 해외거주자 보상금지급업무<br>집중처리 |                         | ○해외거주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업무 전담기관(1개<br>기관) 및 전담직원 배치하여 업무의 전문성·효율성 향상                                     | 주요업무처리지침<br>(2005년 상반기 중) | 보상급여과<br>☎02)<br>2020-5172  |
| 4  | 외국국적 동포 유족찾기 추진       |                         | ○‘광복 60년 기념사업’과 ‘대통령 외국순방 후속조치’의<br>일환으로 외국국적동포 독립유공자 유족 등 우리처에서<br>직접 찾아서 보상금 지급                 | 재외동포법<br>(2005.1월)        | 보상급여과<br>☎02)<br>2020-5172  |
| 5  | 독립유공자 포상 확대           | ○매년 8·15 계기 150,200명 포상 | ○포상보류자 재심사 및 신규 발굴<br>○사료발굴·분석단 운영<br>※ 포상보류자도 자료 정리                                              |                           | 공훈심사과<br>☎02)<br>2020-5233)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6  | 보훈중앙병원 건립                 | ○KDI 예비타당성 조사실시로<br>타당성 인정                                                                                         | ○서울보훈병원을 3차 진료수행 첨단 보훈중앙병원으로<br>건립                                                                                   | 국가유공자등예우에<br>관한법률                  | 의료지원과<br>☎02)<br>2020-5282 |
| 7  | 위탁진료제도 운영                 | ○국가유공자 위탁진료 적정운영<br>방안 수립<br>○지역보건소 진료비 감면<br>- 부분시행                                                               | ○위탁진료비(약제비)의 심사평가원 심사위탁 시행<br>○지역보건소 진료비감면 확대 시행(124개소 → 235개소)<br>○건강관리협회와 연계하여 무료건강검진 계속 실시                        | 국가유공자등예우에<br>관한법률<br>(2005년 중)     | 의료지원과<br>☎02)<br>2020-5282 |
| 8  | 고엽제환자 등 의료지원 확대           | ○고엽제후유증 인정질병(13개)<br>○5·18부상자·고엽제환자<br>LPG 세금인상분 지원<br>- 미실시                                                       | ○고엽제후유증 질병 추가 인정(만성림프성백혈병)<br>- 13개 → 14개<br>○5·18부상자·고엽제환자 LPG 세금인상분 지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br>등지원에관한법률<br>(2005년 중) | 의료지원과<br>☎02)<br>2020-5283 |
| 9  | 중상이자 주택 편의 시설 지원          | ○상이자 주택편의시설 무상설치<br>: 미실시                                                                                          | ○거동이 불편한 12급 중상이자에게 핸드레일 등 주택<br>편의시설 무상설치 (400가구)                                                                   | 국가유공자등예우에<br>관한법률<br>(2005년 상반기)   | 복지지원과<br>☎02)<br>2020-5298 |
| 10 | 대부지원<br>(국가유공자 및 5·18유공자) | ○대부한도액<br>- 아파트 분양 : 1,200~1,500만원<br>- 주 택 임 차 : 1,300만원<br>- 주 택 개 랑 : 500만원<br>○대부인원<br>- 11,994가구 975억 5,000만원 | ○대부한도액 인상<br>- 아파트 분양 : 2,000만원<br>- 주택임차 : 1,500만원<br>- 주택개량 : 600만원<br>○대부인원 증원<br>- 총 13,940가구 1,200억원(증 1,946가구) | 국가유공자등예우에<br>관한법률<br>(2005년 상반기)   | 복지지원과<br>☎02)<br>2020-5295 |

| 번호 | 제 목             | 종 전                                                                                      | 달 라 지 는 내 용                                                                                                   | 관련법규<br>및 시행일                | 관계부서                         |
|----|-----------------|------------------------------------------------------------------------------------------|---------------------------------------------------------------------------------------------------------------|------------------------------|------------------------------|
| 11 | 제대군인 지원센터 기능 확대 | ○인원 : 9명<br>○기능<br>- 전문가에 의한 진로상담<br>-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취·창업 지원<br>- 제대군인지원 웹사이트 운영        | ○인원 : 21명(공무원 3, 민간전문가 18)<br>○기능 확대<br>- Job searching 등 취업지원기능 강화<br>- 지역군 부대 순회상담 신설<br>- 웹사이트 기능 활성화      | (2005년 중)                    | 제대군인취업과<br>☎02)<br>2020-5322 |
| 12 | 취업박람회 개최        | ○보훈가족 및 제대군인에게 취업의 장 마련 및 취업정보 제공을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br>- 11월 2930(2일간)<br>- 소요예산 : 1억 1,000만원 | ○기업체와의 만남의 장 제공을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br>- 채용관, 컨설팅관 등 운영, 언론을 통한 홍보 강화<br>- 2004년 개최결과와 연계하여, 참여자 폭 확대 및 참여 업체 다양화 추진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br>(2005.10월)  | 제대군인취업과<br>☎02)<br>2020-5321 |
| 13 | 제대군인 대부지원 내실화   | ○제대군인 대부이율 : 연 5%.                                                                       | ○제대군인대부이율 : 연 4%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법률<br>(2005.1월)    | 제대군인지원과<br>☎02)<br>2020-5333 |
| 14 | 보훈상담센터 설치       | ○시범운영 중(2004.10.4일부터)                                                                    | ○보훈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양질의 민원상담서비스 제공 및 업무효율성 제고                                                                       | 국가보훈처와 그소속기관 직제<br>(2005.7월) | 보훈상담센터<br>☎02)<br>2020-5361  |